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 · 러시아關係

1993. 10

許 文 寧(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 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要 約

第 I 章 序 論

본 연구는 북한의 대중·러관계에서의 변화와 지속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전망함으로써, 새로운 주변환경하에서 북한체제의 변화방향과 남·북한관계의 발전방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第 II 章 冷戰期 北韓의 對中國·蘇聯 關係

北韓의 對中·蘇關係 變遷史와 그 主要 特徵 그리고 이러한 변화과정에 영향을 미친 政治·經濟·軍事的 決定要因을 역사적 맥락에서 규명하면 다음과 같다.

1. 時期別 關係推移

첫째, 冷戰 深化期 (1948~1956) 북한은 소련의 영향권 안에 있는 공산국가들과의 관계가 거의 전부인 陣營外交에 머물렀다. 소련의 일방적 지원에 의해 북한정권이 수립됨으로써 1950년까지 소련의 대북영향력이 독점적이었으나, 한국전쟁에의 참전을 계기로

중국의 대북영향력 또한 증대됨으로써 1958년에 이르러 북한의 대중·소관계는 거의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둘째, 中·蘇 紛爭期 (1957~1968) 북한은 多邊外交 및 ‘자주의 교’로의 정책전환을 모색하였다. 특히 대중·소관계에 있어 북한은 초기(1957~1962) 中立期를 거쳐, 중기(1962~1964: 쿠바 미사일사건 이후 후르시초프의 실각시까지)에는 中國으로 偏向했으며, 말기(1964~1968: 브레즈네프의 등장이후)에는 蘇聯으로 偏向한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德탕트期 (1969~1978) 북한은 東西 德탕트시기의 도래와 달리 中·蘇 國境紛爭이 심화되자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는 「자주노선」을 표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및 선언과는 달리 북한은 실제로는 中國側에 다소 기운 가운데 實利外交를 추진하였다.

넷째, 新冷戰期 (1979~1987) 북한은 1980년 10월 제6차 黨대회에서 「자주·친선·평화」를 對外政策의 基本理念으로 표방하고, 체제발전을 위해 制限的 對外開放外交를 모색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대중·소관계에 있어 북한은 이 기간 초기(1979~1981)에는 중국에는 소원, 소련에는 밀착하였고, 중기(1982~1984)에는 중국에는 밀착, 소련에는 소원하였으며, 말기(1985~1987)에는 중국에는 평행, 소련에는 밀착하였다.

다섯째, 新德탕트期(1988~1991) 북한은 서울올림픽 개최이후 1989년부터 韓·蘇關係의 급진전과 동구 社會主義 國家들의 改革·開放 가속화에 따라 ‘국제혁명역량과의 연대’가 약화되는 한편, 만

성적 經濟難으로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혁명역량’마저 약화되자 體制維持를 위한 制限的 對外經濟開放外交를 다시 強化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가운데 중국이 천안문사태로 인하여 強硬 保守的 社會主義 路線을 지속하자 북한은 다시 중국으로 偏向하였다.

2. 主要 特徵

가. 展開過程의 特徵

첫째, 冷戰期 북한은 중국과 소련사이에서 自主性에 근거하여 等距離外交를 전개했다기 보다, 金日成 體制維持를 위해 2~5년의 간격을 두고 軍事同盟關係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계긴밀화와 소원화의 時計錘外交를 반복해 왔다.

둘째, 북한은 대중·소관계사에 있어 密着과 疏遠을 반복해 왔으나, 어떤 시기에도 어느 일방을 敵對國으로 몰고 다른 일방과 同盟을 맺는 외교정책을 전개한 적은 한번도 없다.

셋째, 북한은 비록 제한적이거나 중국과 소련에 대해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相對的 自律性을 증진시켜 왔다. 북한은 中·蘇紛爭과 中·소 牽引競爭을 이용하여, 중국과 소련의 대남한정책이 북한의 기본입장과 어긋날 경우 국가목표 및 이해관계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하였다.

넷째, 북한의 대중·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북방삼각관계는 소

련의 國力과 비례하여 변화되었다. 냉전체제하에서 ①소련의 패권이 강함시기 - 「소련주도하의 밀착된 북방삼각관계」 ②소련의 패권이 중국에 의해 도전받던 시기 - 「중·소분쟁하의 이완된 북방삼각관계」 ③소련의 패권이 쇠잔한 시기 - 「소련해체하의 붕괴된 북방삼각관계」로 변화되어 왔다.

다섯째, 북한은 김일성체제 유지를 위해 이데올로기와 實利를 양측으로 하여 對中·蘇政策을 전개하였으며, 그 비중은 이데올로기 중심에서 점차 實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 外交政策의 特徵

첫째, 북한의 대중·소정책은 中·蘇紛爭을 이용, 군사 및 경제 원조를 얻어 經濟發展과 安保를 확보하는 한편, 중국과 소련의 大韓國接近을 저지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북한은 韓半島 赤化統一의 基盤 造成을 위해 중국과 소련의 정치, 군사 및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에 장기적 정책목표를 두었다.

둘째, 중국의 대북한정책은 中·蘇紛爭의 상황가운데 소련과의 對北 牽引競爭을 지속하는 모습과 더불어 1980년대에 들어와 獨立自主外交路線의 차원에서 韓半島의 安定을 위한 對北 紐帶強化의 모습을 보였다.

셋째, 소련의 대북한정책은 극동에서의 전략적 평형유지 및 한반도에서의 힘의 안정을 위하여 남북한간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는 한편,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공고화에 기여하고

자 하였다. 이에 비해 최근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은 ① 한반도의 정치적 안정 ② 남북대화와 접근에 대한 협조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러시아에 우호적인 단일정부의 형성 ③ 남북한 정부와 상호이익이 되는 경제관계의 발전으로 요약된다.

다. 部門別 關係의 特徵

첫째, 북한과 중국의 정치적 관계는 ‘唇亡齒寒 關係’ 또는 ‘血盟 關係’로, 북한과 소련의 정치적 관계는 ‘社會主義 兄弟國’ 또는 ‘親善協調關係’로 규정되어진다.

둘째, 북한과 중·소간의 경제적 관계는 ‘社會主義 友好價格에 의한 求償貿易의 協力關係’ 규정할 수 있다. 북한의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관계는 중국과 소련의 북한에 대한 군사원조, 경제지원, 쌍무적 바터교역의 세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셋째, 북한과 중·소간의 군사적 관계는 1961년 7월 체결된 「조·중 우호, 협력 및 호상원조조약」과 「조·소 우호, 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에 따라 軍事同盟關係를 이루고 있다.

이와같은 부문별 관계의 특징을 종합해 볼 때, 冷戰期 북한·중국관계는 국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橫的 의존형태가 유지되었는 바, 사회주의적 경제교류 및 협력을 토대로 한 相互協力的인 血盟的·協力的 同盟關係(partnership alliance)로 규정할 수 있다. 반면에 북한·소련관계는 사회주의적 경제교류 및 협력을 토대로 한 점에 있어 북·중관계와 공통적이나, 약소국과 강대국간의 전형적

인 縱的 의존상태가 유지되었는 바 親分的·保護的 同盟關係 (protectorate alliance)로 규정할 수 있다.

3. 決定要因 分析

북한의 대중·소관계는 어느 한 국가의 일방적 접근에 의해 밀착·소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國際的 環境 가운데 兩國間的 相互理解關係와 必要性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주요 결정요인은 다음과 같다.

가. 國際環境的 要因

첫째, 美·蘇 兩極體制는 東北亞 北方三角關係의 형성 및 지속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된다. 북한의 대중·소관계는 미·소 양국간 대립이 지속되는 한 쉽게 붕괴할 수 없는 내재적 특징을 갖고 있다.

둘째, 中·蘇關係는 북한이 대중·소정책을 형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中·蘇 紛爭은 북한으로 하여금 양국으로부터 단합된 지원을 받기 어렵게 한 반면, 북한이 중·소 양국의 합의된 행동결정에 따라야 하는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고, 그 결과 북한은 이른바 自主路線이나 主體外交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나. 兩者的 要因

첫째, 政治的 決定要因으로는 양국의 이데올로기 親和力, 對外政策 路線上의 類似·相異性 여부, 韓半島 統一問題에 대한 태도, 政治體制 및 對內政策의 類似·相異性, 金正日 承繼體制에 대한 태도, 地政學的 要因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經濟的 決定要因으로는 對內·外 經濟政策(즉 社會主義 體制發展戰略)의 유사성·상이성, 양국간 援助의 增減與否, 兩者貿易의 활성화와 침체의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軍事的 決定要因으로는 양국간의 武器·裝備 등의 支援 여부, 양국 軍事政策(戰略)상의 갈등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이 요인들 가운데 1970년대 후반까지는 냉전체제 및 중·소분쟁의 심화로 인해 이데올로기 요인과 地政學的·戰略的 가치요인이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와서는 金正日 승계체제의 구축과정에서 이에 대한 政治的 承認與否要因과 中·蘇關係改善에 따른 經濟的 實利要因도 점차적으로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소련의 해체·동구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북한의 3대혁명역량의 전반적 약화 등 제반 변화사실들을 종합하여 예측해 볼 때, 脫冷戰期 북한의 대중·러관계는 金正日 體制에 대한 政治的 支持要因, 經濟的 實利要因, 戰略的 價値要因, 이데올로기적 同質性要因의 순서에 의해 영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第 III 章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變化

북한의 대중·러관계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세계·지역적 차원 및 양국간의 정치·경제·군사 분야의 현황과 추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決定要因 變化

가. 國際環境 要因의 變化

첫째, 「冷戰後期時代」(post-cold war era)에는 첫째, 양대 초강국의 위상과 軍事力の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減少하는 바, 이데올로기적 安保論理보다 경제적 實利論理가 국가들간의 관계설정에 있어 중요요인이 된다. 따라서 경제적 실리에 의해 형성되는 新國際秩序는 이데올로기 및 전략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北方三角關係의 根本的 變化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地域單位의 多者間 安保·經濟協力體制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접근과 노력들은 북한으로 하여금 전통적 북방삼각관계의 해체에 직면하여 開放政策을 심사숙고케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셋째, 中·러 關係改善의 增進은 冷戰의 北方三角關係의 根本的

變化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중·러간의 관계개선이 곧 북한에 대한 중·러간의 牽引競爭을 근본적으로 소멸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견인경쟁은 그 성격과 정도의 차이에 있어서 냉전시대의 정치·군사안보 전략적 이유에 근거한 절대적 경쟁에서 냉전후기시대의 경제안보 전략적 이유에 근거한 相對的 競爭으로 전환된 것이다.

나. 領域別 兩國爭點 要因의 變化

1) 政治的 次元

첫째,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러시아 '自由民主主義'와의 乖離化 및 중국의 '中國式 社會主義'와 疏遠化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북한 공산주의의 保守的 性向과 統制政策은 러시아의 反共產主義 性向과 開放政策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주의의 改革的 性向과 制限的 開放政策과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북한의 '制限的 對外經濟開放' 政策路線은 중국의 '全方位 對外開放' 政策路線 및 러시아의 實用主義的 對外政策路線과 비록 부분적이지만 유사한 점이 있는바, 북한의 양국과의 관계는 實利中心의 관계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넷째, 중국과 러시아는 對韓半島 政策으로서 平和維持와 影響力 確保의 목표하에 한국과의 관계증진을 공히 추진하고 있는바, 북한의 '하나의 조선'정책은 더이상 일방적으로 지지되기 어려운 상

황이다.

다섯째, 중국과 러시아에서의 改革指向의 人士들의 全面 浮上은 과거 김일성·모택동 및 김일성·스탈린간의 관계에서 보여주었던 양국 정치지도자간의 私的 紐帶와 이에 따른 國家的 聯帶가 더이상 같은 강도로 지속되기 어려울 것임을 예견케 한다.

2) 經濟的 次元

첫째, 社會主義 發展戰略에 있어 북한은 러시아와 달리 社會主義를 견지하고 黨의 領導를 확고히 보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권력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中國과 共通點을 가지나, 구체적인 경제정책과 노선에 있어서는 중국과도 差異點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의 社會主義 友好價格에 근거한 一方援助的 求償貿易 및 經濟協力을 지양하는 한편, 國際市場價格에 기초한 正常的 交流 및 經濟協力の 설정을 모색하고 있다.

3) 軍事的 次元

첫째, 북한의 核武器 開發疑惑에 대한 러시아의 단호한 반대입장과 中國의 ‘韓半島 非核化’ 지지입장은 현단계 북한의 대중·러 관계 疎遠化 要因이 되고 있다.

둘째, 韓·中修交 및 韓·러 基本條約의 체결에 따라 북한의 대중·러동맹조약은 조정단계에 들어갔으나 北·中間 軍事交流는 지속되고 있으며, 北·러間에도 새로운 軍事交流 및 協力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展望

가. 北韓의 對中國關係

1) 短期的 展望 (金日成 生存期): 協力的 同盟關係에서 保護的 同盟關係로의 漸進的 變化

북·중관계는 점차 과거의 「혈맹관계」 또는 「순치관계」로 표현되는 實質的 協力關係인 「協力的 同盟關係」에서 「우호관계」로 표현되는 象徴的 協力關係인 「保護的 同盟關係」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말해 40년 이상 지속되어온 북·중간의 혈맹적 유대관계는 한·중수교에 따른 약간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유지될 것이나, 북한의 대중혈맹관계 지속 의도에 반하여 점차 내용이 없는 명분과 관념적 관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2) 中·長期的 展望 (金日成 死後期): 保護的 同盟關係(軍事部門) 持續과 通常的 國家關係(政·經部門)로의 變化

中·長期的으로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심화됨으로써 북·중관계는 정치·경제측면에서 전통적 우호관계가 미약하게 잔존하는 가운데 通常的 國家關係로 變化가 예상되나, 군사적 측면에서는 保護的 同盟關係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北韓의 對러시아關係

1) 短期的 展望: 保護的 同盟關係의 瓦解와 經濟交流·協力の 回復

북·러관계는 현러시아 정부의 개혁정책에 불만을 가진 보수 군부가 쿠데타를 다시 일으켜도, 그리고 구공산주의자들의 혁명이 다시 성공하더라도, 현존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과 냉전 종식으로 인하여 세계질서가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과거처럼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에 근거한 軍事同盟의 密着關係 또는 協力的 同盟關係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러시아의 對韓半島 影響力 持續的 確保 및 亞·太에의 진출 추구정책과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現實適應的 政策의 결과에 따른 相互 必要性에 의해 점차 이데올로기적·군사적 영역중심의 同盟的 國家關係에서 정치·경제적 영역중심의 正常的 國家關係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2) 中·長期的 展望: 實利中心的 提携關係 形成

북·러관계는 中·長期的으로 東北亞 多者間 安保·經濟協力體에의 공동참여와 양자간의 군인사교류 및 무기구매를 중심으로 正常的 外交關係가 회복될 것이며, 나아가 양국 각각의 발전을 위해 실리중심의 提携關係를 만들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第Ⅳ章 關係變化가 北韓體制 및 南北韓 關係에 미칠 影響

1. 北韓體制에 미칠 影響

가. 金日成·金正日 體制에 미칠 影響

북·중관계의 弱化와 북·러관계의 惡化에 따라 김정일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는 과거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러 양국은 短期的으로 볼 때, 김일성·김정일 체제 및 김정일 후계체제의 붕괴를 유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전통적 친선관계를 고려할 것이며, 러시아는 북한체제의 몰락에 대한 대처능력의 실질적 한계를 고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中·長期的으로 볼 때, 중국은 김정일 체제에 대항하여 개혁주의 성향의 친중국 정권이 북한에 등장할 경우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또한 좌편향 이데올로기적인 김정일 체제의 지속보다 개혁지향적인 金正日 以後體制의 등장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나. 經濟難 解決에 미칠 影響

러시아·동구권과의 교역관계 회복이 어렵고, 중국과의 교역이 정체되고 있으며, 일본과의 경협이 지연되고 있는바, 向後 北韓 對

外貿易의 전망은 어두운 것으로 평가되며, 북한의 경제난 타결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短期的으로 북한의 경제난이 중국의 지원으로 인하여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이 핵무기개발 의혹불식의 조치와 대내 정치·경제개혁 및 대외신용도 제고의 조치를 선행하지 않고, 제한적인 대외경제개방 정책만을 추구할 때, 북한의 경제난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이 對西方 關係改善 및 對南經濟交流·協力과 對러시아 經濟交流 및 協力を 回復하게 될 경우 최악의 경제적 파국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이 북한이 경제난을 현상유지 차원에서 대처함으로써 短期的 生存을 지속할 경우, 중국의 4개 현대화정책의 성공에 따라 長期的으로 중국의 지원하에 중국식 경제발전 모델을 채택함으로써 경제난을 克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對外的 孤立 克服에 미칠 影響

북한은 革命과 이데올로기 路線을 탈피하고 보다 合理的·實用主義的 路線을 지향해야 하는 바, 지난 1980년대 후반 이후 제한적으로 추구해오던 대외개방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체제유지·경제난 해결·대외고립 탈피 등 3중과제의 일괄적 해결을 위해 첫째, 對美·日 수교교섭 강화, 對中·러 동맹관계 지속, 對南 교류·협력모색 등 3軌道 政策(three track policy)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들 국가와의 협

상에서 반대급부로 마땅히 줄 것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核武器開發과 地理的·戰略的 位置를 카드화 하여 冷戰期의 대중·소 ‘牽引競爭 誘發外交’를 발전시킨 ‘對五國(美·日·中·러·韓國) 誘引外交’를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대외적 고립을 탈피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핵사찰을 계속 拒否하는 등 핵문제에 대한 否定的 態度를 지속할 경우, 대외적 고립화와 경제난은 심화될 것이며, 나아가 東北亞地域에서 대규모로 추진중인 多者間 經濟協力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多者間 安保協力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어 동북아에서 戰爭을 촉발시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2. 南北韓 關係에 미칠 影響

가. 南北韓 平和共存의 制度化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대북 ‘邊方外交’와 대남 ‘實利外交’의 등거리정책이 단기간내에 대폭 변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러한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남북한간의 평화공존을 촉진시킬 것이다.

한편 러시아의 경우, 현재 열친 현정부의 존립조차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바, 한반도문제에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형편이므로, 단기적으로는 남북한관계가 개선되고 긴장이 완화되는 것

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으나, 남북한이 통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러시아는 국력이 어느정도 회복될 경우,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개발과 동북아 다자간 안보·경제협력에의 참여 및 아·태로의 적극적 진출을 위해서는 한반도에 통일국가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에 적극적 후원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南北統一에의 影響

북한의 대중·러관계 弱化는 북한이 對南武裝革命 攻勢를 전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抑制要因은 되나, 북한이 남북한 合意統一에 적극적으로 나오게 하는 촉진요인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短期的으로 볼 때, 남북한관계는 改善될 가능성이 높으나, 남북통일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中·長期的으로 볼 때,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체제가 現實適應的 改革·開放路線을 지향하여 나가면 남북한간의 합의에 따라 段階的·漸進的 統一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종전의 이데올로기적 強硬路線을 지속한다면, 김일성 사후 북한체제의 붕괴에 따른 한국주도하의 吸收統一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크다.

第 V 章 結論：韓國의 政策的 考慮事項

한국은 위와같은 북한의 대중·러관계의 변화 및 이에 따른 북한체제·남북한관계 발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노선과 대응정책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基本路線으로서는 첫째, 新國際秩序에의 能動的 參與를 토대로 平和統一 環境造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 정책은 ‘對中·러 全方位外交’와 ‘對美 自主外交’ 및 ‘對亞·太 經濟·安保協力外交’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 통일외교 원칙인 1988년 7·7宣言에 보다 충실하며, 신정부의 ‘3段階 3基調 統一政策’ 부응한 대북한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對北政策方向은 북한내 개혁지향적 세력의 입지를 강화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인 바, 北韓의 自主的 體制發展에 대한 協力과 支援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 인 정책원칙으로는 先和解 後應報戰略 또는 段階的 對應戰略을 채택하여 실천해야 할 것이다.

對北政策은 北韓의 自主的 體制發展에 대한 協力과 支援이 그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인 바, 政治的 측면에서 볼 때, 첫째, 한국은 과거 냉전적 대북정책을 벗어나, 北韓의 自主的인 體制發展에 協力함으로써 統一以後 民族統合에 대비해 나가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방삼각관계와 남방삼각관계의 대결적 구도에 대한 근본적 조정을 민족이익의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

야 할 것인 바, 그 일환으로서 우리의 統一大綱에 근거하여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에 적극 협조하는 전향적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은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이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는 한편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 남북한 양당사자간의 내부분제로 인식하고 불개입원칙을 표명하고 있는 바, 한국으로서는 북한과의 直接對話 및 交流·協力을 持續的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經濟的 측면에서 볼 때, 첫째, 대만 및 일본의 대북 경제적 접근에 유의하면서 국제핵사찰 및 남북한 상호사찰을 段階的 條件化한 남북경제교류 및 협력강화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폐쇄적 유일체제특성을 감안하여 북한이 진전하는 만큼 경제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우리의 대응도 진전하는 先導的·段階的·漸進的 協力(step by step cooperation)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의 대북 경제정책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북한기업 또한 살리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남북통일시 치러야 할 統一費用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短期的으로는 남한 기업의 북한에 대한 委託加工의 활성화, 中期的으로는 원유공급의 남북경협 協商手段化와 중소기업의 部品工業分野의 대북한 소규모투자 지원을 통한 남북경제의 상호보완적 협력유도, 長期的으로는 대기업의 基幹産業投資의 정부통일방안과 상호조정하에 추진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軍事的 측면에서 볼 때, 첫째, 북한을 현재 논의중인 亞·太 安保協力機構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북한체제에 대

한 한국의 보장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남북한 평화공존체제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냉전체제의 해체 흐름에 부응하는 새로운 대북안보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상대측의 領土에서 승리를 목표로 하는 '絶對安保' 개념에 근거한 政策에서 適正 軍事力을 유지하며 전향적으로 협조·지원하는 가운데 상호간의 共存을 모색하는 '相對的 共同安保' 개념에 근거한 政策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셋째, 그러나 우리의 의도와 달리 북한이 군사력 제1주의에 입각한 군비증강을 계속 시행할 경우, 우리로서는 양적 대응보다는 質的 對應이 필요한 바, 軍需와 民需에 동시 사용가능한 과학·기술분야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의 핵문제 해결은 가장 강력한 상호핵사찰 방식보다 相互信賴 構築이 가능한 方式을 우선적으로 채택하여 段階的으로 強度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目 次

第 I 章 序 論	1
1. 研究 目的	1
2. 研究 方法	2
第 II 章 冷戰期 北韓의 對中國·蘇聯 關係	6
1. 時期別 關係推移	6
가. 冷戰 深化期 (1948~1956)	6
나. 中·蘇 紛爭期 (1957~1968)	10
다. 데탕트期 (1969~1978)	13
라. 新冷戰期 (1979~1987)	15
마. 新데탕트期 (1988~1991)	18
2. 主要 特徵	19
가. 展開過程의 特徵	19
나. 外交政策의 特徵	21
다. 部門別 關係의 特徵	26
3. 決定要因 分析	30
가. 國際環境의 要因	30
나. 兩者의 要因	32
다. 綜合評價	43

第 III 章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變化.....46

1. 決定要因 變化.....46
 - 가. 國際環境 要因의 變化.....46
 - 나. 領域別 兩國爭點 要因의 變化.....50
2. 展望.....88
 - 가. 北韓의 對中國關係.....90
 - 나. 北韓의 對러시아關係.....96

第 IV 章 關係變化가 北韓體制 및 南北韓 關係에
미칠 影響.....102

1. 北韓體制에 미칠 影響.....102
 - 가. 金日成·金正日 體制에 미칠 影響.....102
 - 나. 經濟難 解決에 미칠 影響.....106
 - 다. 對外的 孤立 克服에 미칠 影響.....110
2. 南北韓 關係에 미칠 影響.....113
 - 가. 南北韓 平和共存의 制度化.....113
 - 나. 南北統一에의 影響.....115

第 V 章 結論：韓國의 政策的 考慮事項.....117

參考文獻.....123

附 錄.....131

第 I 章 序 論

1. 研究 目的

兩極的 冷戰期 한반도를 둘러싼 東北亞 地域秩序의 특징은 二重 三角關係(two-triangle system)로 규정될 수 있다. 한국전쟁 발발이 후 한국과 미국의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1953.10.1), 미국과 일본의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체결(1960.1.19), 한국과 일본의 「한·일 기본조약」 체결(1965.6.22)로 한반도의 남쪽에는 南方三角關係가 형성되었다. 반면 북쪽에는 중국과 소련의 「중·소 우호동맹 및 상호원조 조약」 체결(1950.2.14), 북한과 소련의 「조·소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 체결(1961.7.6), 북한과 중국의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 체결(1961.7.11)로 연결되는 北方三角關係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소련의 해체에 따른 脫冷戰期の 도래와 韓·러, 韓·中 修交로 인하여 전통적 북방삼각관계는 變化하고 있다. 반면에 政治·經濟·軍事·地理的 要因 등으로 인하여 전통적 북방삼각관계가 持續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보고자 한다.

- 1) 북한의 대중국·소련관계는 어떤 決定要因들에 의하여 언제 밀착·소원하게 되었는가?

- 2) 북한의 대중국·러시아 관계는 한·러, 한·중수교이후 어떠한 상황에 있으며, 향후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 3) 이러한 북한의 대중국·러시아 관계의 변화는 향후 북한체제 및 남북한관계에 어떠한 影響을 미칠 것인가?
- 4)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이루기위해 한국은 어떠한 對應政策을 세워야 할 것인가?

요컨대, 본 연구는 북한의 대중·러관계에서의 變化 現況과 展望을 분석·예측하는데 1차적 목적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북한의 대중국 및 러시아 관계 변화가 북한체제 및 남북한관계에 미치는 影響을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여 한반도상의 평화체제 형성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한국의 對應政策을 모색하는 데 2차적 목적이 있다.

2. 研究 方法

國際關係를 설명하는 시각에는 行爲主體(acter)를 國家로 한정하는 現實主義(realism)와 국제기구·다국적 기업 등 非國家 行爲者를 포함하는 多元主義(pluralism),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 뿐만 아니라 階級·社會 등을 포함하는 世界主義(globalism)가 있다.¹⁾ 그런

1) Paul R. Viotti and Mark V. Kauppi,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New York: Macmillan, 1987), pp. 5~14.

데 북한을 위시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가중심모델에 기초한 현실주의적 설명을 거부하고, 階級에 기초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兄弟愛 즉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proletariat internationalism)을 강조한다. 따라서 자유진영 국가들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서구적 모델로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관계인 북한의 대중·소(러)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국제질서가 공고한 냉전체제에서 느슨한 냉전체제로 변화되고, 나아가 탈냉전체제로 변화됨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들도 이해관계가 상호간에 상충될 경우 점차적으로 이데올로기보다 國家利益 확보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은 예외일 수 없다. 더욱이 북한·중국·소련의 全體主義的 共產主義 특성을 고려할 때, 國家中心的 現實主義 視角은 북한의 대중·소(러)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유용한 분석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양국관계는 일반적으로 외교정책들의 相互過程(interaction)에서의 調和와 葛藤에 따라 密着·疎遠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북한의 대중·러관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국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야 한다. 외교정책 결정요인에 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여러가지 분석틀을 제시하여왔다.²⁾ 그러나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합

2) James N. Rosenau, "Pre-Theories and Theories of Foreign Policy," *The Scientific Study of Foreign Policy* (New York: Nicholas Publishing Co., 1980), pp. 128~29; Patrick J. McGowan & Howard B. Shapiro, *The Comparative Study of Foreign Policy* (Beverly Hills: SAGE, 1973),

의된 보편적 틀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정책 결정요인들은 크게 國際環境要因과 國內環境要因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북한의 대중·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환경요인을 세계적·지역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국내환경요인을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차원과 國家目標 및 政策決定者의 認識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1950년대 이후 1989년 냉전체제 붕괴 이전시기까지의 북한의 대중·러관계 변화의 특징을 밀착과 소원의 측면에서 결정요인을 규명한다. 그리고 현재 북·중, 북·러간의 쟁점사항 및 결정요인들의 현황을 토대로 향후 양국간의 발전방향을 예측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의 대중·러관계는 각기 정치·경제·군사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는 바, 본 논문에서는 정치적 측면에서는 政治·이데올로기적 聯帶와 傳統的 紐帶의 변화와 지속 유무를, 경제적 측면에서는 (社會主義) 經濟協力の 변화와 지속 유무를, 군사적 측면에서는 軍事同盟條約의 변화와 지속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II장에서는 冷戰期 北韓의 對中國·蘇聯關係에서 密着·疎遠의 變化에 대한 時期的 區分과 더불어 이에 影響을 미친 要因이 무엇인가를 分析해 낸다. III장에서는 이 결정요인들의 現況과 傾向性을 먼저 살펴보고, 이를

pp. 40~50; Michael Brecher, *The Foreign Policy System of Israel: Setting, Images, Process* (London: Oxford Univ. Press, 1972), pp. 2~14.

토대로 하여 脱冷戰期 北韓의 대중·러관계 變化方向과 樣相을 展望한다. IV장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대중·러관계 변화가 北韓體制 및 南北韓關係와 統一에 미칠 影響을 분석한다. V장에서는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한 韓國의 對應政策을 모색하는 데, 실현가능성이 낮은 극적 제안보다, 남북한간의 점진적 相互協力과 중국과 러시아의 남북평화통일에 대한 기여를 유도할 수 있는 조치들을 중심으로 강구하고자 한다.

第 II 章 冷戰期 北韓의 對中國·蘇聯 關係

북한과 중국 및 소련은 冷戰의 국제질서 가운데 戰略的 國家目標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대내·외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密着 및 疏遠한 관계를 반복하여 왔다. 이에 이 장에서는 북한의 대중·소관계 전개과정을 국제질서의 변화와 연관시켜 시기별로 간략히 정리한 후, 그 주요 特徵과 決定要因들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1. 時期別 關係推移

북한의 대중·소관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 국가들간의 관계가 어떠한 결정요인들에 의해서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항에서는 북한의 대중·소관계 변화에 영향을 미친 국제적 요인 및 양자적 요인이 정치·경제·군사적 차원에서 무엇이었는가를 역사적 맥락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가. 冷戰 深化期 (1948~1956)

북한은 이 기간을 ①민주건설(공화국창건 이후)시기 ②조국해방전쟁 시기 ③사회주의 기초건설 시기로 구분하고, 제1기에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 건설'과 '국제민주진영나라와의 친선협조관계 발

전' 및 '미제의 도발책동 폭로·분쇄'를 위한 대외활동을, 제2기에 '미제 고립' 및 '세계 진보적 인민과의 련대성 강화' 와 '정전담판 승리'를 위한 대외활동을, 제3기에 '정전 승리' 및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의 공고화와 '반제민족해방투쟁 지지·성원'의 확보를 위한 대외활동에 전념했던 것으로 주장한다.³⁾

그러나 사실상 北韓은 이 기간 소련의 영향권 안에 있는 공산국가들과의 관계가 거의 전부인 陣營外交에 머물렀다.⁴⁾ 특히 북한의 대중·소관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韓國戰爭 以前時期까지 蘇聯에 대해 絶對的 依存關係를 유지한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계가 없이 지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정권창출이 소련의 일방적 지원하에 이루어졌고, 북한의 통치조직 및 경제구조의 거의 모든 부문이 소련관리나 고문단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전형적인 소련 위성국가의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중국은 당시 국민당과의 내전 및 정권수립에 몰두하여 북한에 관심을 쏟을만한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⁵⁾

3) 박태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참조.

4) 이 시기 북한의 수교국은 소련·중국·동구제국 등 12개국에 불과하였으며, 북한은 전전 국가승인외교, 전시 동원외교, 전후 복구외교에 주력하였다.

5) 북한의 대중국관계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양국은 1953년 11월에 「朝·中 經濟文化協助協定」을 체결하기 이전까지 大使의 相互交換은 물론 외교교섭을 위한 常設機構조차 설치하지 못하고 있었다. 鄭鎭渭, 「北方三角關係」 (서울: 法文社, 1985), pp. 17~20.

이 시기 북한은 주로 소련의 경제원조와 기술지도에 의해 경제 건설을 추진하였고⁶⁾, 그 결과 貿易도 對蘇一邊倒로 전개되었다.⁷⁾ 북한은 대외군사관계에 있어서도 1949년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후 다량의 무기를 소련으로부터 공급받음으로써 對蘇一邊倒의 모습을 보여주었다.⁸⁾

그러나 북한은 韓國戰爭 以後 다소 일변도적 관계를 벗어나 中國과의 關係를 強化해 나갔다.⁹⁾ 중국은 한국전 당시 패망의 위기에 처해있던 북한을 적극 지원하였고, 휴전체결이후 1958년까지 군대를 주둔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한 影響力과 發言權을 증대시켰다.¹⁰⁾ 반면에 소련은 1953년 3월 스탈린의 사망과 그에 따른 소련 정치

6) 1946년 3월 17일 김일성 방소시 「장기경제문화협정」 체결 및 1949년 3월 「朝·蘇 경제·문화협정 및 차관협정」 체결을 통하여 2억 1200만루블의 차관을 도입하였다. 朴春三, 「北韓의 對外經濟協力」, 「北韓의 對外關係」(서울: 大旺社, 1987), p. 307.

7) 1946년의 경우 90%가 소련과의 무역이었다. 나타리아 바자노바, 梁浚容 역, 「岐路에 선 北韓經濟」(서울: 韓國經濟新聞社, 1992), p. 92.

8) 白鍾天, “군사: 일관된 전력우위 유지정책,” 「北韓 40년」(서울: 乙酉文化社, 1989), p. 394.

9) 북·소관계는 1949년 3월 체결한 「경제·문화협조협정」에 기초를 두고 확대되었는데 당시 전체무역량 가운데 대소비중이 1950년 경우 3/4를 상회하였다. 한편 북·중관계는 1953년 11월에 맺은 「경제·문화협조협정」에서 시작되었는데, 교역량은 1955년의 9%에서 1957년 27.3%로 증가하였다.

10) 중공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양국은 피로써 공고화되고 끊을 수 없는 군사적 우호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인민일보」, 1953.10.25.

지도층의 내분 및 1956년 2월 후르시초프에 의한 스탈린 格下運動과 서방과의 平和共存 옹호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대소신뢰를 약화시켰다. 이에 북한의 김일성은 1955년 12월 이른바 ‘주체’를 표방함으로써¹¹⁾ 대내적으로 연안파와 소련파를 제거하고 권력을 강화하였고, 대외적으로 소련에 대한 비판적 태도와 중국의 대서방 강경노선과 경제정책을 지지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 시기 북한은 대외경제관계에 있어 소련으로부터 1억 6200만 루블을 無常援助 받아 북한경제의 재건을 대체로 이루었다.¹²⁾ 한편 한국전쟁을 계기로 북한에 경제·군사원조를 시작한 중국은 국내 경제사정 악화로 인하여 전후무역을 축소시켜 나갔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무역 대상국에서 中國의 相對的 比重은 절대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增加하였다.¹³⁾ 대외군사관계에 있어 북한의 대소밀착 및 중주관계는 소련의 지속적 지원으로 근본적 변화가 없었으나, 중국군이 한국전쟁 참전이후 계속 주둔함으로써 중국의 영향 또한 증대되었다.

요컨대 蘇聯의 일방적 지원에 의해 북한정권이 수립됨으로써 1950년까지 소련의 對北 影響力이 독점적이었으나, 한국전쟁에의

11)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1955.12.28),” 「김일성선집 4권」 2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pp. 325~54.

12) 공업생산은 전쟁전인 1949년 수준을 넘어섰고, 20개의 공장이 복구 또는 신축되었다. 바자노바, 「岐路에 선 北韓經濟」, pp. 23~24.

13) 國土統一院, 「北韓經濟統計集 (1946~1985)」 (서울: 國土統一院 1986), pp. 735, 743 참조.

참전을 계기로 중국의 대북 영향력 또한 증대됨으로써 1958년에 이르러 북한의 대중·소관계는 거의 均衡을 이루게 되었다. 이 기간 북한의 대중·소관계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으로서는 북한체제에 대한 소련 및 중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지지 및 지원여부, 소련과 중국의 대서방 평화공존 옹호정책의 추진여부 등을 들 수 있다.

나. 中·蘇 紛爭期 (1957~1968)

북한은 1960년대를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시기’로 규정하고, “사회주의 나라들의 통일을 강화하며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대외활동”과 “국제적인 반제공동투쟁을 강화하며 조국의 안전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대외활동”에 전념했던 것으로 주장한다. 특히 이 기간에 “사회주의 나라들의 통일을 강화하고 친선협조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며 전체 사회주의 나라들을 옹호하여 투쟁하는” 대외방침을 설정한 것은 “사회주의 나라들 사이에 발생한 의견상이를 극복하고 사회주의 나라들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강화할 수 있는 정당한 방침”이었다고 주장한다.¹⁴⁾

그러나 북한은 中·蘇紛爭이 첨예하게 대두한 이 기간에 多邊外交¹⁵⁾ 및 ‘自主外交’¹⁶⁾로의 정책전환을 모색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14) 박태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2)」(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pp. 1~10.

대중·소관계에 있어 북한은 초기(1957~62) 中立期¹⁷⁾를 거쳐, 중기(1962~64: 쿠바 미사일사건 이후 후르시초프의 실각시까지)에는 中國으로 偏向했으며,¹⁸⁾ 말기(1964~68: 브레즈네프의 등장 이후)

-
- 15)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신생독립국 29개국이 참가한 반동회의(1955.4)에서 平和5原則이 발표되었고, 후르시초프가 평화공존정책을 거론하자(1956.3) 북한은 노동당 제3차대회(1956.4)에서 多變外交로의 정책전환을 모색하였다. “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나라들과의 평화공존에 대한 레닌적 원칙을 견지하며 자주권의 호상 존중과 평등권에 입각하여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국가들과의 정치적 및 실무적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여야겠습니다.”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 사업총결보고(1956.4.23),” 國土統一院, 「朝鮮勞動黨大會 資料集 第1輯」(서울: 國土統一院, 1988), p. 293.
- 16) 북한은 중·소분쟁이 더욱 첨예해지자, ‘내정불간섭과 상호평등’을 표방한 ‘자주노선’을 선언하고(「로동신문」, 1966.8.12. 사설 “자주성을 옹호하자,”), 이를 당대표자회의(1966.10.5)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김일성, “현 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조선중앙통신사편, 「조선중앙년감 1966-1967」(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7), pp. 100~30.
- 17) 중·소분쟁은 북한의 대중·소관계 약화와 더불어 북한의 운신에 제약을 가하였다. 중·소와 모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북한으로서는 평화공존론을 강조하는 소련과 계급투쟁 및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중공의 틈에서 조심스럽게 처신할 수밖에 없었다. 全寅永·申正鉉·白鍾天, 「北方三角關係의 變化와 韓國의 政策方向」(서울: 慶熙大 國際平和研究所, 1988), pp. 11~13; 1960년 6월말 부카레스트 회의에서 소련과 중공의 공개적 상호비난사태 발생시 북한은 중립적 입장을 취했으며, 1961년 제22차 소련공산당 대회에서도 알바니아와 달리 북한은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중·소분쟁이 악화됨에 따라 북한의 중립적 위치는 점차 힘들게 되었다.

에는 蘇聯으로 偏向한 것으로 분석된다.¹⁹⁾

이 시기의 증반무렵 북한으로 하여금 親中國으로 기울어지게 한 요인들로서는 첫째, 스탈린 격하정책과 평화공존정책을 전개하는 소련보다는 戰鬥的인 中國에 대한 호감, 둘째, 1962년 쿠바사태 및 中·印 국경분쟁에서 소련이 취한 投降主義的 행동 및 애매한 親印度的 행동에 대한 不信,²⁰⁾ 셋째, 중국의 활기찬 제3세계외교에 편

- 18) “중국공산당과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저해하는 것이며 국가에는 대·소가 있으나, 당에는 고·저가 있을 수 없으며 어느 당도 형제당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되며 일방적인 의사를 강요하거나 형제당을 비방해서도 안된다.”는 강경한 논조의 對蘇非難을 가함으로써 북한은 親中路線을 분명히 하였다. 이후 1963년 10월 28일 「로동신문」 사설 “사회주의 진영을 수호하자”에서 소련의 중국고립정책을 맹렬히 비난하는 한편, 소련이 경제·군사원조를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중지를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64」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4), pp. 115~31.
- 19) 1966년 8월 12일 「로동신문」 사설 “자주성을 옹호하자”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방어적 자세를 보여주는 바, 북한은 당관계에서 북한의 주체적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는 한편, 월남전과 관련하여 중국의 소극적 태도를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의 공동행동과 통일전선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자신의 親蘇立場을 변호하였다.
- 20) 이때 북한은 1962년 12월 제4기 제5차 당중앙위 회의에서 經濟建設과 國防力 強化의 並進政策을 결의하고, 경제면에서 自力更生 (1962년말부터 소련의 대북한원조가 중단되었기 때문)과 군사면에서 自主路線을 강조하였는 바, 이후 북한은 자연스럽게 중국쪽에 기울게 되었다.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63」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3), p. 158.

승하여 자신의 외교망을 확대하고자 하는 계산, 넷째, 북한의 經濟發展 모형의 蘇聯型으로부터 中國型으로의 전환 등을 들 수 있다.²¹⁾

이후 末期에 북한으로 하여금 親蘇聯으로 기울어지게 한 要因으로는 첫째, 美國의 越盟爆擊 개시 및 韓·日 國交正常化, 둘째, 中國의 경제원조능력 한계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文化大革命 당시 홍위병들의 김일성에 대한 대대적 비난,²²⁾ 셋째, 후르시초프의 失脚 및 브레즈네프, 코시킨 등 새로운 소련 지도자의 登場과 이에 따른 對北 軍事援助 및 경제지원의 증가²³⁾ 등을 들 수 있다.

다. 데탕트期 (1969~1978)

북한은 1970년대를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시기’로 설정하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조

21) 중국이 1958년 여름 人民公社制度和 大躍進運動을 전개하였는데, 북한은 이 방식을 즉각(9월) 모방하여 협동농장의 제도적 개편과 천리마운동을 전개하였다. 물론 천리마운동에 대한 당중앙위 협의는 1956년 12월에 있었지만 이의 구체화는 중국의 대약진운동이 나온뒤 시작되었다.

22) 全寅永 교수는 이 시기 북·중관계의 냉각은 中國 國內狀況의 혼란스러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文革 이후 중국의 안정회복과 周恩來의 평양방문(1970.4.5~7)으로 인해 양국관계가 다시 공고해진 것으로 본다. 全寅永 外, 「北方三角關係의 變化와 韓國의 政策方向」, pp. 11~13.

23) 1964.10. 후르시초프의 실각, 1965.2. 코시킨 수상의 평양방문, 1965.5. 소련과 북한 「군사원조협정」 체결, 1966.6.20. 「기술 및 경제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국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대외활동”에 치중했던 것으로 설명한다. 이를 위해 “제국주의자들의 침해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키고 사회주의력량의 통일과 단결,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으며²⁴⁾ 특히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에 의하여 형제적 친선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인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를 “자주성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좋게 발전시킨”것으로 주장한다.²⁵⁾

1969년 美國의 닉슨독트린 宣言 및 대소련 긴장완화 시도와 동북아에서의 일본의 정치적 역할을 중시하는 닉슨-사토 共同聲明 등으로 인해 동서간에는 데탕트 시대에 들어서는 반면 중국과 소련간에는 國境紛爭이 심화되자 북한은 어느쪽에도 편향되지 않는 自主路線을 표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주장 및 선언과 달리 실제로는 中國側에 다소 기운 가운데 實利外交²⁶⁾를 추진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기간 북한으로 하여금 친중국으로 기울어지게 한 요인으로는

24) 박태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2)」, p. 85.

25) 김일성은 사회주의 나라들 사이의 통일단결을위한 4대원칙으로서 “첫째, 제국주의를 반대, 둘째, 식민지 민족해방운동과 국제노동운동을 지지, 셋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 계속 전진, 넷째, 내정불간섭, 호상존중, 평등과 호혜의 원칙 기초하에 단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위의 책, pp. 88~89.

26) 북한은 당중앙위 제5기 제3차 전원회의(1971.11)에서 실리외교를 정책노선으로 채택하였다. 김일성, “국제정세에서 제기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72」(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2), pp. 269~70.

첫째, 東西和解로 표출되는 소련의 平和路線과 이에 적응할 수 없는 북한의 革命路線의 갈등, 둘째, 문화혁명을 종결짓고 정상적인 외교활동을 다시 강화하는 中國의 대북한 接近政策, 셋째, 毛澤東과 金日成의 유사한 세계관과 더불어 개인적 유대감, 넷째, 중국과 북한 모두 소련보다 後進的 發展體制이자 1인 長期執權體制, 다섯째, 1975년 4월 베트남의 共產化에 따른 국제혁명역량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²⁷⁾

라. 新冷戰期 (1979~1987)

북한은 1980년대에도 1970년대에 이어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시기가 계속되는 것으로 설정하고,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 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대외활동”에 치중했던 것으로 설명한다. 북한은 이 시기 “공화국의 대외활동방침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친선과 단결, 협조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 및 소련·동구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데 우선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설명한다.²⁸⁾

27) 북·중관계는 1969년 4월 9차 중국 당대회와 1969년 말 문화혁명 종료와 때를 같이하여 점차로 개선되었다.

28) 박태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2)」, pp. 220~34.

북한은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자주·친선·평화」를 對外政策의 基本理念으로 표방하였는데,²⁹⁾ 이는 공산국가와의 단결강화를 지속하는 한편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국가와도 친선관계를 맺겠다는 의도였다. 따라서 이 기간 북한은 체제발전을 위해 制限的 對外開放外交를 모색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대중·소관계에 있어 북한은 이 기간 초기(1979~81)에 中國에는 疎遠,³⁰⁾ 蘇聯에는 密着하였고,³¹⁾ 중기(1982~84)에는 中國에는 密着, 蘇聯에는 疎遠하였으며, 말기(1985~87)에는 中國에는 平行, 蘇聯에는 密着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기간 초기에 북한이 親蘇聯으로 기울게 된 이유는 첫째, 對美政策과 體制 및 路線上의 북한과 중국의 대립,³²⁾ 둘째, 中國의 對

29) 김일성,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81」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1), pp. 65~66.

30) 1976년 9월 모택동 사망, 1978말 베트남에 의한 캄보디아 침공, 1979년 2월 중·월전쟁 등은 중·소관계를 크게 긴장시켰으며, 북한의 입장은 압박받게 되었다. 1979년 12월 소련의 아프간침공은 중·소관계를 악화시키고 미·중 군사협력을 촉진시켰다.

31) 鄭鎭渭 교수는 이 기간(1978~81) 북한이 대중·소 등거리정책을 전개한 것으로 보며 그 동기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첫째, 대남 혁명노선에 대한 중국의 지지확보, 둘째, 대미직접교섭 및 서방의 선진기술·자본을 중국을 통해 간접도입 기대, 셋째, 정치·경제·군사·기술분야 지원 및 적화통일에 대한 소련의 확고한 지지 확보. 鄭鎭渭, 「北方三角關係」, p. 180.

32) 1978년말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을 무력침공한 반면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일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북한은 친중국정책에서 탈피하는 한편 적극적 관계개선 의사를 표명해오던

韓國 間接通商 실시 확대, 셋째, 蘇聯의 北韓 統一政策(駐韓美軍撤收 등)에 대한 적극 支持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1981년 이후 북한은 대내외적 당면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과 유대강화를 다시 시도하고, 중국도 정치·전략적 필요성에서 대북관계의 강화에 주력함으로써 북·중관계는 다시 긴밀화되기 시작했다.

북한이 다시 親中國으로 기울게 된 이유는 첫째, 兩國의 대내외적인 必要性(북한의 경우 김정일 권력승계, 경제침체, 군사원조 등 내부문제 해결의 필요성, 중국의 경우 인접국가인 캄보디아, 베트남, 아프가니스탄의 친소화 경향으로부터 북한의 격리 필요성),³³⁾ 둘째, 1981년 이후 蘇聯의 對韓 柔和政策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1985년 이후 북한은 다시 소련과 밀착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1984년 일본의 나카소네 수상과 레이건 미대통령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美·中·日 三角協助體制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한·중간에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교류가 확대됨으로써 蘇聯과 北韓이 對外的 孤立感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1983년 9월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과 10월 북한의 버마 암살폭파사건으로 인해 국제적 비난에 봉착하게 되자, 소련과 북한은 서로의 난처한 입장을 옹호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소련은 북한의 김정일 권력승

소련과 관계를 강화하였다.

33) 그결과 대미정책 및 김정일 권력승계에 대한 양국간의 양해와 중국의 대북 경제·군사지원 증대로 말미암아 양국관계는 다시 긴밀화되었다. 위의 책, p. 188.

계를 묵인하고 군사·경제지원을 강화하고, 이에 1984년 5월 金日成은 소련을 23년만에 公式訪問하고 1986년 10월 재방문함으로써, 양국관계는 다시 긴밀하게 되었다.³⁴⁾

이러한 양국의 ‘밀월’관계는 고르바초프의 1988년 9월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이 발표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 北韓과 中國의 관계 또한 빈번한 수뇌회담을 통하여 密接한 關係를 유지하였다.³⁵⁾

마. 新데탕트期 (1988~1991)

서울올림픽 개최이후 1989년부터 韓·蘇關係가 급진전되고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改革·開放이 가속화되어 ‘국제혁명역랑과의 연대’가 약화되는 한편, 만성적인 經濟難으로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34) 북한은 50대에 가까운 MIG-23기들과 지대공 미사일을 공급받고,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등 상당한 경제원조를 확보하였고, 소련은 공군기들의 북한영공통과권과 함정들의 북한항구 이용권을 확보하였다. 단 소련의 정책은 이시기 무조건 북한원조가 아니라, 1986년 7월 28일 블라디보스톡 연설문에서도 ‘현실을 인정하는’ 현상 유지정책이 강조된 것처럼, MIG-23제공은 F-16기와 균형을 맞추는 선에서, 원자로 건설지원은 NPT가입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全寅永 外, 「北方三角關係의 變化와 韓國의 政策方向」, pp. 17~18.

35) 이러한 관계로 1983년 6월 김정일의 비공식 방중, 김일성의 비공식 방중, 1984·1985년 호요방의 비공식 방북, 이선념 국가주석의 방북 등을 들 수 있다.

혁명역량'마저 약화되자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制限的 對外經濟 開放外交를 다시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가운데 중국이 천안문사태로 인하여 강경 보수적 사회주의 노선을 지속하자, 북한은 다시 중국으로 편향하였다.

이 기간 북한으로 하여금 親中國으로 기울어지게 한 요인은 첫째,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이 북한의 폐쇄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주의 진영의 전반적 해체와 천안문사태를 겪은 중국이 안팎의 도전에 대해 단호히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것이 1인독재체제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북한의 이해관계와 맞물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 主要 特徵

이상에서 분석된 북한의 對中·蘇關係 變遷史를 토대로 그 主要 特徵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展開過程의 特徵

첫째, 북한은 時計錘 外交를 전개해 왔다. 북한은 冷戰體制下에서 대중국·소련관계를 밀접히 하면서 陣營外交를 추진하여 安保를 확보하는 동시에, 中·蘇紛爭 상황하에서 명목적으로는 主體性을 추구하는 自主外交를 내세우고 실제에 있어서는 金日成 政權의

鞏固化를 추구해 온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말해 북한은 지난 40년간 중국과 소련사이에서 自主性에 근거하여 等距離外交를 전개해 온 것이라기 보다, 김일성 체제유지를 위해 2~5년의 간격을 두고 軍事同盟關係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긴밀화와 소원화의 時計錘 外交를 반복해 온 것이다.

둘째, 북한은 중국과 소련 각각에 대해 極端的 敵對政策을 추구한 적이 없다. 북한은 대중·소관계사에 있어 밀착과 소원을 반복해 왔으나, 어떤 시기에도 어느 일방을 적대국으로 몰고 다른 일방과 동맹을 맺는 그런 대외정책을 전개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³⁶⁾

셋째, 북한은 비록 제한적이거나 中國과 蘇聯에 대해 政治·軍事的 측면에서 相對的 自律性을 증진시켜 왔다. 중·소분쟁과 이에 따른 북한에 대한 중·소 견인경쟁의 심화는 北韓의 相對的 自律性을 신장시켰는 바, 북한은 중국과 소련의 대남한정책이 북한의 기본입장과 어긋날 경우 국가목표 및 이해관계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하였다. 이것은 비록 2차대전후 냉전질서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대결적 상황에 처해 있는 북한으로서는 사회주의 진영 종주국인 소련과 중국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나, 나름대로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북한의 대중·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북방삼각관계는 蘇聯의 國力과 비례하여 변화되었다. 즉 냉전체제하에서 ① 소련의 패권이 강할 시기 - 소련주도하의 밀착된 북방삼각관계 ② 소련의

36) 金國振, 「北方三角關係와 蘇聯·베트남·中共間 三角關係의 比較研究」(서울: 日海研究所, 1988), p. 26.

패권이 중국에 의해 도전받던 시기 - 중·소분쟁하의 이완된 북방삼각관계 ③ 소련의 패권이 쇠잔한 시기 - 소련의 해체하의 붕괴된 북방삼각관계로 변화되어 왔다.

다섯째, 북한의 對中·蘇政策은 이데올로기와 實利를 양측으로 전개되어 왔는데, 그 비중은 이데올로기 중심에서 점차 實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초기에 소련일변도 정책을 추구했으나, 한국전쟁 이후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對中·蘇 實利追求 外交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現實主義的 對外政策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바, 소련의 해체에 따른 脫冷戰期에 들어와서도 북한은 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는 이데올로기적 동맹관계의 지속적 강화를 모색하는 한편, 경제·외교적 실리를 위해 대서방관계(특히 미국, 일본) 관계개선을 적극 모색하고 나서게 되었다.

나. 外交政策의 特徵

1) 北韓

북한은 現存 北韓體制의 維持와 韓半島 共產化 統一 및 全世界의 共產化 達成을 최소 및 최대목표로 추진하여 왔다.³⁷⁾ 그리고 이

37) 북한은 「3대혁명역량」의 전반적 약화에 처하여 最小目標인 體制維持를 더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세한 내용은 許文寧, “北韓의 對南戰略 分析과 展望,”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러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정책 理念으로서 「자주·평화·친선」을,³⁸⁾ 외교정책 路線으로서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강화」를 주장하여 왔다.³⁹⁾

그동안 전개되어온 북한외교의 특징은⁴⁰⁾ 첫째, 대체로 外交政策 理念·目標와 路線에 근거하되 現實狀況에 적응하는 방향에서 전개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변화적 측면에서 매우 느린 속도이지만 對外開放과 多邊化 外交로 전개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展望」(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pp. 36~44 참조.

38) 북한은 1966년 자주노선을 주장한 이후 대외관계에서 ‘자주’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북한은 자주성을 강조하여 中·蘇紛爭 시기에 實利外交를 추구함으로써 국익을 추구하였다. 또한 소련의 해체 이후에는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적 연대’를 강조하여 외교난을 타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평화’이념하에서는 駐韓美軍 및 核武器 撤收와 南北韓 相互軍縮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친선’이념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 비동맹국가, 제3세계 국가들과 유대관계를 지속하였고, 1980년대에 들어서는 資本主義 國家들과도 관계개선을 적극 도모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추상적 외교이념을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명목적으로는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 방법과 수단에 있어 體制維持를 위한 ‘現實適應的’ 變化를 보여주고 있다. 金日成, “조선로동당 6차대회 사업총화보고(1980.10.10),” 「朝鮮勞動黨大會 資料集 第4輯」(서울: 國土統一院, 1989), p. 73.

39) 북한은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대혁명역량 강화노선」을 정립하였는 바, 이는 ‘북조선 혁명기지의 강화, 남조선 혁명역량의 강화,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강화’로 구성된다. 「김일성저작선집 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p. 94, 239.

40) 許文寧, “北韓의 對日·美 交渉 現況과 修交展望,” 民族統一研究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 (1992), pp. 60~63.

있다. 셋째, 지속적 측면에서 冷戰的인 陣營論的 思考를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북한의 대중국정책은 中·蘇競爭을 이용, 군사 및 경제원조를 얻어 경제발전과 안보를 확보하는 한편 중국의 대한국접근을 저지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북한은 韓半島 統一의 基盤 造成을 위해 중국의 정치, 군사 및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에 장기적 정책목표를 두었다.⁴¹⁾

북한의 대소련정책 또한 中·소경쟁을 이용, 실리를 추구하는 점에 있어 대중국정책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소련이 先進軍事裝備와 技術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선진과학기술 및 고성능 무기와 최대한의 경제원조를 받아 내려한 점에 있어 차이가 있다.

2) 中國

중국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국내의 경제적·군사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입함으로써 한반도가 중국의 안보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대외적으로 천명하였다. 또한 1960년대 中·소분쟁의 심화는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더욱 인식케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중국의 등뒤에 바로 갖다댈 수 있는 소련의 잠재적 칼”로서 인식하게 되었다.⁴²⁾ 따라서

41) 柳錫烈, 「南北韓의 對中國關係 發展 展望」(서울: 外交安保研究院, 1991), pp. 10~11.

中·蘇紛爭의 측면에서 파악해 볼 때, 1988년까지 전개된 중국의 대북한 지지 적극화 현상은 안보목적을 위하여 소련의 지배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북한을 자국의 영향권하에 끌어들이려는 전략적 고려하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중국은 1970년대 말에 4個 現代化政策 추진을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서방으로부터의 자본·기술도입 및 주변환경의 安定을 우선적으로 추구해 왔다. 이를 위해 중국은 蘇聯으로부터 도전적 위협 및 對美 의존외교 등의 부작용을 탈피하면서 反霸權主義 路線을 견지하는 獨立自主外交 정책을 추구해왔다.⁴²⁾ 따라서 獨立自主外交 路線의 측면에서 파악하면, 198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접근은 牽引競爭의 결과라기 보다 오히려 한반도의 平和的 安定을 위한 유대강화방책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보아야 한다. 이 시기 중국의 대북한정책 기저에는 북한의 대남적화 革命路線을 대남체제경쟁의 平和共存路線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었다.⁴³⁾

42) Michael Sadykiewicz, "The Geostrategic Role of Korea in the Soviet Military Doctrine," *Asian Perspective*, Vol. 7 (Spring/Summer 1983), pp. 105~07.

43) 獨立自主外交는 黨 12全大會(1982.9)에서 胡耀邦 총서기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후 호요방 총서기는 차우세스쿠 루마니아 대통령 訪中時(1985.10) 독립자주외교와 대외개방정책 추구 및 국가현대화 건설을 위해 국제평화 분위기 조성에 주력한다는 내용의 外交 8原則을 천명하였다. 또한 趙紫陽 총리가 제6기 全人代 제4차 상무위원회 회의(1986.3)에서 獨立自主·平和外交 10原則을 제시하였다.

3) 蘇聯

소련은 1945~1985년 시기에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와 軍事力을 기초로 하여 전세계에 대한 影響力 擴大와 共產化를 목표로 하였고, 1985~1991년 시기에 안보위협 완화와 경제협력을 통한 자국의 經濟沈滯 克服을 목표로 하였다.⁴⁵⁾ 이에 비해 러시아는 民主改革과 市場經濟 정착을 통한 국가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⁴⁶⁾

소련의 대북한정책은 극동에서의 戰略的 平衡維持 및 한반도에서의 힘의 안정을 위하여 남북한간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는 한편,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공고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⁴⁷⁾ 이에 비해 최근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은 ① 한반도의 정치적 安定 ② 南北對話와 접근에 대한 협조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러시아에 우호적인 단일정부의 형성 ③ 남북한 정부와 相互利益이 되는 經濟關係의 발전으로 요약되고 있다.⁴⁸⁾ 소련의 이데올로기 중시적 대외정책의 특징은 사라졌으나, 韓半島에 대한 일정수준의 影

44) 許文寧, “1980年代 北韓의 對中·蘇政策 및 對南政策 研究”(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0), pp. 71~88.

45) 余仁坤, 「러시아 聯邦의 對韓半島 政策」(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pp. 3~28.

46) 러시아의 「新外交政策」, 1993.2.12.

47) Alexander Z. Zhebin “Russian-North Korean Relations: The State and Prospects,” 漢陽大 中蘇問題研究所, 「中蘇研究」 55호 (1992 가을), p. 138.

48) 트카첸코, “러시아·北韓關係의 변화와 兩韓關係 영향,” 聯合通信, 「主要資料 全文集」 제 21호 (1993.6.1), p. 110.

響力을 확보하려는 傳統的 理解關係에 기초한 대외정책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 部門別 關係의 特徵

냉전기 북한의 대중국·소련관계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라는 이데올로기적 決定要因과 북한 정권수립에의 기여와 한국전쟁에의 참여라는 政治的 決定要因에 의하여 기본적인 틀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양국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政治的 關係

북한과 중국의 정치적 관계는 ‘唇亡齒寒 關係’⁴⁹⁾ 또는 ‘血盟關係’⁵⁰⁾

49) 周恩來, “抗美援朝, 保衛和平,” 「周恩來選集」 下卷 (北京: 人民出版社, 1984), p. 51.

50) “두 나라 지도자들이 늘 말하여온 바와 같이 조, 중 두 나라, 두 인민들 사이의 관계는 말 그대로 뗄 수 없는 순치의 관계이며 혁명적전우의 관계이며 피로써 맺어진 혈연적관계입니다.” (김일성의 성도시 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1982.9.21)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83」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3), p. 99; “두 나라 인민들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순치의 관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혈연적 관계에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호

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북한이 중국인민지원군의 적극적인 도움과 희생으로 한국전쟁에서 소생한데 기인한다. 또한 양국은 사회주의 국가건설시기와 경제발전 단계가 비슷하며, 또한 일방이 지시하고 타방이 복종하는 상하관계가 아닌 서로 協調的인 紐帶關係를 유지해 왔다.

북한과 소련의 정치적 관계는 ‘社會主義 兄弟國’ 또는 ‘親善協助關係’⁵¹⁾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북한이 소련의 군사적·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형성·유지되었으며, 더욱이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응집력으로서 크게 작용한데 기인한다.

2) 經濟的 關係

북한과 중·소간의 경제적 관계는 ‘社會主義 友好價格에 의한 求償貿易의 援助的 協力關係’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이들

요방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1984.5.6)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85」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5), p. 20.

51) “조선과 소련은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잇닿아 있는 친선적인 름방이며 우리 두나라는 일찍부터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에 기초하여 친선협조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발전시켜왔습니다.” (쏘련아동문학잡지사 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87.2.5)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88」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8), p. 4.

국가와의 경제협력 관계는 중국과 소련의 북한에 대한 軍事援助, 經濟支援, 雙務的 바터交易의 세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⁵²⁾

3) 軍事的 關係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관계는 1961년 7월 11일 김일성이 북경을 방문하여 체결한 「조·중 우호, 협력 및 호상원조조약」에 따라 군사동맹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 조약은 체약 일방이 무력침공을 당하거나 전쟁상태에 놓이게 되면, 체약 상대국이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조약은 북한과 소련간에 체결된 「조·소 우호, 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이 5년마다 갱신하게 되어있는 것과 달리 無期限 效力條項을 두고 있는 바, 체약 쌍방이 수정 또는 폐기할 것에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도록 되어 있다.

冷戰期 북한과 중국관계는 국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횡적 의존 형태가 유지되었는 바, 協力的 同盟關係(partnership alliance)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⁵³⁾ 그리고 그 특징은 再分配 同盟으로서,⁵⁴⁾ 雙

52) 연하청 “북한의 무역 및 대외 경제협력,” 「북한의 경제」(서울: 을유문화사, 1990), p. 199.

53) 시몬즈(Robert R. Simmons)는 동맹의 범주를 동맹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가 공통의 적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았을 때 다른 가맹국이 핵심적 가치인 물질적, 영토적, 인적 대가(cost)를 피침국과 똑같은 수준으로 치를 용의가 있는 協力的 同盟(partnership alliance)과 동맹내의 강대국이 핵심적 가치의 상당한 부분을 지출한다고

務·一般·永久·實效的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⁵⁵⁾ 이에 비해 북한과 소련관계는 약소국과 강대국간의 전형적인 동맹형태로서 더구나 양극체제하의 사회주의 진영에 있어서 중심국과 주변국간에 형성된 종적의존상태가 유지되었는 바, 保護的 同盟關係(protectorate alliance)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특징은 북·중관계처럼 再分配 同盟으로 쌍무·일반·영구·실효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그 강도에 있어서는 북·중관계보다 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같은 정치·경제·군사적 관계의 특징을 종합해 볼 때, 北韓·中國關係는 사회주의적 경제교류 및 협력을 토대로 한 相互協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피침국과 똑같은 수준으로 대가를 지불하거나 위협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保護的 同盟(protectorate alliance)으로 구분한다. Robert R. Simmons, *The Strained Alliance: Peking, Pyongyang, Moscow and the Politics of the Korean Civil War* (New York: The Free Press, 1975), pp. 261~62.

54) 로젠(Steve Rosen)은 동맹의 유형을 어떤 종류의 재분배 (redistribution of somekind)에 전념하는 再分配同盟과 현존하는 가치의 분배 (existance distribution of value)를 추구하는 現狀維持 同盟으로 구분한다. Steve Rosen, "A Model of War and Alliance," Julian R. Friedman et al, eds., *Alliance in International Politics* (Boston: Allyn and Bacon, Inc., 1970), p. 232.

55) 모겐소는 동맹을 일방적인 것(one-sided)과 쌍방적인 것(mutual), 일반적인 것(general)과 제한적인 것(limited), 영구적인 것(permanent)과 일시적인 것(temporary), 실효적인 것(operative)과 비실효적인 것(inoperative) 등으로 분류하였다.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fifth edition (New York: Alfred A. Knopf, Inc., 1973), p. 183.

助的인 血盟的·協力的 同盟關係로 규정할 수 있다. 반면에 北韓·蘇聯關係는 사회주의적 경제교류 및 협력을 토대로 한 점에 있어 共通的이나, 縱的·依存的인 親分的·保護的 同盟關係로 규정할 수 있는 점에서 差異가 있다.

3. 決定要因 分析

모든 양국간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중·소관계도 어느 한 국가의 일방적 접근에 의해 관계가 밀착되거나 소원해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대중·소관계는 國際的 環境 가운데 兩國間的 相互利害와 必要性에 따라서 이루어 지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대중·소관계 결정요인은 북한의 시각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 및 소련의 시각에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이 항에서는 우선순서의 구별없이 분석할 것이다.

가. 國際環境的 要因

1) 世界的 次元

北方三角關係는 전후 미·소 양 초강대국의 세계전략 차원에 따라 兩極體制가 형성되자, 그 하위체계로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美·蘇의 참여한 대립이 지속되는 한 쉽게 붕괴할 수 없는 내재적

특징을 갖고, 북한의 대중·소관계는 시작되었다. 그 결과 냉전체제가 지속되는 동안 소련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비록 그 정도에 있어서는 시기에 따라 변동상황이 있었으나, 완전 중단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2) 地域的 次元

中·蘇關係는 북한이 대중·소정책을 형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북한정권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소련으로부터 誕生의 후원을 받았으며, 한국전쟁중 중국으로부터 生存의 은혜를 입었다. 北方三角關係는 三國間의 정치·경제·군사적 요인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南方三角關係와 對立이라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중·소 양국 중 어느 한 국가만을 일방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중·소간의 갈등은 북한의 대중·소정책에 심각한 딜레마를 안겨주었다. 반면 중·소분쟁은 북한이 자신의 실리추구를 위해 중국과 소련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동시에 제공하였다. 중·소간의 심각한 대립은 북한으로 하여금 양국으로부터 단합된 支援을 받기 어렵게 한 반면, 북한이 중·소양국의 합의된 행동결정에 따라야 하는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고, 그 결과 북한은 이른바 自主路線이나 主體外交를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⁵⁶⁾ 즉 북한은 중·

56) 朴斗福·金富起, 「最新中蘇關係論」(서울: 경영문화원, 1991), pp. 245~47.

소대립으로 인하여 양국의 競爭的 壓力의 對象이 된 동시에 競爭的 支持의 수혜자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중·소분쟁이 표면화 된 이후 어느 한 국가에 편중하지 않고, 또 양국으로부터 소외되지도 않도록 양국과 원만한 均衡關係를 유지하는데 부심해 왔다.⁵⁷⁾

따라서 북한이 어느 정도의 제한된 범위내에서 시계추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중·소갈등과 이로 인한 중·소의 북한에 대한 戰略的 競爭關係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金日成 唯一體制를 구축해 나가면서 필요에 따라 중·소에 대한 태도를 변경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나. 兩者的 要因

1) 政治的 決定要因

북한의 대중·소관계 밀착·소원을 결정하는 주요 정치적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57) 북한의 대중·소 교류는 편향이나 소원기에 상관없이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무부, 「북한 대외동향 월보 및 동향 종합」(1976~83), 全寅永 外, 「北方三角關係의 變化와 韓國의 政策方向」, p. 39. 재인용; 그러나 북한은 역사와 문화, 지리, 정책 및 감정적 측면에서 중공쪽으로 보다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鄭鎮渭, 「北方三角關係」, pp. 212~14.

첫째, 양국간 공식 이데올로기상의 親和性 여부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공식이데올로기가 대내·외 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⁵⁸⁾ 북한 및 소련·중국의 이데올로기는 國家利益뿐만 아니라 대외정책의 基本目標 및 전략적 細部指針까지 지배하기 때문이다.⁵⁹⁾ 이러한 공식 이데올로기 해석상의 변화는 3국 외교정책의 기본틀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3국관계의 밀착 및 소원에도 영향을 주었다.

소련과 중국 그리고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共同의 政治 이데올로기를 추구함으로써 한국전쟁이후 긴밀한 북방삼각관계를 이루었다. 그러나 소련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東西 平和共存路線을 모색하고 있을 때, 중국의 모택동과 북한의 김일성은 ‘獨自路線’과 ‘主體⁶⁰⁾’를 표방함으로써 소련과 중국 및 북한간의 관계는 긴

58) 李相禹, “金日成 主體思想과 北韓의 外交政策,” 이흥구·스칼라피노 共編, 「北韓과 오늘의 世界」(서울: 법문사, 1986), p. 34.

59) 북한은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개정헌법 제3조) 것과 “조선로동당은 오직 ...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로동당규약 전문)고 주장한다. 통일원, 「북한개요」, pp. 517, 542.

60) 북한이 이데올로기 분야에서 ‘주체의 확립’을 사용하게 된 것은 1955년 12월 28일 당선전·선동 일꾼대회에서 김일성이 “사상사업에서의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연설을 한데서 시작되었다. 이후 1966년 10월 5일 제2차 당대표자 회의에서 김일성은 소련의 ‘修正主義’와 중국의 ‘教條主義’에 반대하여 북한의 외교정책에 있어 ‘自主路線’을 선언하였다.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66-1967」, pp. 100~30.

장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소련이 1956년 22차 당대회에서 平和共存을 선언하고 대서방 강경정책을 다소 완화하자, 북한은 1959년 8월과 1962년 10월 中·印 국경분쟁 당시 소련과 달리 중국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선언하고, 1960년대를 통하여 對西方強硬路線을 취하고 있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둘째, 對外政策 路線上的 類似·相異性이다. 특히 對美政策을 둘러싸고 결정적인 견해차가 발생했을 경우 북한의 대중·소관계는 소원해졌으며, 견해가 유사해졌을 경우 관계가 긴밀해졌다.⁶¹⁾ 1960년대 전반 북·소관계의 냉각은 1962년 쿠바 미사일사태시 소련의 對美投抗主義的 태도와 이후 緊張緩和政策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 1970년대 후반 북·중관계의 냉각은 1979년 1월 미·중 국교정상화에 따른 중국의 對美協力政策과 북한의 對美敵對政策의 충돌에 따른 것이다.⁶²⁾ 반면 소련은 중국이 “제국주의 국가들과 결탁하고 한·미관계를 지지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나섬으로써, 북·소관계는 긴밀하게 되었다.⁶³⁾

61) Helen-Louise Hunter, “북한과 등거리외교의 신화,” 具永祿 外, 「南北韓 政治統合과 國際關係」 (서울: 慶南大學校 極東問題研究所, 1986), p. 209.

62) 김일성은 “사회주의 나라들과 빨럭불가담나라들, 모든 신흥세력나라들은 제국주의와 무원칙하게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朝鮮勞動黨大會 資料集 第4輯」, p. 70.

63) 「內外通信」 제220호, 1981.2.25.

셋째, 韓半島 統一問題에 대한 태도이다. 중국과 소련의 북한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 여부 및 南韓과의 關係改善 與否는 북한의 대중·소관계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었다. 중국은 1978년 4個 現代化 計劃을 추진한 이래 ‘周邊環境의 安定’을 목표로서 한반도의 現狀維持(平和)政策을 추구함으로써 現狀變化(統一)政策을 추구하는 북한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 또한 중국은 한국이 기술과 경제발전 모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신흥공업국가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교류를 증진시키자, ‘하나의 조선’정책을 추구하던 북한과 갈등을 빚게되었다. 반면 소련은 1978년부터 한반도 통일문제에 있어 친북한적 강경입장을 취했는 바, ‘미국의 남조선 강점을 반대하고 (북한의) 통일위업을 적극지지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넷째, 政治體制 및 對內政策의 類似·相異性이다. 社會主義 體制 동질성은 양국으로 하여금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의 연대성을 갖도록 고무하는 한편, 대외정세의 변화에 공동대응을 촉진시켰다.⁶⁴⁾ 또한 북한·중국·소련 각국의 국내정세 변화에 따른 대내정책변화가 상대국 정책과 상이하게 되자, 양국사이에 갈등이 나타났다.⁶⁵⁾

64) 黃炳茂, “社會主義 改革과 北韓 對外政策의 變化(1),” 徐鎮英 編, 「社會主義 改革과 北韓」(서울: 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1992), p. 231.

65) 車英九, “北韓과 中蘇間의 軍事協力,” 李洪九·스칼라피노 共編, 「北韓과 오늘의 世界」, pp. 316~21.

1950년대 후반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운동으로부터 시작된 蘇聯의 對內政策變化는 중·소갈등의 계기가 되었지만, 북·소갈등의 원인도 되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중국의 文化大革命은 중·소갈등의 격화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북·중갈등의 원인도 되었다. 한편 家父長的 世襲制度를 기본전제로 하는 金日成 일인중심의 북한 군사독재 체제는 毛澤東의 개인숭배정책을 批判 하던 중국과 1970년대 후반에 소원하게 되었고, 1980년대 후반에는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소련에게 시대착오적인 기현상으로 인식되어 북·소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다섯째, 앞의 요인과 관련된 것으로 金正日 承繼體制에 대한 태도이다. 북한은 5차 당대회에서 은밀히 추진하였고, 6차 당대회에서 공식화함으로써 김정일 승계체제를 제도화시켜왔다. 이에 대해 중국은 1970년대 후반 및 1980년대 초반 반감을 표명함으로써 양국관계는 소원하게 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 현실적 이유로 인해 인정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양국관계는 다시 긴밀하게 되었다.⁶⁶⁾ 소련은 북한의 세습왕조 구축이 사회주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주의 동맹국들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오랫동안 고수해왔다. 그러나 美·日·中 三角協力體制가

66) 1980년 11월 홍콩의 좌익신문은 김정일 후계체제를 '봉건사회주의'로 비판하였으나, 1983년 6월 중국은 김정일을 북경에 초청하였고, 1984년 호요방 총서기는 김정일과 회담함으로써 간접적 승인을 시사하였다.

형성되자, 소련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새롭게 인정하고 김정일 후계체제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완화시킴으로써 북·소관계를 개선시켰다.

여섯째, 地政學的 要因이다. 이는 북한의 대중·소관계 긴밀화의 常數的 要因이다. 중국은 일찍부터 조선에 문화적 영향을 주어왔고, 한반도가 우호세력으로 남아 있기를 바라며, 이데올로기와 정치체제가 동질적인 대북한관계를 脣齒關係로 인식해 왔다.⁶⁷⁾ 소련은 북한을 社會主義 兄弟國으로 인식해 왔다. 이에 대해 북한은 대중관계를 ‘피로써 맺어진 전우’ 즉 血盟關係로 비유하며, 대소관계를 ‘전투적인 친선과 다각적인 협조관계’로 인식한다. 그런데 중·소의 대북한경쟁의 요체는 北韓의 지정학적 위치와 관련된 戰略的 重要性 때문이다. 중국은 자국의 핵심적인 產業基地인 만주가 북한과 인접해 있는 반면, 소련도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중심지이고 太平洋艦隊의 戰陣基地인 블라디보스톡이 북한과 인접해 있음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북한의 대중·소관계에 있어 양자적 차원의 주요 정치적 결정요인은 社會主義體制 유지여부·對美 強硬政策의 지속여부 및 北韓의 대한반도 統一政策의 지지여부 그리고 김일성-김정일 承繼體制의 승인여부인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지정학적 요

67) “중·북한 양국은 脣齒關係에 놓여 있으며, 강을 사이에 둔 이웃으로서 外勢의 침략을 反對하는 共同鬪爭에서는 물론, 社會主義 건설 위업에서도 두나라 인민들은 시종일관 生死苦樂을 같이 하면서 서로 지지해 왔다.” 「北京放送」, 1992.4.18.

인은 상수적 결정요인으로 분석된다.

2) 經濟的 決定要因

북한의 대중·소관계 밀착·소원을 결정하는 주요 경제적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對內·外 經濟政策 즉 社會主義 體制發展戰略의 유사성·상이성이다. 1960년대 초반 북·중밀착 및 1970년대 후반 북·중소원은 양국의 체제발전전략이 유사·상이한 데서 영향을 받았다. 북한지도자들은 1950년대 후반 중국에서 시행된 自力更生과 大躍進運動 전략을 원용하여 ‘자주경제’와 ‘천리마운동’을 채택하였는 바, 양국은 같은 발전전략을 토대로 협력하며 관계를 긴밀화하였다. 한편 1970년대 후반에는 중국이 1978년 12월 11期 3中全會에서 4個現代化의 추진을 위해 改革과 開放을 채택할 것을 강조하였으나, 북한은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내세우고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개방의 逆機能을 우려함으로써 발전전략상의 마찰과 이에 따른 관계소원을 보였다. 이후 1980년대 초반 중국의 권유에 따라 북한지도자들이 경제특구를 방문하고, 북한은 중국의 대외무역정책(中外合資經營企業法)을 원용하여 1984년 9월 合營法을 제정함으로써 양국관계는 다시 긴밀화되었다.⁶⁸⁾

68) 북한은 중국의 경제발전의 경험을 부단히 연구하고 활용하고 있는 바,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발전전략은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둘째, 양국간 援助의 增減與否이다. 북한은 1940년대와 1950년대 소련으로부터의 一方的 無償援助를 받던 시기에 소련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1960년대 들어와 무상원조 대신 長期借款(물자 구매와 투자)으로 경제협력 방식이 바뀌면서 소련과 소원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 북한의 대소 소원, 대중 밀착은 소련의 대북원조 중단 때문만도 아니고, 북한의 自力更生政策⁶⁹⁾ 때문만도 아니었다. 오히려 중·소분쟁의 와중에서 대미평화공존과 쿠바 미사일사태에 대해 패배주의적 태도를 취한 소련의 입장에 대한 북한의 반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중국의 대북원조액도 1950년대에 비해 1960년대에 줄었는데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오히려 밀접해졌기 때문이다.⁷⁰⁾ 이 시기 북한은 제1차 5개년계획(1957~61)의 조기달성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바, 冷戰體制下에서 남한과 正統性 競爭을 하던 北韓으로서는 경제적 논리보다는 政治的 論理에 의해 정책방향을 모색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冷戰體制下에서는 양국간 원조의 증감여부가 북한의 대중·소관계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셋째, 兩者貿易의 활성화와 침체의 여부이다. 북한의 對外政策上

북한에서 수정·재현되어 왔다. 바자노바, 「岐路에 선 北韓經濟」, p. 242.

69) 바자노바는 60년대 북한이 자력갱생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정치와 경제면에서의 고립을 자초했다고 본다. 위의 책, p. 51.

70) 國土統一院, 「北韓統計資料集(1946~1985)」 (서울: 國土統一院, 1986), p. 809 참조.

主要象對國 변화방향은 대체로 貿易構造 比重의 변화와 相關關係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련은 북한이 존립해온 전기간을 통해 무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북한의 파트너였는데,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소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로 줄어든 반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로 늘어나 1965년 북한의 대중·소 무역비중은 거의 균형을 이루었다.⁷¹⁾ 북한과 중국이 소원했던 기간에, 비록 정치적 관계에 1년정도의 시차를 두고 일어나지만, 양국무역 또한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⁷²⁾ 1960년대까지 북한의 대중·소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다가 1970년대 들어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1980년대 들어와 다시 높아졌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대소 무역의존도는 經濟安保上 문제가 될 정도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소련의 해체이후 북한의 경제는 심각한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⁷³⁾

요컨대 냉전체제하에서 북한의 대중·소관계의 주요 경제적 결정요인은 社會主義 體制發展 戰略의 유사·상이성 여부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과 소련의 對北經濟援助는 북한과의 관계강화에 제한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兩者貿易의 活性化 여부는 양국관계

71) 위의 책, p. 735.

72) 북한은 수입의존도에 있어 1965년 소련 36%, 중국 39.2%로 거의 균형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1967년 이후 대소확대, 대중위축의 경향을 띄면서 1971년 소련 62.8%, 중국 16.1%를 기록하였다. 民族統一研究院,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p. 347.

73) 위의 책, pp. 345~47.

의 독립변인이라기보다 從屬變因의 성격을 띠었음을 분석할 수 있다.

3) 軍事的 決定要因

북한은 소련의 막대한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받고 수립되었기 때문에 소련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하였으며, 중국과의 관계는 한국전쟁에 중공군이 투입되면서 시작하였다. 북한의 대중·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적 결정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간의 武器·裝備 支援 여부이다. 지난 45여년 사이 북한이 對蘇偏向했던 시기는 크게 3기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 시기 蘇聯의 對北 軍事支援이 함께 增加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제1기는 한국전쟁 이전기로서 북한군대의 수립 및 강화에 소련의 군사지원이 기여했을 뿐 아니라 1949년 3월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 후 다량의 무기가 소련으로부터 지원되었다. 제2기는 1965년 5월 양국간의 군사협정이 체결된 후로서 1967년 말까지 소련은 북한을 완전히 재무장시켰다.⁷⁴⁾ 제3기는 1984년 5월 김일성의 23년만의 소련 방문이후 양국 군사동맹관계가 전략적 차원으로까지 격상되어 각종 무기지원 및 양국간 군사지도자의 상호방문 및 전폭기 교환 비행, 함대교환 방문 등이 강화되었다. 결국 양국간 군사지원 여부는 양국관계의 밀착·소원화에 대한 독립변인이라기 보다는 從屬

74) 白鍾天, “군사,” p. 396.

變因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⁷⁵⁾

둘째, 양국 軍事政策(戰略)상의 갈등 여부이다. 1960년대 후반 북한의 對南 軍事冒險主義 정책은 북한과 소련간의 군사협력관계를 소원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소련이 제공한 선진군사장비를 가지고 소련과 일체의 상의없이 북한이 대남 및 대미도발을 자행하자,⁷⁶⁾ 소련은 이에 대해 “사회주의 진영의 방위는 集團的인 것인 바, 북한이 미국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관계가 소원하게 되었다. 한편 主敵에 대한 인식의 공통성과 상이함 또한 북·중관계에 영향을 미쳤는 바, 1960년대 말까지 북한과 중국은 反美聯合戰線에 공동보조를 취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 反帝鬭爭에 있어 북한은 反美鬭爭을 계속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투쟁의 우선순위를 社會帝國主義 즉 소련의 팽창저지에 둬으로써 북·중관계가 1960년대 초반처럼 밀착될 수 없었다.

요컨대 냉전시대 북한의 대중·소 관계의 주요 군사적 결정요인은 양국 軍事政策의 갈등 및 주적에 대한 認識差異 여부가 되며, 軍事的 支援은 독립변인이라기 보다 從屬變因의 성격을 가짐을 알 수 있다.

75) 북한의 대소편향시 반드시 소련의 대북무기지원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1979년 북한의 대소편향기에 소련의 대북 군사지원은 대폭 삭감되며 특히 원유공급은 크게 줄어들었다. 위의 논문, p. 397.

76)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1968.1.21), 미국 프에블로호 나포(1968.1.23), 미국 EC-121 정찰기 격추(1969.4.15) 등.

다. 綜合評價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北韓의 對中·蘇關係는 어느 한 요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냉전 체제하에서 북한의 대중·소관계는 北韓의 政策的 選擇에 먼저 기인하는 것이라기 보다 오히려 蘇聯과 中國의 對內外政策變動에 따라 北韓이 국가목표달성을 위해 適應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체제유지와 공산화통일 및 전세계의 공산화를 위해 안보와 경제를 먼저 공고화할 필요가 있었는데, 북한의 安보와 經濟는 구조적으로 소련과 중국에 상당히 依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冷戰期 중·소분쟁 가운데 어느 일방을 선택하기 보다는, 중국과 소련의 북한에 대한 戰略的 牽引競爭을 유발하여 실리를 확보하는 한편, 사회주의 동맹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時計錘처럼 이동하면서 관계를 설정해 왔던 것이다.

冷戰期 북한의 대중·소관계 변동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측면에서는 革命과 이데올로기적 紐帶 要因 즉 社會主義體制 유지 여부, 對美 強硬政策의 지속 여부 및 韓國과의 關係改善 여부, 고려연방제 및 주한미군 철수 등 北韓의 統一政策의 지지 여부 그리고 고위지도자 및 대표단의 방문 및 교류를 통한 金日成 體制(김일성-김정일 承繼體制)의 지지 여부 등이었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는 經濟的 實利要因 즉 사회주의 體制發展戰略의 유사·상이성 여부와 경제적 지원 여부 등이었다.

셋째, 군사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戰略的 價値要因 즉 양국 군사 정책의 갈등 및 主敵에 대한 인식차이 여부 등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요인들 가운데 1970년대 후반까지는 냉전체제 및 중·소분쟁의 심화로 인해 이데올로기적 유대요인과 전략적 가치요인이 主要因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와서는 金正日 承繼體制의 制度化 過程에서 이에 대한 政治的 承認與否 요인과 中·蘇關係가 改善됨에 따라 經濟的 實利 요인도 점차적으로 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소련이 해체되고, 동구 사회주의 진영이 몰락한 현시점에서 위와 같은 요인들을 북한의 대중·러관계에 있어 第1次的 決定要因으로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세계적 차원에서 과도기적 체제인 ‘冷戰後期體制’(Post-Cold War System)가 아직 그 전모를 완전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나, 지난 45년 이상 세계를 지배한 美·蘇 兩國中心의 冷戰體制가 소멸하였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지역적 차원에서 中·蘇紛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러간의 대북한 견인경쟁은 냉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3대혁명역량’의 전반적 약화에 따라 體制危機에 처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변화사실들과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예측해 볼 때, 脫冷戰期 북한의 대중·러관계는 金定日 體制에 대한 政治的 支持要因, 經濟的 實利要因, 戰略的 價値要因, 이데올로기적 紐帶要因 순서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⁷⁷⁾ 예컨대 과거 냉전기에

는 韓國과의 關係改善 여부가 중국과 소련의 대북한관계에 직결되었으나, 이제 한·러,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개선 문제로서 대중·러관계를 조정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변한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중국과 소련의 對美關係改善 정도가 북한과의 관계긴밀화 정도에 직결되었으나, 이제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미국과의 수교도 적극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는 상황인 바,⁷⁷⁾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밀착한다고 하여 북한의 대중·러관계가 소원해 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앞에서 분석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脫冷戰期 북한의 대중·러관계를 展望한다.

77) 중국의 입장에서는 經濟的 實利要因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戰略的 價値要因이 대북한관계에 있어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78) 손성필 駐러시아 북한대사 발언, 「東亞日報」, 1993.7.23.

第Ⅲ章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變化

이 章에서는 세계적 및 지역적 차원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양국 차원의 정치·경제·군사분야 등에서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爭點的 決定要因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탈냉전기 북한의 대중·러관계 변화를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전망해 본다.

1. 決定要因 變化

가. 國際環境 要因의 變化

1) 冷戰後期體制의 到來

1985년 3월 고르바초프 서기장 등장 이후 추진된 蘇聯의 改革(perestroika)·開放(glasnost)政策에 의해 신데탕트의 세계질서가 형성되었는데,⁷⁹⁾ 1991년 12월 소연방이 해체되고 고르바초프가 퇴진

79) 미국과 소련 양국은 1987년 12월 7일 중거리핵전력(INF)의 폐기 협정에 합의하였고, 1989년 12월 '和解와 平和의 精神'에 기반을 둔 몰타체제로 발전하여 나갈 것에 대해 합의하였다.

함에 따라 1945년이래 지속되어온 냉전체제는 근본적으로 붕괴되고 말았다. 새로 등장한 脫冷戰的 세계질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냉전 다음의 과도기적 체제라는 뜻을 가진 ‘冷戰後期體制’(post-cold war system)로도 명명되고 있는데, 그 주요 특징과 북한의 대중·러관계에 미칠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질서의 성격을 규정하던 양대 초강국의 위상이 쇠퇴하고, 이에 따라 軍事力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減少하였다. 동시에 냉전체제하의 제로섬(zero-sum)적 사고가 상호이익을 존중·조화시키는 입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경쟁보다 공존의 논리가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의 변화에 따라 1990년대 국제관계는 安保·軍事 위주의 ‘高位政治’(high politics)보다 교역·투자·기술이전 등 經濟 위주의 ‘低位政治’(low politics)가 중시되고 있다. 즉 이데올로기적 安保論理보다 경제적 實利論理가 국가들간의 관계설정에서 중요요인이 되고 있다. 경제적 실리에 의해 좌우되는 신국제질서는 이데올로기 및 전략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北方三角關係를 근본적으로 變化시킬 것이다.

둘째, 소련의 해체와 미국의 군사적 팽창 지양에 따라 地域單位의 多者間 安保協力體制의 구축 노력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동시에, 정치·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地域的 接近(regional approach)이 선호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단위의 안보·경제협력체 결성 추세는 북한으로 하여금 전통적인 북방삼각관계의 재편을 심사숙고케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2) 中·러 關係改善의 增進

동북아 지역질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국제질서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아 점진적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은 냉전질서가 완전히 해체되지 않은 過渡期에 놓여 있다. 그러나 중·소 관계정상화 및 일·러시아 관계개선 전망, 한·러 및 한·중수교, 북·미회담, 북·일 수교협상 등 일련의 상황들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冷戰的 兩三角關係(two-triangle system)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⁸⁰⁾

특히 중·소화해와 소련의 해체에 따라 과거 중·소분쟁의 심화 가운데 북한을 중심으로 형성된 북·중 및 북·소의 '二邊的 關係'(또는 느슨한 삼각관계)는 새로운 형태로 개편되어 갈 수밖에 없다. 북한은 과거 중·소분쟁하의 중·소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었으나, 중·소관계의 급진적 발전⁸¹⁾과 소련의 해체

80) 일본 신내각의 上原康助 국토청장관은 냉전체제의 종식에 따라 美·日 相互安保條約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일보」, 1993.8.27.

81) 중·소관계는 고르바초프의 「신사고외교정책」에 따라 1988년에 개선되기 시작하여, 1992년 12월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訪中으로 인해 화해분위기가 성숙되었다. 한편 러시아는 SU-27을 중국에 판매(1992.3: 24대, 1992.8: 60대 합의)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體制·理念的 상이성을 인정하되 선린·우호관계 유지를 강화해 나갈 방침을 골자로 하는 新外交政策(1993.2.12)을 채택함으로써 중·러간의 새로운 전략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400만이나 되는 구소련군 병력과 전투능력에 대해 아직도 우려를

로 말미암아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脫冷戰期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중·러 양국이 북한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정치·경제·군사동맹 관계적 성격을 띠었던 1950년대와 달리 緊張緩和와 平等互惠原則에 기초한 경제·무역·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관계적 성격을 띤 북방삼각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적 협력관계에 기초한 북방삼각관계의 형성은 북한의 모험적 군사노선이나 강경노선에 대한 중요한 통제기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⁸²⁾

새로이 형성되는 아·태 지역질서 또한 協力과 調整의 큰 흐름 속에 多者間 安保協力과 經濟協力에 의해 틀지워질 전망이다. 이는 북한의 對中·러關係 토대를 이데올로기 중심에서 실리중심으로 전환케 할 것이다.

그러나 중·러 관계개선이 곧 북한에 대한 중·러간의 견인경쟁을 근본적으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 러시아의 경우 군사적 팽창주의의 포기과 탈이데올로기에 따라 북한에 대한 냉전적 이해관계는 사라진 것으로 분석될 수 있으나, 對北 影響力 確保라는 전통적 이해관계는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중국의 경우 4個

갖고 있다. 陶炳蔚, “21世紀初 아시아-太平洋地域의 安保協力: 中國의 視角,” 聯合通信, 「主要 資料 論文集」, 제4호(1992.9.15), pp. 9~10. 그러나 중국은 러시아와 나호드카 自由貿易港 주변에 經濟協力 지대를 설치키로 합의(1993.7.29)하는 등 經協擴大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82) 朴斗福·金富起, 「最新中蘇關係論」, pp. 245~38.

現代化計劃의 지속적 추진에 따라 일방원조관계의 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향후 동북아 및 아·태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보라는 차원에서의 對北韓 이해관계는 사라질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북한에 대한 중·러간의 견인경쟁은 그 성격과 정도의 차이에 있어서만 변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냉전시대의 정치·군사안보 전략적 가치에 근거한 絶對的 競爭에서 탈냉전시대의 경제안보 전략적 가치에 근거한 相對的 競爭으로 전환된 것이다. 예컨대 1993년 5월 서울을 방문한 러시아 고위관리가 모스크바의 대평양 원유·무기 공급 결정을 전함으로써 대북 영향력 회복을 모색하자, 중국은 1993년 7월 胡錦濤 당정치국 상무위원과 池浩田 국방부장을 대표로 하는 당·정 대표단을 파견함으로써 한·중수교 이후 점차 악화되어 오던 대북관계의 개선에 적극 나섰던 것이다.⁸³⁾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이데올로기 중시적 대내·외정책을 탈피하여 현실중시적 정책을 추진할 경우, 비록 과거와 같은 수준은 되지 못할 것이나, 다시 대중·러 견인경쟁을 통해 국가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나. 領域別 兩國爭點 要因의 變化

먼저 1980년대 후반이후 북한의 대중국·러시아 관계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3) 「로동신문」, 1993.7.27.

북한과 蘇聯의 이데올로기 중심적 同盟關係는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약화되기 시작했으며, 1990년 9월 韓·蘇修交를 계기로 급격히 냉각되었다. 특히 1991년 8월 소련내 보수 쿠데타 발생시 북한이 이를 적극 지지하자, 이를 진압한 후 등장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반감을 노골적으로 표명하였다. 1992년 11월 옐친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방문하여 「한·러 기본관계 협정」을 체결하게 되자 북한·러시아 관계는 全面的 調整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⁸⁴⁾

한편 北韓과 中國의 血盟關係는 북·소관계의 소원화 및 사회주의 진영의 전반적 약화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더욱 밀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경제적 실리를 위해 한국과 교류를 증진하고 관계를 정상화하자, 북한의 대중국 信賴感 또한 실제에 있어 弱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1992년 8월 24일 韓·中修交 이후 북한은 중국에 대해 노골적 비판은 삼가하였으나,⁸⁵⁾ 相互交換訪問 횟수가 줄어들었으며⁸⁶⁾ 간접적 채널을 통해 상호정책을 비난하였다.⁸⁷⁾ 또한 양국간 交

84) 駐北 파제예프 러시아 大使는 이타르-타스통신과의 대담에서 1993년 양국관계가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관계를 지속하였음을 언급함으로써 양국관계의 소원화경향을 시사하였다.

85) 그러나 김정일은 수교 다음날인 8월 25일 내부연설을 통해 “러시아는 믿을 수 없게 되었고, 중국은 믿을 수 없게 되어가고 있는 바, 자신을 믿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신의 원자탄인 김일성 주체사상과 물질적 원자탄(제조중인 원자탄과 노동 3호 미사일)에 의지해야 할 것”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김일성은 “朝·中關係에 있어 침묵은 금이다”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信報」, 1993.5.7, 「世界日報」, 1993.5.8 재인용.

易規模도 1991년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바, 과거와 같은 혈맹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1) 政治的 次元

첫째, 북한의 ‘우리식 社會主義’는 러시아 ‘自由民主主義’와의 乖離化 및 중국의 ‘中國式 社會主義’와의 疎遠 경향을 보이고 있다.

中國은 改革·開放政策을 더욱 深化하기로 결정하였는 바,⁸⁶⁾ 이에 따라 중국에서 ‘4項 基本原則 堅持’ 주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社會主義 理念의 重要性은 상대적으로 더욱 감소할 것이다.⁸⁹⁾

86) 김일성의 80회 생일(1992.4.15)에는 楊尙昆 국가주석등 대규모 고위급대표단이 訪北하였으나, 81회 생일에는 전혀 없었다. 이에 비해 한·중간에는 錢其琛 외교부장의 최초 公式訪韓(5.26~28)이 있는 한편 江澤民 국가주석의 訪韓說이 나오는 등 관계강화조짐이 있다.

87) 북한은 노태우 대통령의 訪中時(1992.9.27) 중국을 “제국주의에 굴복한 변질자, 배신자”라고 비난하였다. “반제투쟁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완성을 위한 근본요구,” 「중앙방송」, 1992.9.27.

88) “鄧小平의 ‘南巡講和’(1992.1.18~2.21),” 漢陽大 中蘇問題研究所, 「中蘇研究」(1992 봄), pp. 259~69; “江澤民의 ‘中國共產黨 第14次 全國代表大會 政治報告,” 漢陽大 中蘇問題研究所, 「中蘇研究」(1992 가을); 「리빙의 정부사업보고 (1993년 3월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8기 제1차회의에서)」(북경: 민족출판사, 1993).

89)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의 발전’을 주장하지만, 사실상 홍콩, 대만, 한국과 같은 ‘儒教的 資本主義’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dmund S. K. Fung, “중국의 최근 변화와 미래에 대한 전망,” 聯合通信, 「主要資料 全文集」 제6호 (1992.10.15),

이러한 중국의 변화는 북한과의 기존 이데올로기적 연대감 또한 부분적으로는 약화시킬 것이며,⁹⁰⁾ 그 결과 중국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유지방법 및 對南·對外政策에 대해서도 과거와 같이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소련의 붕괴는 소련과 북한간의 마지막 연결고리였던 이데올로기를 제거하였으며, 러시아의 反共產主義體制 등장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다. 콜로코프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북·러간에 정상적 국가관계를 유지할 것이나,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고려요소가 될 수 없음을 천명함(1993.4.29)으로써 새로운 북·러관계 설정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사회주의 제도가 선 다음 … 경제건설이 중요한 사업으로 나서지만 … 혁명적 교양사업을 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당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공고히 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나섰다.⁹¹⁾ 김일성 또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우리의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기 위해서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당과 인민

p. 74.

90) 이시다 日本 公明黨 委員長과의 회담시 江澤民 黨總書記는 “中國과 北韓은 6·25당시 함께 戰友로서 강한 友好關係에 있으나, 同盟國은 아니다”라고 발언하였다. 統一院, 「北韓動向」(1991. 10), p. 147.

91) 김정일,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창건 47돛에 즈음하여 집필한 논문, 1992.10.10),” 「로동신문」, 1991.11.2.

대중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해야”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⁹²⁾ 즉 북한은 일부사회주의 국가들 붕괴의 결정적 원인을 내부의 思想的 혼란으로 규정하고, 사회주의의 신념화와 도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따라서 주체사상에 대한 학습강화와 수령·당을 중심으로 일심단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⁹³⁾

요컨대 소련이 주장하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소련의 해체와 自由民主主義 국가인 러시아의 등장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중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中國式 社會主義’는 북한의 ‘김일성주의’ 또는 ‘우리식 사회주의’와 거의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북한의 대중·러관계에 있어 중요한 결속요인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북한 공산주의의 保守的 性向과 統制政策은 러시아의 反 共產主義 性向과 開放政策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주의의 改革的 性向과 制限的 開放政策과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中國은 1992년 10월 共產黨 第14次 全國代表大會에서 13全大 후에 수행된 모든 정책들을 총결산하고 새로운 노선과 정책을 제시하는 한편 당의 지도부를 새롭게 선출하였다. 1978년이래 鄧小平에 의해 주도되어 온 개혁·개방정책을 향후 100년간 흔들림없는 중국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사회주의 상품경제를 한층 심화시

92) “신년사,” 「로동신문」, 1993.1.1.

93) 김정일, “사회주의에 대한 훼손은 허용될 수 없다,” 「근로자」 (1993.3); 統一院, 「北韓動向」 (1993.3), pp. 87~107.

킨 社會主義 市場經濟를 새로운 노선으로 채택하는 한편, 革命 第4世代의 등장을 통한 전면적 세대교체를 단행하였다. 중앙위원회의 41.7%가 신인이며 정치국원 22명중 2/3가 넘는 16명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었다. 한편 楊尙昆 國家主席을 비롯한 8명의 黨元老들이 퇴진한 것과 더불어 개혁·개방에서 신중론을 주장했던 陳雲이 주임으로 있던 당고문위원회를 폐지하였으며 보수적 입장의 이론가들이 당중앙위에서 대거 탈락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의 김영남 부총리겸 외교부장은 14전대회가 중국의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는 데 이바지할 것임을 찬양하면서, 공통의 적과 싸워 이긴 경험이 있는 양국 인민들을 통해 쌍방간의 친선·단결이 더욱 공고해질 것임을 주장하였다.⁹⁴⁾ 그런데 북한에서는 1980년 6차당대회에서 형성된 권력구조가 큰 변화없이 10여년 이상을 지속되고 있는 바, 이는 북한지도층이 보수성향에 고착되어 있음과 더불어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 노선상에 있어 변화가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⁹⁵⁾ 결국 북한의 대중혈맹관계 지속의도에도 불구하고, 혁명1세대가 거의 권력에서 퇴진함으로써 개혁·개방을 지속하려는 중국의 新權力構造는 혁명1세대가 주도하는 가운데 기존의 권력을 지속하려는 북한의 권력구조와 큰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이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94) 「北京放送」, 1992. 12.30, 「內外通信」, 1993.1.4. 再引用.

95) 강성산,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여 나가자,” 「로동신문」, 1993.9.9

또한 중국은 鄧小平이 사망하였을 경우, 등소평의 비중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정치적 혼란이 예상되나 단기적으로 볼 때 천안문 사건 이래 세력이 강화되어 온 江澤民을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⁹⁶⁾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경제발전에 따른 市場經濟의 成長, 공공부문의 약화, 주식시장의 부활, 서비스부문의 성장 등과 더불어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화 요구가 분출되는 동시에 保守와 改革間의 對立 대신 都市와 農村 및 中央과 地方間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현사회주의체제의 해체가 예상된다. 따라서 북·중간의 혈맹적 유대관계는 점차 내용이 없는 ‘명분’과 ‘관념’적 관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의 개혁·개방화 정책의 가속화는 장기적으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정치·군사적 유대관계 지속보다는 한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중시하게 할 것이다.

한편 러시아의 엘친 정권은 反共產主義 태도와 蘇聯 共產黨의 活動禁止를 분명하게 시행하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 새헌법초안」에 따르면 “국가레벨에서는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내세울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공산주의를 유일한 국가이데올로기로 표방해왔던 구소련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96) 현재 江澤民은 黨總書記, 國家主席, 黨中央軍事委 主席, 國家中央軍事委 主席, 黨中央財經領導小組 組長, 中央黨校 교장 등 6개의 주요 중앙부서의 수장을 겸직하고 있다. 반면에 李鵬의 정치적 입지는 최근 급격히 약화되고 있어 이들간의 권력투쟁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러시아 新聞들을 인용하여 “구소련군이 국가와 사회의 통제를 벗어나 방임상태에 있으며 CIS의 유지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모순에 빠져” 있으며, 러시아 지도자들이 세웠던 전략이 지금은 러시아연방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방송함으로써, 현러시아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경제발전에 우선순위를 두는 實用主義的 開放政策은 북한의 스탈린체제와 이데올로기 중시적 폐쇄정책과 본질적으로 대립·갈등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북한이 억압체제를 계속 고집할 경우, 개혁·개방화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는 러시아와의 정치적 관계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남포에서 관광중이던 러시아인들을 북한주민들이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러시아 쿠나제 외무차관은 북한측에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주러 북한 외교관의 국내이동을 제한하고 러시아 정부관리들과의 접촉을 통제하였다. 또한 러시아 최고인민회의 인권위원회는 시베리아의 북한 별목장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지적하고, 북·러임업협정 폐기를 옹호한 대통령에게 제안하였다.⁹⁷⁾ 이에 러시아내 13개 북한 별목장을 폐쇄기로 결정함에 따라 북한 별목공 1,500명은 1994년에 강제철수를 당하게 되었다.⁹⁸⁾ 이처럼 양국관계는 상당히 소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북한의 ‘制限的 對外經濟開放’ 政策路線⁹⁹⁾은 중국의 ‘全方

97) 「國民日報」, 1993.6.19.

98) 「라디오 프레스」, 1993.7.21.

位 對外開放' 政策路線 및 러시아의 實用主義的 對外政策路線과 비록 부분적이지만 유사한 점이 있는바, 북한의 양국과의 관계는 實利中心의 관계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냉전시대 전반기에 이데올로기의 동질성 여부를 대외관계 설정의 중요지침으로 삼았으나, 후반기인 등소평시대에 실리중심중심적 대외정책태도를 표방·추진하다가,¹⁰⁰⁾ 냉전이후시대에 들어와서는 상대국가의 이데올로기와 상관없이 자국의 經濟的 利益과 安保戰略的 利益을 중심으로 대외관계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¹⁰¹⁾ 중국은 「全方位 對外政策」 外交를 통해 經濟發展에 유리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 경제력과 군사력 증강을 통해 亞·太地域에서 強大國으로서의 양향력을 유지·확대하는 것을 대외정책의 기본노선으로 추진하고 있다.¹⁰²⁾ 또한 중국은 1992년 10월 14차 당대회를 개최하여 江澤民을 정점으로 한 후계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사회주의

99) 許文寧, “北韓 對外政策의 變化方向 研究,” 「北韓·統一研究論文集(IV)」(서울: 統一院, 1991), p. 197.

100) 과거 모택동시대의 외교노선이 革命外交路線이었던 반면, 등소평시대의 외교노선은 獨立自主外交路線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것은 과거 '平和共存 五個原則'을 포함한다.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① 이데올로기적 기준의 혁명외교노선 지양, ② 호혜평등의 기초위에 각국과의 경제·무역·기술교류 및 합작 증진, ③ 미·소 양국으로부터 최대한의 독립성과 자주성 확보 등이다. 호요방, “在中國共產黨第12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人民日報」, 1982.9.8.

101) 陶炳蔚, “21世紀 아시아·太平洋地域의 安保協力: 中國의 視角,” p. 28.

102) 申相振,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pp. 56~81.

시장경제체제' 확립을 향후 5년 동안 추구할 정책기조로 확립하였다. 이러한 정책 및 인적변화는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에 있어 이데올로기적 색채를 더욱 약화시키고 實利主義的 흐름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즉 중국은 종래의 무비판적 대북 지지태도를 지양하고 사안별로 판단하여 지지여부를 결정하는 現實主義 노선으로 전환할 것이다.

요컨대 중국은 북한을 理想的·歷史的 紐帶次元에서 '血盟'으로서 인식하기 보다는 자국의 정치·안보전략적 이익을 위한 '友好協力の 對象'으로 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 영향력 증대를 꾀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당분간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고려하여 북한과의 정치·군사적 협력관계도 중시할 것으로 전망된다.¹⁰³⁾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기본적으로 고르바초프의 新思考 外交政策¹⁰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政治經濟的 이익획득을 주요목표로 하고 있다. 중요한 차이점은 러시아 외교정책은 이데

103) 북한과 중국은 현재 인권문제에 대해 미국의 압력을 함께 받고 있기 때문에, 양국은 사회주의적 연대를 강화하여 이를 내정간섭이라고 반박할 가능성도 크다.

104) ① 국제정치의 축은 계급관계가 아니라 여러 국민·국가 간의 관계이다. ② 사회체제에 관계없이 모두 현존하는 국가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③ 현대에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이익보다 전인류적 이익이 우선한다. ④ 국제관계에서 선택의 자유 原則은 보편성을 갖는다. “제 19차 소련공산당 대표자협의회 결의안 (1988.6),” 漢陽大 中蘇問題研究所, 「中蘇研究」, 제12권 3호 (1988 가을), pp. 242~68.

올로기적 목표나 구세주의적 이상을 추구하기 보다는 러시아의 정신적·물질적 부활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목표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이다.¹⁰⁵⁾ 러시아는 구소련의 법적 계승국가로서 구소련이 이들 국가들과 맺은 조약들의 의무를 준수할 것이나, 현재의 조약들이 “便宜의 기준”과 맞지 않을 경우 수정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는 러시아가 구소련 말기와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군사동맹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엘친 대통령은 1992년 11월 訪韓 기자회견시 「조·소조약」의 제1조는 폐기되거나 수정되어야 함을 거듭 천명하였다.

그러나 「조·소 조약」의 군사조항을 폐기 또는 수정하고 핵무기 개발방지를 위한 압력을 가한다는 것이 곧 러시아가 북한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러시아는 實用主義的 對外政策路線에 따라 북한과의 군사동맹관계를 보통국가들 관계인 정상적 외교관계로 전환시키면서, 남북한에 대해 均衡外交를 전개하려 할 것이다.

넷째, 중국과 러시아는 對韓半島 政策으로서 平和維持와 影響力確保의 목표하에 한국과의 관계증진을 공히 추진하고 있는바, 북한의 ‘하나의 조선’정책은 더이상 일방적으로 지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1980년대 후반 중·소의 대한반도정책은 ①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의 維持 ② 南韓과의 經濟交流 및 協力을 통한 實益의 增大 등

105) 楊勝咸, “러시아의 韓半島政策에 관한 政治經濟的 視覺,” 「國際政治論叢」, 제32집 2호, pp. 257~58.

두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점에 있어 공통적이다. 다만 소련의 경우 남한을 대내적 경제난 타결을 위한 동반자로 삼는 한편, 아·태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 및 일본유인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두드러진 점과 북한에 대한 태도에 있어 좀 더 단호하다는 점이 차이점으로 분석되었다.¹⁰⁶⁾

현재 중국은 東北亞에서의 安定維持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대한반도정책의 핵심기조로 설정하고 있다. 중국은 동북아에서 國家安保 증진, 보다 유리한 정치적 위상확보, 보다 나은 경제적 기회의 성취를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조정하고, 남한에게는 접근하는 한편 남북대화를 적극 권유하고 있다.¹⁰⁷⁾

중국은 한국과 소련간의 수교를 통한 급속한 관계발전을 주시하면서 내심 남북한관계에서 실리적 균형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1992년 8월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한·중수교 당일 중국외교부 대변인 吳健民과 당총서기 江澤民은 한·중수교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간 기체결된 조약이나 협정의 효력에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것임을 밝혔다¹⁰⁸⁾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한·소수교(1990.9.30) 직후 구소련을 맹비난하였던 것¹⁰⁹⁾과는 달리 더이상 대안적 선택국가가 없었던 상황임

106) 金光庸 “中·蘇의 對韓半島政策 比較研究,” 漢陽大 中蘇問題研究所, 「中蘇研究」(1992 가을), pp. 227~28.

107) Jia Hao and Ehung Qubing, “China’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sian Survey*, Vol. 32. No. 12 (December 1992), p. 1142.

108) 「文匯報」, 1992.8.24.

109) “달러로 팔고 사는 외교관계,” 「로동신문」, 1990.10.5.

으로 체제유지를 위해 내부단속을 강조하는 한편 간접적 비난만을 할 수 밖에 없었다.¹¹⁰⁾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經濟發展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한국 및 미·일과의 경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한·중간의 정치접촉과 경제적 교류·협력의 증대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에 대한 태도변화를 유도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李鵬 총리는 1993년 2월초 외교부 회의에서 중국은 더이상 북한과 새로운 정치·군사적 협의와 비밀 접촉을 갖지 않을 것임과 북한에게 선진조사장비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반도 정책기조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¹¹¹⁾ 따라서 향후 중국은 북한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지속되기를 바라면서도, 북한의 비타협적 대남정책이나 폐쇄·강경적 대외정책을 더이상 일방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국은 姜成山 總理의 임명을 계기로 북한의 적극적인 對外開放을 기대하면서 정치·외교적 측면지원은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휴전협정 체결 4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전 당시 중국군의 발진기지였던 요녕성 단동에서 대규모 항미원조기념관 개관식을 갖고, 중국의 한국전 참전을 反侵略의 聖戰으로 규정하는 한편, 胡錦濤 신예 당정치국 상무위원과 遲浩田 국방부장 등 고위

110) “우리식대로 살며 투쟁하는 것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고수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조선중앙방송」, 1992.8.25.

111) 「鏡報」, 1993.3.5, 「國民日報」, 1993.3.5. 재인용.

급 대표단을 평양에 파견하였다. 또한 북한정권 수립 45주년(9.9)에 즈음하여 총서기 겸 국가주석 江澤民과 國務員 總理 李鵬, 全人大 상무위원장 喬石은 金日成과 총리 姜成山 앞으로 축전을 보내 北·中間 전통적 친선관계 발전을 강조하였다.¹¹²⁾ 이는 북한의 대외적 고립감 해소와 함께 한반도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력 확보 및 동북아질서 재편시 중국의 지분확보를 위한 다중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중국대표단을 맞이하여 각종 회합 및 연회 등을 통해 쌍방의 '전통적인 친선관계'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였는 바, 한·중수교 이후 소원했던 대중관계를 개선하여 국제적 고립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¹¹³⁾ 그러나 이는 정치·경제적 여건 때문에 중국과 '적대적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북한의 현실적 한계 때문에 이루어진 관계이지, 과거와 같이 '마음 속에서 우리나라와 형성된' 관계는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는 국내정치 및 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韓半島에서의 돌발적 情勢變化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에 러시아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동북아의 안정을 지속하여 시베리아 및

112) 「內外通信」, 1993.9.9.

113) 강성산 총리는 “조국해방전쟁 기간(6.25)중 중국의 지원에 감사하며 쌍방의 혈맹적인 우호관계에 변화가 없음을 확신함”을 강조하였다. 「로동신문」, 1993.7.27; 김일성은 駐평양 중국대사 鄭義의 이임방문시 “조·중친선은 항구하며 … 두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은 그 어떤 힘으로도 파괴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北京放送」, 1993.8.24.

극동개발에 전념코자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는 북·러관계가 더 이상 사회주의 국제주의나 사회주의 동맹으로서의 특수한 관계는 아니지만, 國際慣例에 따른 普遍性에 근거하여 평화적 우호관계를 유지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¹¹⁴⁾ 즉 이제와서 러시아가 남한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북한을 소외시킬 경우, 북한은 더욱 고립감에 빠진 나머지 호전적이 되어 남북한관계를 악화시켜 한반도의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남북한과 同時修交國이라는 이점을 활용하여,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 기반조성자로서의 역할을 부각시켜 나감으로써 새로이 형성되는 東北亞 및 亞·太秩序에서 주도권을 모색할 것이다.¹¹⁵⁾ 따라서 러시아는 한국과는 옐친 대통령의 訪韓時 합의된 同伴·協力關係를 정치·경제·군사·과학기술·문화 등 전분야에 걸쳐 확립해 나갈 것이다. 북한과도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결국 이데올로기적 갈등에서 오는 疎遠關係를 해소하고 경제·군사분야에서 相互補完的 協力關係 회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러시아를 제외한 독립국가연합 구성국들

114)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대표단(단장:과학기술위원장 이자방)이 러시아(1993.2.4~6, 2.15~18) 및 우크라이나(2.8~14)를 방문하였을 때, 양국은 과학기술협조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양국장관회의 및 과학기술협력 실무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였다.

115) 러시아는 「외교정책 기본방향에 관한 보고서」에서 “러시아 정부는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며, 한반도의 통일이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된다”고 정책방향을 밝혔다. 「서울신문」, 1993.2.16.

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크스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등 4개국을 순방(1993.6.3~22)하여 각국 대통령 및 국회의장을 면담하는 한편, 양국 의회간 협조협정(카자흐스탄) 및 양국 무역·경제협조협정(우크라이나, 벨로루시)을 체결하여 양국간 정치·경제적 협력증대를 적극 모색하였다.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駐韓美軍 撤收에 대한 태도는 북한의 對중·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이슈이다. 중국은 향후 日本의 軍國主義的 팽창에 대비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일본의 위협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이 현대화에 성공하여 동북아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때까지 미군의 급격한 철수에 따른 권력 공백상태의 발생보다 현재 상태의 지속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¹⁶⁾ 한반도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중국은 남북한의 UN동시가입(1991.9.17) 이전까지는 북한의 통일방안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였으나, 이후에는 북한방안 지지태도를 견지하면서도 남북한의 대화와 협상 및 주변국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 또한 세력균형자로서의 미군의 아·태지역 주둔을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북한도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간간히 언급해 왔으며, 특히 1993년 6월 11일 합의된 「朝·美 공동성명」을 통해 “40여년간 지속돼 온 쌍방의 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었음”을 주장

116) Jia Hao and Ehung Qubing, “China’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pp. 1149, 1156.

하고 있다.¹¹⁷⁾ 따라서 주한미군 및 대미정책은 과거와 달리 북한의 對中·러관계에 있어 큰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다섯째, 중국과 러시아에서의 改革指向의 人士들의 全面 浮上은 과거 김일성-모택동 및 김일성-스탈린간의 관계에서 보여주었던 양국 정치지도자간의 私的 紐帶와 이에 따른 國家的 聯帶가 더이상 같은 강도로 지속되기 어려울 것임을 예견케 한다.

그동안 북·중관계가 긴밀할 수 있었던 요인중의 하나는 중국정치의 실질적 결정권자인 毛澤東·周恩來·鄧小平 등 元老集團¹¹⁸⁾과 북한의 金日成이 個人的 親分關係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 14차 당대회 이후 젊고 개혁지향적인 인사들이 전면에 부상하였는 바,¹¹⁹⁾ 김일성 체제 및 김일성 사후 등장할 김정일 체제에 대해 과거와 같이 일방적 호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북한은 김정일의 대내외적 위상 제고와 경제난 타결을 위해 김정일의 중국방문(1993.3.8~14)을 계획하였으나, 중국으로부터 거절당하였다. 그 이유는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재개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악화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북한의 강택민 총서기와의 북경회담 제안에 대해

117) 姜錫柱 外交部副部長 발언, 「로동신문」, 1993.6.18.

118) 1992년 이후 중국의 八大元老 중 李先念, 王震이 차례로 사망하고 현재 鄧小平, 陳雲, 楊尙昆, 簿一波, 彭眞, 宋任窮 등이 생존하고 있으나, 등소평만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19) 김일성과 가까운 楊尙昆(86세) 국가주석이 퇴임하고, 북·중관계가 동맹국관계가 아님을 천명한 바 있는 江澤民 黨總書記가 겸임하게 되었다.

중국의 당서기급의 장춘회담 대안이 상호간에 조정되지 못함으로써 취소된 것으로 알려진다.¹²⁰⁾ 물론 중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 상실을 원치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친분관계는 계속 유지할 것이다.¹²¹⁾ 중국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변방인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김정일 체제에 대해 협조할 일에 대해서는 협조할 것이다. 즉 그들이 볼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북한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방문도 지속하는 한편 소규모의 대북 경제·기술적 지원도 제공할 것이다.¹²²⁾ 따라서 단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등소평과 북한의 김일성이 생존하는 한 양국관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등소평이 사망할 경우 중국원로들은 정치일선에서 거의 퇴진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중국의 대북한정책은 더욱 현실중시 경향을 띠게 될 것이다. 북한지도부는 이에 대한 압

120) 「문화일보」, 1993.4.12. 한편 金正日의 國防委員長 추대와 관련 江澤民 黨總書記가 축전을 보내(1993.4.14) 양국 인민·군간의 친선이 공고히 발전할 것을 축원한 것은 최소한의 기존우호관계를 지속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1) 중국은 휴전협정 40주년을 계기로 丹東에 抗美援朝紀念館과 기념탑을 건립하는(1993.7.25) 한편, 14全大會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된 胡錦濤를 단장·국방부장 池浩田을 부단장으로 하는 대규모 당·정대표단을 평양의 기념행사(7.26)에 파견하였다. 「로동신문」, 1993.7.27.

122) Ralph N. Clough, “한국과 중국간의 장래, 과연 낙관할 수 있는가?” 정재문 역,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 김영삼」 (서울: 오름, 1993), pp. 53~70.

박을 느끼게 될 것이며, 그 결과 북·중 혈맹관계는 더욱 퇴색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한·중 수교이후 북·중간에는 긴장관계가 조성되어 있고, 그 결과 金正日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으로 점차 중국과 북한 고위지도자간의 유대관계는 약화될 전망이다.¹²³⁾ 따라서 중국이 과거처럼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정치·외교·경제·군사적 지지나 지원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러관계 현황을 살펴볼 때 러시아의 경우 개혁적 성향을 지닌 정치·외교 및 경제 엘리트들은 북한과 러시아 경제회복과 실리추구를 위하여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원하나, 보수적 성향을 지닌 군사엘리트들은 전통적, 군사적 유대를 북한과 지속하기 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¹²⁴⁾

123) *New York Times*, 1993.4.11.

124) 1992년 1월 엘친 대통령 특사로 訪北한 로가초프 전외무차관은 “북·소간 우호협력조약을 현실에 맞게 개정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과거 군사동맹이 통상적 관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반면 1992년 3월 2~3일 삼소노프 CIS군참모총장이 訪北하여 「1992~93년도 군사교류협력협정」을 체결하여 기왕의 유대관계를 지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3월 17~19일 코지레프 외상은 訪韓期間中 북·소조약을 재검토할 것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다. 그러나 4월 20일 CIS통합군 콜리코프 원수가 북한 인민군창건절 참석을 위해 訪北하였고, 김일성의 대원수 추대에는 축전을 보내 군사적 유대를 보여주었다.

2) 經濟的 次元

첫째, 社會主義 發展戰略에 있어 북한은 러시아와 달리 社會主義를 견지하고 黨의 領導를 확고히 보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권력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中國과 共通點을 가지나, 구체적인 경제정책과 노선에 있어서는 중국과도 差異點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오늘날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모형을 간략히 살펴보면, 소련과 동구와 같이 기존 사회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새로운 체제를 창조하는 것과 중국·월남·북한 등과 같이 기본적으로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와 권력구조를 유지하면서 점진적 개방을 통하여 경제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수용함으로써 서방선진국가와 경협을 형성해 가는 것으로 이분할 수 있다.

중국은 현단계 중국사회의 基本矛盾을 생산관계보다 生産力의 低水準에 기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生産力 發展의 저해요인인 이데올로기 우선주의 및 무원칙 평등주의를 극복할 것과 이를 위해 社會主義市場經濟 체제를 토대로 한 中國式 社會主義의 건설을 黨의 公式路線으로 채택하고 高度成長政策을 정부주도하에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¹²⁵⁾ 중국은 그동안 북한에 대

125) 중국은 鄧小平의 '南巡講和'(1992.1.19~2.20) 이후 경제성장률의 상향조정, 물가개혁, 소유제개혁, 기업개혁 등을 추진하였고 李鵬 총리의 「政府工作報告」(1993.3.15)를 통해 2000년까지 GNP 倍增(1990년 기준)목표를 3년 조기달성키로 결정함으로써 改革·開放政策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 中國式 經濟開放政策을 채택할 것을 권유해 왔다. 金日成의 訪中時(1991.10.4~14) 江澤民 黨總書記, 李鵬 總理 등은 대외경제협력력을 토대로 한 북한의 개혁·개방이 經濟難 극복에 도움이 될 것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楊尙昆 主席의 訪北時(1992.4.13~17) 鄧小平의 南巡講和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화가 가속화하고 있음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 ‘우리식 사회주의’를 이론적으로 정식화하여 기존 마르크스주의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회주의 원리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북한주민의 인간개조를 통한 사회주의 건설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¹²⁶⁾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社會主義 發展戰略(또는 改革·開放化 政策)은 대체로 중국식 모델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모델과는 차이가 있다.¹²⁷⁾ 兩國 發展戰略의 유사점은 정치적 保守와 경제적 對外開放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도 경제난 해결을 위해 대외개방을 수용해야 하며 동시에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체제의 유지를 위해 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상이점은 중국의 市場經濟指

126) 물론 1984년 합영법과 1992년 외국인 투자법 등의 제정 및 선봉·나진 自由經濟貿易地帶의 설정 등은 점진적 변화의 모습을 보여 주나, 이는 대외경제부문에 한정된 것이며, 대내경제부문에 있어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이다.

127) 김정일, “사회주의에 대한 환방은 용납할 수 없다(1993.3),” 김정일은 이 담화에서 사회주의 민주주의이며 중앙집권제이며 집단주의인 것으로 규정한 후, 일부 나라에서(러시아와 중국 지칭) 사회주의적 소유를 사적 소유로 전환시키는 것은 사회주의의 배신자적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向的 經濟改革과 더불어 地方政府 強化的 政治變化를 북한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은 자본주의적 요소를 배격하고 社會主義生産樣式을 고수할 것임과 다원주의를 격퇴하고 프롤레타리아 獨裁와 黨과 首領 中心의 領導를 더욱 철저히 관철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¹²⁸⁾ 경제개혁과 권력의 분산화가 경제난을 해결하기 보다 오히려 체제붕괴를 촉발시킬 것으로 북한은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장경제체제의 운용은 정치로부터 經濟의 自律性이 보장되어야 가능한 것인 바, 유일사상체제와 유일지도체제로 경직화된 북한에서 이의 실현이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와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그 차이가 더욱 커질 것이며, 따라서 양국의 경제적 관계는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¹²⁹⁾

이와 더불어 UNDP 주관하의 두만강개발계획에 있어 북한과 중국과의 긴장관계형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북한은 현재 약 75억 달러의 對外債務를 지고 있고, 구소련의 해체에 따른 경제원조의 중단과 경화결제의 요구로 심각한 경제적 곤경에 처해 있다. 이같

128)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조선중앙방송」, 1991.5.27; 김정일,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로동신문」, 1992.2.4; 김정일, "혁명적 당 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로동신문」, 1992.11.2.

129) 중국은 북한의 고위 당·정 관리들을 초빙하여 심천 등의 특구들을 시찰케 하는 한편, 1993년부터 양국간 교역시 경화결제제도를 도입키로 한다는 방침을 통보하였다(1992.12.29). 「中央日報」, 1993.1.1.

은 처지에 있는 북한이 나진·선봉지구를 자체 자금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日本과 修交時 받아낼 賠償金과 韓國과의 雙務的 經濟協力方式, 그리고 UNDP를 통한 多者間 協力方式을 동시에 추진하여 開發資金問題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선봉지구 개발문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미묘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북한의 선봉지구개발 구상은 중국의 훈춘 특구 및 두만강개발계획을 겨냥한 대안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바, 중국과의 경합적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북한은 중국과의 쌍무적 관계에서 적지않은 외교적 갈등과 마찰에 직면할 소지가 없지 않다.¹³⁰⁾

한편 러시아는 1991년 7월 3일 民營化法에 의해 자본주의 방식을 지향하도록 산업구조의 조정을 시작하였고, 1992년 6월 11일 시장경제운영에 필요한 개인소유의 폭을 확대하는 등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 구소련의 경제가 軍產複合體에 의해 구성·운영되어 왔었던 바, 수요와 생산에 대한 정보의 유통이 존재하지 않고 기업창설을 위한 자본시장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단시일 내에 민영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資本主義 生産樣式으로의 轉換은 공산주의의 부활이 기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한 大勢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로동신문」의 “최근 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의

130) 金成勳, “豆滿江 開發과 東北亞 經濟圈,” 「中國研究」(1993 여름), pp. 149~56.

정세”와 “최근 로씨야 정세” 기사를 통해 러시아 정부가 각종 데모에 봉착하고 있으며, “지금 로씨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제개혁로선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인용보도함으로써, 러시아 정부의 자본주의 도입에 대해 반감을 표현하고 있다.¹³¹⁾ 또한 북한은 사회주의로의 길은 인류의 역사적 법칙이라고 강변하면서, 사회주의가 일부국가에서 좌절된 것은 경제건설만 잘하면 만사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政治事業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¹³²⁾ 결국 북한과 러시아간에는 종전과 같은 경제교류 및 협력관계를 갖기가 더이상 어려우며, 러시아 국내정세의 안정과 북한의 대응정책이 정립될 때까지 경제교류·협력의 침체는 지속될 전망이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의 社會主義 友好價格에 근거한 一方援助的 求償貿易 및 經濟協力을 지양하는 한편, 國際市場價格에 기초한 正常的 交流 및 經濟協力の 설정을 모색하고 있다.

구소련과 중국은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의 우방국이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북한의 제1, 2위 교역대상국이었다. 그러나 1991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硬貨決濟와 소련의 해체에 따라 이들 국가간의 경제관계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먼저 북·러 경제관계를 살펴보면 1985~89년 사이에 舊蘇聯은 북한 전체무역의 50%이상을 차지하는 最大 貿易對象國이었다. 그

131) 「민주조선」, 1993.8.20.

132) 「로동신문」, 1993.6.20 사설.

러나 서울올림픽에 소련이 참여한 이후 양국 무역규모는 1988년 28억달러에서 1992년 2.9억달러로 약 1/10로 줄어들었으므로 중국(7억달러), 일본(4.8억달러)에 이어 3위로 전락하였으며, 북한 총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8%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렇게 북·러무역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불안에 따른 생산성 감퇴에 기인하는 것과 러시아가 대북 무역조건을 社會主義 友好價格에 근거한 청산계정으로부터 國際市場價格 기준의 硬貨決濟로 조건을 변경함으로써 북한의 외화부족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¹³³⁾ 구소련과 북한은 1990년까지 청산계정에 의한무역을 수행해왔으며, 그 결과 청산계정시 구소련의 무역흑자분은 실제에 있어 대북한원조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러시아는 1991년에 부분적으로 경화결제를 시작하였고, 1992년에 전면적으로 경화결제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우호가격과 물물거래에 의해 소련이 북한과 거래하던 연간 80만톤에 달하던 원유는 경화결제로 인해 1991년 4만톤, 1992년 3만톤 정도로 그 물량이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기타 석유제품·석탄·괴탄 등 연료와 에너지원 수입 또한 1/10로 감소하였다. 그결과 북한은 에너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독립국가연합의 다른 공화국과 貿易協定 체결 및 經濟共同委 창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과거수준으

133) 루블의 대미달러 환율이 1990년 11월 1일 기준으로 1달러=0.6742에서 1달러=1.6458루블로 약300% 평가절하됨으로써 달러를 기준으로 환산할 때 교역규모가 작게 산정되는 이유도 있다. 「內外通信」, 848호 (1993.5.20).

로 회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相互經濟協力を 지속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북·러관계의 혼란이 지난 2년간 지속되어 왔으나, 이제 1992년 12월 양국은 시장경제와 자유가격에 기초한 무역 및 경제교류를 위한 새로운 기본협정에 서명하였다. 이것은 북한당국과 러시아연방간의 최초의 상호무역의정서가 된다. 이 의정서는 양국 모두 잠재적 협력을 위한 지역과 유대를 지속하기 원하는 의도가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¹³⁴⁾ 또한 소련은 그동안 북한의 경제개발에 30억루블이상 투자했는데, 경제관계를 단절시키지 않고 이를 회수하려 한다.¹³⁵⁾ 그러나 러시아의 政治·經濟的 不安에 따른 生産性 減退와 북한의 수출상품 부족으로 인하여 短期的으로 볼 때, 양국 간 互惠的 交易關係의 재형성 및 경제협력의 재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中·長期的으로 볼 때, 러시아는 대내 경제발전을 위해 軍事裝備의 海外販賣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바, 한국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도 상업적인 방어용 무기를 판매할 것이

134) Vasily Mikheev, "Reforms of North Korean Economy: Requirements, Plans and Hope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5, No. 1 (Summer 1993), pp. 91~94.

135) 북한은 1991년 2억9백만루블을 상환하였으나 1992년 13억루블을 상환하지 못했으며, 1993년에도 10억루블 이상을 물품으로 변제하기로 합의되어 있다. 트카첸코, "러시아·北韓關係의 변화와 兩韓關係 영향," 聯合通信, 「主要資料 全文集」 제 21호 (1993.6.1), p. 108.

다.¹³⁶⁾ 또한 러시아는 시베리아와 극동을 개발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인 바, 두만강유역 개발 및 북한경유 시베리아 송유관 건설계획 등 실리를 확보할 수 있는 투자협력이나 경제교류는 계속 유지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과거와 같이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一方援助的 성격의 무역 및 경제협력관계는 지양하되 正常的인 교역관계는 회복하려 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초기에 엘친정권의 전복 가능성과 러시아의 사회주의에로의 회귀를 기대하며¹³⁷⁾ 관계단절의 고통을 對中密着 및 「南南協助」와 대서방 관계개선, 그리고 심지어는 남한기업의 참여도 허용되는 東北亞 多者間 經濟協力을 통해 해소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는 지난 1980년대 중반 이후 과도하게 對蘇依存的이었기 때문에 앞의 대응조치들을 통해 경제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인바, 북한은 결국 對러시아 관계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¹³⁸⁾

136) 러시아는 엘친 대통령이 적법이든 불법이든 모든 종류의 군사장비를 판매하겠다고 선언(92.11)한 후, 외무부가 경쟁력있는 무기 판매 강행을 골자로 하는 「外交政策 原則」 초안을 채택(92.11)함으로써 對外武器 판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137) 북한은 구소련 선포 70주년(1992.12.26)을 맞아 러시아 共產勢力이 記念集會를 갖고 구소련체제로의 復歸를 주장한 사실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조선중앙방송」, 1992.12.27.

138) 북한 金正宇 대외경제협력위 부위원장이 구소련 붕괴이후 최고 위급 인사로서 러시아를 방문하여(8.6~15) 러시아의 대북투자재개·北韓의 對러채무 변제·羅津港의 국제항으로서의 개발 및 개방·정부간 무역협정문제 등을 논의함으로써 경제관계 복원을 모

한편 北·中 經濟關係를 살펴보면 1980년대 북한의 총교역규모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였으나, 1985년 이후 연평균 5억달러 규모의 교역이 이루어져 왔고, 1989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러시아와의 경제교류 및 협력이 위축되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확대한 것에 기인한다. 현재 북한은 이념으로 연결된 중국과의 혈맹적 동지관계를 토대로 지속적인 경제지원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국제적 탈이데올로기 추세와 국내의 개혁·개방정책 지속적 추진에 부응하여 대북무역에 國際的 去來慣行을 적용함으로써 과거 一方的 支援性格의 우호무역 기조나 원조성 교역¹³⁹⁾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¹⁴⁰⁾ 그러나 新貿易方式은 북한에게 큰 경제적 충격을 주며, 이에 따른 한반도의 불안정화는 중국의 국가이익에도 배치된다는 점을 중국은 고려하여 1992년에는 30%정도만 경화로 결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색한 것으로 알려진다. 「韓國經濟新聞」, 1993.8.12.

139) 중국은 매년 1億元(약 1,800달러) 상당의 식량(쌀, 보리, 옥수수 등)을 無償 공여하고 있으며, 石油 공급량 120萬톤중 60萬톤과 有煙炭 235萬톤을 友好價格(국제시세 50%)으로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140) 1989년부터 항공기 수출비용과 북·중간 운수부문비용은 달러로 결제되었다. 1991년 5월 이봉 총리 방북시 국제시장가격과 경화 결제에 의한 신무역방식으로서의 전환이 통보되었다. 1992년 1월 평양에서 1992년 정부간 무역을 물물교역에서 현금결제로 전환할 것을 기조로 하는 「조·중 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內外通信」, 848호 (1993.5.20).

한편 중국은 1993년부터 북·중무역에 있어 현금결제를 다시 요구하는 동시에,¹⁴¹⁾ 1991년 이래 원유수출에 있어 공급가격을 1990년 58달러에서 1991년 126달러(국제시장가격 톤당 131달러)로 현실화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현금결제 요청은 기왕에 경화결제되어 오던 30% 부분과 20%에 달하는 민간부문의 국경무역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칠 것이나, 청산계정에 의해 운영되어 오던 50% 수준의 政府間 交易(주로 원유·석탄·코크스·군수물자 등)에는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이러한 國際市場價格과 硬貨決濟에 의한 교역방식이 양국간에 정착됨에 따라, 더이상 무역적자를 허용할 수 없게 하는 점이 양국간 교역확대를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¹⁴²⁾

더욱이 중국이 현재는 원유수출국이지만, 향후 중국내 산업발전이 심화됨으로써 원유 및 석탄에 대한 자체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1995년경부터는 原油輸入國으로 전환될 전망이며, 결국 원유·석탄 등 광물성 원료의 대북한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으로부터의 에너지원 도입 감소는 러시아로부터의 원유공급 격감에 따라 심각한 에너지난을 기왕에 겪고 있는 북한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¹⁴³⁾

141) 1992년 12월 28일 中國貿易部 李嵐清 부장은 訪中 중인 북한대외경제위원회 강정모 부위원장에게 1993년부터 중·북무역거래에 있어 현금결제를 요청하였다. *China Daily*, 1992.12.29.

142) 조은호, “최근 중국-북한 경제관계 변화동향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한무역진흥공사, 1993.2), pp. 15~25.

143) 북한의 에너지 자급자족정책에 따라 1차 에너지원에서 유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석탄 70%, 수력16%, 기타4%)에 불과하나, 공

〈표 1〉 북한의 대중·러시아 원유도입 현황

(단위: 천톤, 단가:달러/톤)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중 국 (단가)	1237 (63)	1202 (63)	1073 (60)	1063 (58)	1102 (126)	
러시아	800	640	506	410	40	30

출처: 「内外通信」, 주간판 848호, 1993.5.20 참조.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정부간 협정에 따른 청산교역보다 쌍방간 필요물품을 서로 교환하는 物物交換 방식의 國境貿易 (또는 邊境貿易)을 확대하고 있다. 예컨대 길림성 훈강시에서 개최된 북한·중국간 국경무역상담회(1993.5.25)에서 양국은 총 30개분야, 1억달러 이상의 계약에 합의하였다. 또한 북한은 1993년 5월에 평북 신의주, 자강 만포, 함북 남양 및 회령, 양강, 혜산 등 5개지역 총 140~150여개의 중국상품시장을 개설하였는 바, 일정한 임대료를 수수해 이득을 확보하는 한편, 변경무역을 양성화·활성화함으로써 정부간 교역위축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중국이 東海로의 직접진출이 지리적으로 불가능한 점과 東北三省의 안정적 개발을 필요로 하는 점에 착안하여, 향후 이를 지렛대로 삼아 중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지속하고자 할 것이다.¹⁴⁴⁾

업생산·수송수단의 운용·선박의 어로작업 등 부문에는 결정적이며, 그 결과 북한경제의 성장은 더욱 지연될 것이다.

- 144) 북한은 중국에게 淸津 東港 개발을 합의해 줌으로써 出海權을 확보케 하였다. 統一院, 「北韓動向」(1993.6), pp. 68~71; 또한 羅津港의 전면사용을 골자로 하는 두만강지역개발에 관한 雙務協力協定을 체결하였다(1993.3.19). 「中央日報」, 1993.3.29.

그런데 중국은 1991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제1교역국이 되었으나, 북한에게 있어 구소련과의 무역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경제의 어려움도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북한의 對蘇輸入은 1988년 17.5억 달러, 1989년 15억달러, 1990년 7억달러, 1991년 1.9억달러, 1992년 2.2억달러로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북한의 對中輸入은 1988년 3.5억달러, 1989년 3.8억달러, 1990년 3.6억달러, 1991년 5.2억달러, 1992년 5.4억달러로 약간의 신장만 있었을 뿐이다.

한편 양국 무역은 그나마 1991년 수준 정도의 신장도 장래에는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은 수출상품의 부족, 낮은 기술수준과 조악한 품질, 수입에 필요한 경화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중국 또한 한·중수교 및 동북아 정세의 변화 그리고 내부경제발전의 지속적 추진 등의 요건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이데올로기 위주의 시혜적 협력관계에서 실리위주의 호혜적 협력관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북·중무역은 단기적으로 볼 때 큰 증가가 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軍事的 次元

첫째, 북한의 核武器 開發疑惑에 대한 러시아의 단호한 반대입장과 中國의 ‘韓半島 非核化’ 지지입장은 현단계 북한의 대중·러 관계에 있어 疎遠化 要因이 되고 있다.

중·러 양국은 모든 核保有國이 그러하듯이 동북아지역의 여타

국가들이 새로운 핵보유국으로 등장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러시아의 경우, 한·러 정상회담(1992.11.19)에서 엘친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개발 노력을 중단시킬 것임과 북·러 우호조약을 폐기 또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임을 천명하였다.¹⁴⁵⁾ 또한 쿠나제 외무차관이 방북(1993.1.27)하여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제1조의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개정을 논의하였으며, 북한에게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할 것과 모든 핵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에 개방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진다.¹⁴⁶⁾ 한편 러시아는 북한으로 출국하려던 36명의 핵전문가들을 모스크바 공항에서 체포함으로써(1992.12.8)¹⁴⁷⁾ 북한으로의 핵기술 누출 통제를 실증하였고, 러시아 해외정보처는 북한이 핵개발 직전단계에 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¹⁴⁸⁾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대해 강력한 저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同盟的 北方三角關係의 실질적 終言을 의미한다. 북한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인 미국 및 일본으로부터의 압력뿐만 아니라, 구사회주의 형제국으로서 북한 핵기술의 원조이며 경제적 후원국이었던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압력에도 봉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대북한정책은 러시아 정치체제가 보수·반동으로 회귀하지 않는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45) 「中央日報」, 1992.11.20.

146) 「中央日報」, 1993.2.6.

147) 「中央日報」, 1993.1.13.

148) 「서울신문」, 1993.1.30.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러시아가 독립국가연합 구성국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큰 위협이라고 반박하였다. 더욱이 러시아의 동해 핵폐기물 投棄와 관련하여, 이는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면서 “인류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하였다.¹⁴⁹⁾ 또한 러시아가 북한의 NPT복귀를 계속 촉구하면서¹⁵⁰⁾ UN의 대북 제1차 결의안 채택에 적극 참여하자, 북한은 이를 美帝國主義 패권책동에 복종한 처사라고 비난하는 한편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였다.¹⁵¹⁾ 이는 한·소수교직후 북한이 맹렬히 비난한 이후 그동안 자제해오던 태도와 달리, 북한의 핵문제를 중심으로 양국관계가 다시 냉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中國은 그동안 북한에게 사회주의 형제국 및 정치·경제적 후원국으로 남아 있었다. 북한과 전통적·혈맹적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은 주변국가들이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協商과 對話를 통한 解決을 제시하였다.¹⁵²⁾ 그러나 중국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분명하게 표명하며 韓半島의 非核化를 지지해 왔다.¹⁵³⁾ 중

149) 1993년 4월 13일 북한의외교부 성명.

150) 1993년 4월 15일 卍지레프 外務長官과 1993년 5월 26일 그라초프 國防長官의 발언.

151) 1993년 5월 7일 손성필 駐러시아 대사의 발언.

152) 1993년 4월 21일과 1993년 5월 24일 전기침 외교부장의 발언; 1993년 5월 13일 吳建民 外交部 대변인은 UN安保理의 對北韓 制裁措置에 反對함을 밝혔다.

국은 북한의 핵사찰문제에 대해 核安全協定 署名(1992.1.30) 以前 시기까지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IAEA의 核査察을 수용하도록 설득하였고, 以後에는 北韓의 조치에 환영을 표하면서 남북한 합의에 의한 相互査察을 수용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개발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개발을 연쇄적으로 유도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남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며, 북한이 화학무기 금지조약에 가입하기를 바라며, 남북관계는 當事者들의 對話를 통해 긴장완화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최근 재천명하였다.¹⁵⁴⁾ 북한이 국제핵사찰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 제재 움직임이 대두될 것인바, 중국은 제재성격이 비군사적인 것이라면 이에 대해 적극 반대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¹⁵⁵⁾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제적 비난을 모면키 어렵고, 나아가 경제발전을 위한 서구의 자본·기술협력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중국을 假想敵國으로 간주하고, 북한 全體兵力의 40%를 중국과의 집결지역에 이동배치하는 한편 핵문제에 있어 중국의 보호우산을 포기하고 獨自的 解決方針을 채

153) 1991년 11월 28일 錢其琛 外交部長의 發言; 1991년 12월 15일 李鵬 總理의 發言; 1993년 6월 10일 전기침 외교부장은 한반도의 비핵화 지지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對韓半島 정책기조임을 재천명하였다.

154) 錢其琛 外交部長 發言. 「朝鮮日報」, 1993.2.19.

155) 중국은 실제로 UN안보리의 대북한 제1차 결의안 채택시 기권함으로써(5.12) 대북제재를 묵인하였다.

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⁵⁶⁾ 이에 따라 北·中國境에서의 소규모 衝突說¹⁵⁷⁾이 대두되는 한편 북한은 대미협상에 전례없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문제는 북·중관계 疎遠化의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¹⁵⁸⁾

둘째, 韓·中修交 및 韓·러 基本條約의 체결에 따라 북한의 대중·러동맹조약은 조정단계에 들어갔으나 北·中間 軍事交流는 지속되고 있으며, 北·러間에도 새로운 軍事交流 및 協力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1990년대 軍의 주요임무로서 ‘領土·領空·領海 主權과 海洋權益保衛’를 설정하였으며,¹⁵⁹⁾ 軍階級制의 부활(1988.10)이후 국방비를 매년 10% 이상 증액하고 있다.

북한은 한·중수교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군사교류 및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러시아를 포함한 독립국가연합 공화국들과의 군사관계도 새로이 모색하고 있

156) *The Washington Times*, 1993.4.30; 「朝鮮日報」, 1993.7.13.

157) *The Washington Post*, 1993.4.28.

158) 1993년 5월 29일 당가선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북·중관계의 소원화 사실을 인정하였다.

159) 1992년 10월 제14차 黨大會에서 채택.

최근 中國의 國防費 추이

년 도	'91	'92	'93
국 방 비 (億달러)	63	67.6	73
증가율(%: 元貨기준)	12.1	13.8	14.9

주: 일본: 377億달러, 미국: 2,743億달러 ('93)

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중수교 직후인 9월 초 해군사령관 김일철 대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해군 친선참관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당시 당 중앙군사위 비서장이었던 楊白水 등과 만나 양국 군간의 친선협력증진 문제를 논의한데 이어 11월 말 북한인민군 부총참모장 전재선 대장을 단장으로 한 군사친선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한편 중국도 10월 군총참모부 장비일군 대표단(단장 裝備部長 소장 賀鵬飛)등 각종 군사대표단이 방북함으로써 北·中 軍閥의 친선교류증진을 과시하였다. 러시아로부터의 군사원조 및 협력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북한으로서는 향후 중국의 군사원조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 1980년대에 북한의 防空網 구축 및 미사일 개발에 지원을 하였으나, 화해와 협조의 냉전후기시대 도래와 한·중수교에 따라 對北軍事協力を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 중국 군부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한국전에 참전한 경험이 있어, 북한에 대한 심정적 동조가 대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중국은 한·중수교로 불만을 갖고 있는 사회주의 동맹국인 북한을 달래기 위한 차원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물질적 군사지원보다 정신적 차원의 정치·군사적 우호관계를 지속시키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北·러 軍事關係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과 더불어 한·러 기본관계조약 체결에 따라 기존 군사적 동맹관계의 조정기를 맞이하고 있다.¹⁶⁰⁾ 1992년 3월에 獨立國家聯合(CIS)의 군총참모장 삼소노프를 단장으로 한 군사대표단이 방북하여 「1992~93 군사협력의정

서」에 조인함으로써 軍人士交流 및 武器販賣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동월 코지레프 러시아 外務長官은 訪韓하여 향후 대북 군사협력사항을 한국과 사전협의할 것임과 한국과 군사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엘친 대통령은 1992년 11월에 방한하여 노태우 대통령과 頂上會談을 갖고 대북한 무기공급을 중단했음을 통보하는 한편, 「조·소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의 개정이나 제1조 전쟁조항의 수정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¹⁶¹⁾ 이후 게오르기 쿠나제 외무차관이 방북하여(1993.1.29~2.1)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과 만나 자동군사개입 조항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를 함께 거론하였다.¹⁶²⁾ 또한 그라초프 국방장관

160) 소련은 1968년 1월에 동맹조약의 제1조 전쟁조항의 이행조건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① 북한이 대규모의 무력침입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 ② 북한이 제3국 정부에 대한 의무때문에 분쟁에 휘말려 들지 않은 경우, ③ 조약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는 양국간의 토의가 전쟁행위에 선행한 경우, 소련해체 이후 러시아는 북·소간의 모든 조약의 계승자이며 특히 전쟁조항을 포함한 동맹조약은 남한의 북한침입이 북한의 도발에 의한 경우가 아닌 경우 준수될 것임을 통보하였다. 트카첸코, “러시아·北韓關係의 변화와 兩韓關係 영향,” 聯合通信, 「主要資料 全文集」, 제21호 (1993.6.1), p. 100~02.

161) 러시아는 구소련 시대에 몽골 및 인도와 체결한 동맹조약을 1993년 1월 19일 및 1월 27일에 각각 개정하였는 바, 기존 조약의 이념·군사우선의 냉전적 조항을 삭제·수정하였다. 북한과의 새로운 조약형태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162) 러시아는 자동군사개입 문제에 있어 선제공격이 아닌 경우에 한해 피침여부를 판단한 뒤, 러시아의 헌법절차와 유엔헌장 내용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한다는 조건을 북한에게 제시하였

은 조·소 우호협력조약이 북한의 被侵時에만 有效함을 주장한 (1993.4.3) 것으로 전해진다. 동맹조약의 수정과정은 위에서 보듯이 선언적 단계는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실질적 개정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더욱이 조약의 폐기는 조약 규정상 매5년 연장기한의 끝, 즉 1995년에나 가능한 것이다. 게다가 조약의 파기는 물론 새로운 문안의 체결도 일련의 헌법적 절차와 관련되어 있고, 합의를 도출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이에 러시아는 쿠나제 外務次官의 방북시 조약의 재구성 방법으로서는 쌍방간의 비망록교환 형식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향후 북·러 군사관계는 냉전시대의 동맹관계로부터 탈피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무기체계 및 군대편제가 구소련의 영향력하에 형성된 점과 더불어 국내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면 재래식 군사무기도 과감히 팔고 있는 옐친 정부의 특성상 무기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軍事交流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¹⁶³⁾

으나,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163) 1992년도 무기판매 수익금은 18억달러를 기록했고, 1993년에도 옐친 대통령의 무기수출 가속화 방침(1993.2.4)에 따라 100여개 국가에 총 38억달러 규모로 확대할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2. 展望

일반적으로 급박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국가들은 協力的 同盟關係을 형성하나,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상황이 변경되면 약소국은 協力的 同盟關係가 그대로 지속되기를 바라지만 강대국은 자원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保護的 同盟關係를 택하게 된다. 또한 동맹은 좀 더 오래 지속되면 대개 적으로부터 특정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됨으로 동맹관계는 끝나고 提携(alignment)關係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북한의 대중·러관계 전망은 국제환경차원과 국내상황차원의 정치·경제·군사적 요인변수들의 결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가지 시나리오로 유형화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悲觀的 시나리오로서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이 가열되는 한편, 국내적으로 보수·강경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경제개혁 및 사회주의 발전정책이 좌절될 경우(러시아의 경우 엘친의 개혁정책이 실패하고 사회주의에로의 反動이 초래될 경우),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이데올로기 중심적 協力的 同盟關係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둘째, 樂觀的 시나리오로서 냉전후기시대의 정착에 따라 안보상 군사적 위협이 감소하는 한편, 각 국가들의 행동지침의 토대가 맑스·레닌주의로부터 효율성과 합리성을 우선시하는 實用主義로 전환하며, 개혁·온건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경제난을 해결하는 데 있어 성공을 거둘 경우, 북한과 중국, 러시아관계는 保護的 同盟關係를 거쳐 實利中心的 提携(alignment)關係로 변화할 것이다.

또한 國際的·地域的 環境要因은 향후 북한의 대중·러관계에 공통적 영향을 미칠 것인 바, 먼저 그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國際的 要因중에서는 세계질서가 經濟的 實利에 의해 좌우됨에 따라 이데올로기 및 전략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북방삼각관계는 근본적 변화를 겪게 될 것이고,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전통적 북방삼각관계의 해체에 직면하여 對西方 開放政策을 심각히 고려케 할 것으로 예상된다.

地域的 要因중에서 중요한 변수인 中·러關係의 改善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¹⁶⁴⁾ 中·러관계의 지속적 개선에 따라 북한에 대한 中·러간의 牽引競爭關係는 더욱 완화될 것이며, 그 결과 중국은 冷戰時代에 비해 러시아와 북한을 크게 의식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관계에 있어 북한보다는 中國이 主導權을 장악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양국관계는 중국의 대한반도정책과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어 전개될 것이다. 단 中·러간의 관계개선이 북한에 대한 中·러간의 견인경쟁을 근본적으로 소멸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북한이 현실중시적 실용주의 정책을 대

164) 1990년 4월 이봉 총리의 모스크바 방문시 양국 지도층은 앞으로 이데올로기 문제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을 문제삼지 않고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상호보완관계와 호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1992년 12월 옐친 대통령의 북경 방문시 양국 지도층은 당면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 문화 등 실질관계의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은 물론 양국 국경지대의 군사력을 계속 축소해 나갈 것에 합의하였다.

내외적으로 추진할 경우 북한에 대한 중·러간의 상대적 견인경쟁을 유도해 국가이익을 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요컨대 향후 북한의 대중·러관계는 긴장완화의 脫冷戰時代에 중·러관계가 지속적으로 改善되는 상황 가운데 중·러간의 對北 牽引競爭의 相對的 緩和와 北韓의 現實適應的 對應政策 추구과정에 의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 北韓의 對中國關係

위에서 검토한 국제적·지역적 환경여건하에서 향후 북·중관계에 영향을 미칠 양자적 요인의 변화전망을 관계개선요인과 저해요인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에 따라 短期(金日成 生存期) 및 中·長期的(金日成 死後期) 양국관계를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다.

1) 短期的 展望: 協力的 同盟關係에서 保護的 同盟關係로의 漸進的 變化

政治的 要因에서 살펴볼 때, 정치이데올로기 친화력의 측면에서 중국의 '중국식 사회주의'와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거의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동맹관계의 지속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점차 약화될 전망이다. 정치체제 및 대내정책의 측면에서 중국은 혁명 1세대의 퇴진에 따른 신권력구조 형성과 개혁정책의 지속적 추진의 특징을 보이는 반면 북한은 혁명 1

세대의 지속과 폐쇄정책 지속의 특징을 보이는 바, 단기적으로 약간의 정책적 마찰이 예상된다. 대외정책의 측면에서 체제유지를 위해 중국이 필요한 북한의 입장과 체제발전을 위해 동북아의 안정이 필요한 중국의 입장이 맞물려 양국간의 정치·군사적 협력관계는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대한반도정책에서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보와 대내적 경제발전을 위한 기회 확보를 위해 대북한 邊方外交와 대남한 實利外交의 二重政策을 구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대중 전통적 친선관계의 지속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한·중 수교 이후 대중 신뢰감이 약화된 바, 양국관계는 과거와 같은 수준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북한이 미국과 수교를 위한 관계개선 차원의 접촉을 지속하고 있는 바, 향후 양국간 관계에 큰 영향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국지도자간의 친밀도 지속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鄧小平(89세)과 金日成(81세)의 생존기간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북·중간의 혈맹적 유대관계는 50여년 가까이 지속되어온 慣性에 따라 한·중수교에 따른 약간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유지될 것이나, 북한의 대중 혈맹관계 지속의도에 반하여 점차 내용이 없는 명분과 관념적 관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經濟的 要因에서 살펴볼 때, 사회주의 발전전략 측면에서 북한과 중국은 정치적 보수와 경제적 대외개방 추구 차원에서 유사하나, 북한은 대내 경제개혁 및 지방정부 권한강화를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차이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 발전전략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식 발전전략¹⁶⁵⁾의 차이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커질 것이며, 이에 따라 양국관계는 악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양국간 경제교류·협력 및 무역동향의 측면에서 북한은 대러시아 교역 惡化에 대응하여 대중교역의 擴大를 모색해 왔으나, 對舊蘇 聯貿易을 代替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고, 국제시장가격과 경화 결제에 의한 교역방식이 북·중교역에 도입됨에 따라 현수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사회주의발전전략이 개혁·개방지향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양국간 경제부문에서의 마찰은 점차 심화될 전망이다. 북·중간의 사회주의 우호가격에 의한 청산계정 처리방식의 교역방식은 점차 위축될 것인 바, 양국 경제관계는 이데올로기 위주의 施惠的 協力關係에서 실리위주의 互惠的 協力關係로 점차 전환될 전망이다.

軍事的 要因에서 살펴볼 때,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에 대해 중국은 전통적·이데올로기적 관계를 중시하는 차원에서 협상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제시하였으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분명한 반대를 표명하였는 바, 이는 양국 관계의 강력한 소원화 초래요인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전 참전경험이 있는 현중국군부의 고위직은 북한에 대한 심정적 지원이 대단한 바, 양국간 군인사교류는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현사회주

165) 중국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확립을 통해 2050년까지 중진경제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개혁·개방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 체제가 중국에 지속되는 북·중 동맹조약은 개정이나 폐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북·중간의 군사동맹관계는 과거 物質的 軍事支援 차원에서 精神的 軍事支援 차원의 우호관계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앞 항에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중국은 短期的으로 (즉 등소평 및 김일성의 사망이전까지는)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 한반도 및 주변환경의 최대 불안요인인 北韓의 核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 무기개발을 구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한·중수교 등에 대응한 체제유지 정책차원에서 대두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 냉전후기체제의 도래와 양국간 긴장축발요인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정치·경제·군사적 지원과 지지정책을 지속함으로써 社會主義 同盟關係의 強化를 대외적으로 더욱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으로서는 경제난과 식량난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필요불가결한 원유, 석탄 그리고 곡물 등의 수입물량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외적 고립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의 외교적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바, 중국의 實利中心의 대한반도정책에 대해 전적으로 반발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요컨대 중국은 短期的으로 韓半島의 安定과 平和維持라는 基調下에 북한에 대해 '邊方外交' 차원에서 정치·군사적 지원정책을 계속함으로써 對韓半島 影響力維持를 추구하는 한편, 남한에 대해 '實利外交' 차원에서 경제교류 및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對內經濟發

展을 도모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중·러의 대북 견인 경쟁을 다시 유도하는 한편, 대미접근도 강화하여 현재의 金日成 체제유지를 위해 경제·정치적 실리를 추구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북·중관계는 점차 과거의 ‘혈맹관계’ 또는 ‘순치관계’로 표현되는 絶對的·實質的 協力關係인 協力的 同盟關係에서 ‘우호관계’로 표현되는 相對的·象徴的 協力關係인 保護的 同盟關係로 변화될 것이다.

2) 中·長期的 展望: 保護的 同盟關係(軍事部門) 持續과 通常的 國家關係(政·經部門)로의 變化

政治的 要因에서 살펴볼 때,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실익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한과의 관계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보면서도, 북한과의 정치·군사적인 긴밀한 관계유지에 대한 필요성과 대만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때문에 김일성 사후에도 북한체제에 급격한 변동이 없는 한, 현재의 대한반도 정책을 급전환하기 쉽지 않은 바, 중기적으로는 남북한에 대한 等距離外交를 지속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한반도 대내외적으로 통일대세가 성숙되는 한편 김일성 사후 북한체제가 불안정하며 중국에도 등소평 사후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체제의 변화가 일어난 상황이 전개될 경우, 중국은 對韓國 偏向外交를 전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經濟的 要因에서 살펴보면, 북·중간에 국제시장가격을 반영한

경화결제거래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북한으로서는 더이상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중국 중앙정부보다 東北 3省의 地方政府와의 경제 교류 및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⁶⁶⁾

軍事的 要因에서 살펴보면,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 문제가 잘 해결될 경우 북한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이슈화하여 대중군사적 밀착을 도모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한반도 통일과정의 평화적 방법 도입을 위해 북한의 안보보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설 것이며, 그 결과 통일한국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中·長期的으로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심화됨으로써 북·중관계는 정치·경제측면에서 전통적 우호관계가 미약하게 잔존하는 가운데 通常的 國家關係로의 變化가 예상되나, 군사적 측면에서는 保護的 同盟關係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66) 공산화이후 中國政治史는 하나의 갈등이 종식되면 또 다른 갈등이 표출하는 형식으로 전개되었는 바, 紅(理念重視)과 專(專門技術重視), 保守와 改革, 그리고 최근에는 성장속도 등을 중심으로 中央과 地方間의 새로운 대립구조가 대두되고 있다. 「東亞日報」, 1993.7.13.

나. 北韓의 對러시아關係

기존 북·소관계는 이데올로기적 軍事同盟關係였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韓國政府의 對立을 전제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한·소수교와 소련의 해체로 상황은 바뀌었다.

러시아는 향후 대북한관계에 있어 핵무기 및 군사지원관계를 중단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정치·경제적 관계는 새롭게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정치면에 있어서는 脫이데올로기적 관계를, 경제면에 있어서는 平等의 原則과 相互利益의 原則下에 북한과 무역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러시아는 통일한국이 러시아에 우호적 국가로 된다면 한반도 통일에 반대하지 않으며, 그 이유는 통일한국이 동북아지역에서 러시아의 국가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실제에 있어 북한이 가까운 시일내에 근본적으로 변화되거나 붕괴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따라서 남북한의 평화적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 短期的 展望: 保護的 同盟關係의 瓦解와 經濟交流·協力の 回復

앞 장에서 살펴본 정치·경제·군사적 요인들을 종합해서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政治的인 면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더이상 政治的 同質性을 추구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북한을 냉전논리에 기초한 이데올로기적 동맹관계의 파트너로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체제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새헌법초안」에 따르면 “국가레벨에서는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내세울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공산주의를 유일한 국가이데올로기로 표방해왔던 구소련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또한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訪韓과 한·러 기본관계조약의 체결에 따른 한·러 유대강화는 북·러관계를 더욱 약화시킬 전망이다. 즉 러시아는 과거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대북관계에서 國家利益에 근거한 대북관계로의 전환을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옐친의 급진개혁에 대해 구공산세력에 뿌리를 둔 러시아 의회 보수파들이 격렬히 반대함에 따라 러시아의 친서방적 대외정책노선이 부분수정을 한 것을 볼 때, 러시아의 대북정책이 다소 온건하게 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북한이 대외적 고립의 탈피차원에서 적극 호응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된다.

經濟的인 면에서도 북한은 기존 대소동맹관계에 의한 원조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 -12% 경제성장율을 기록한 이래 구소련은 심각한 경제난과 재정위기에 빠져 있다.¹⁶⁷⁾ 따라서 러시아는 이러한 경제난 타결을 위해 체제개혁¹⁶⁸⁾과 시베리아

167) 러시아는 1993년에도 인플레이의 지속적 상승(월평균 20%), 루블화의 가치하락 및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능력 부재로 인해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경제난 타결의 일환으로 구소련은 1992년부터 대북무역에 있어 우호가격 철폐 및 경화결제를 북한과 합의하였고, 내부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를 가속적으로 도입하였다. 반면에 북한의 경제 및 무역구조는 1980년대를 통하여 대소의존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소련의 변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매우 큰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시베리아 개발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맺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경제난 타결과 시베리아 개발을 위해 동북아에 있어 과거와 같이 이데올로기에 집착한 북·러동맹 관계를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제적 측면에서 북·러관계는, 보·혁갈등, 경제난 악화 등 국내적 혼란상태로 인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쓸 여지가 없는 반면 한국과의 협회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때 疏遠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소련산 플랜트, 무기 등이 지난 40여년간 북한내에서 가동·이용되어 왔는 바, 북한은 지속적인 자재공급과 부품조달을 위해 구소련 공화국들과의 관계유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은 실리추구적 입장에서 러시아와는 별도로 CIS 공화국들과 개별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軍事的인 面에서는, 러시아의 대북 군사무기 지원감소에 따라 밀착관계의 지속은 어려울 전망이나, 제한적 유대관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양국 모두 日本의 防衛力 增強

168) 러시아는 國營企業의 민영화와 軍需産業의 民需化를 통해 국내 경제구조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個年計劃 (1991~1995) 추진에 따른 군국주의 무장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北方4島를 반환할 것을 주장하는 일본의 팽창정책에 대하여, 일본의 植民地 統治經驗을 한 북한은 잠재적 적성국가로서 PKO파견정책을 추진하는 일본의 군국주의적 팽창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대일 안보측면에 있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더욱이 북한 군부엘리트들은 소련에서의 군사교육 경험으로 인하여 소련군부에 호의를 갖고 있다. 이러한 양국 군부의 人的 密着은 국가적 밀착을 여전히 갖고 올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북·러관계는 현러시아 정부의 개혁정책에 불만을 가진 보수군부가 쿠데타를 다시 일으켜도, 그리고 구공산주의자들의 혁명이 다시 성공하더라도,¹⁶⁹⁾ 현존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과 냉전종식으로 인하여 세계질서가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과거처럼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에 근거한 軍事同盟的 密着關係 또는 協力的 同盟關係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참여한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회피해 가면서, 러시아의 對韓半島 影響力 持續的 確保 및 亞·太에의 進出 추구정책과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現實適應的 政策의 결과에 따른 相互 必要性에 의해 점차 이데올로기·군사적 영역중심의 同盟

169) 1993년 5월 1일 「노동절」 및 5월 9일 2차대전 승전일을 기념하여 친공산계 군중시위가 있었으나, 열친 정부를 전복시키기에는 절대 부족하였다.

的 國家關係에서 정치·경제적 영역중심의 正常的 國家關係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북·러관계는 「조·러조약」의 개정이 비록 지연되고 있으나 保護的 同盟關係로서 더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것이며, 개정조약에 의한 양국관계도 限時的·制限的 성격을 띠는 동시에 實效性도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 中·長期的 展望: 實利中心的 提携關係 形成

政治的 要因을 살펴볼 때, 러시아는 국내정치·경제적 안정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경우 국가이익인 동시에 제정러시아 이래의 목표가 되는 아·태진출 및 영향력 확보를 위해 對韓半島 等距離政策을 다시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 확보경쟁을 유발함으로써 러시아의 대북정책이 보다 우호적으로 전환토록 적극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經濟的 要因을 살펴볼 때, 김일성 사후 북한체제는 정통성 확보를 위하여 경제난을 타결해야 하는 바, 냉전시대에 형성된 양국 경제의 종속적 관계와 북한 생산설비의 절대다수가 구소련제품인 점을 감안하여 경제교류와 협력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동북아 다자간 경제협력이 점차 구체화되고 현실화됨에 따라 양국은 두만강지역과 극동지역개발에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상호의존적 경제협력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軍事的 要因을 살펴볼 때, 북한 군사시설 및 무기체제가 근본적

으로 소련에 의존해 있는 것이며, 과거 45년 이상 북한의 장령들이 소련식 군사교육을 받았는 바, 군사교류는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제반요인들을 고려해 볼 때, 북·러간에는 中·長期的으로 東北亞 多者間 安保·經濟協力體에의 공동참여와 양자간의 군사교류 및 무기구매를 중심으로 正常的 外交關係가 회복될 것이며, 나아가 양국 각각의 발전을 위해 실리중심의 提携關係를 만들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第 IV 章 關係變化가 北韓體制 및 南北韓 關係에 미칠 影響

북한은 향후 적어도 2~3년간 權力承繼·經濟難解決·對外的 孤立 克服이라는 3중과제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앞 장에서 살펴본 북한의 대중·러관계의 短期 및 中·長期的 변화가 북한의 3중과제 해결과 나아가 남북한관계 및 통일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北韓體制에 미칠 影響

가. 金日成·金正日 體制에 미칠 影響

한·소, 한·중수교 및 소련의 해체와 러시아의 등장 등 北方三角關係의 動搖와 東歐 社會主義 國家들의 民主化에 따른 開放壓力으로 인해 북한은 권력승계 추진문제에 있어 큰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김일성·김정일 체제는 적어도 정치적 측면에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은 이러한 상황들을 이용하여 住民統制를 통한 體制 結束力을 확보하는 한편, 김정일 후계체제의 制度化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북한은 ‘美帝國主義의 도발책동’인 TS훈련에 대응하기 위

하여 準戰時狀態를 선포할 수 밖에 없고, 국제원자력기구의 '불공정한 처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할 수 밖에 없었음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였다. 북한은 이와같은 대외문제의 위기조성을 통해 국민적 불만을 호도하는 한편, 주민 결속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1991년 12월 24일 김정일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이 되었고, 1992년 4월 24일 김일성이 '대원수'(great marshal)로 승진하는 한편, 김정일은 '元首'가 되었다. 또한 북한은 1992년 4월 헌법을 개정하여 국방위원회 위원장직과 주석직을 분리시킨 후, 1993년 4월 9일 김정일을 國防委員會 委員長職에 임명하였다. 이로써 김정일은 黨·政·軍 전반에 걸쳐 권력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3년 3월로 예정된 김정일 비서의 訪中이 접촉수준 및 방문지역에 대한 이견으로 말미암아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金日成 死後 中國이 김정일 체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예견케 하는 중요한 사실이 된다. 또한 1993년 2월초 中國 外交部會議에서 李鵬 總理가 북한과 더이상 새로운 정치·군사적 협의를 가지지 않을 것이며, 선진군사장비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남북 대화와 평화통일을 지지함을 천명한 것으로 알려진다.¹⁷⁰⁾ 이러한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을 살펴볼 때, 중국은 현재의 김일성·김정일 체제에 대해서는 기존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나, 김일성 死後의 김정일 체제에 대해서는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對話를 통한

170) 「鏡報」, 1993.3.5, 「國民日報」, 1993.3.5. 재인용.

平和統一 이외의 특별한 입장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脣齒關係’에 있는 한반도에서 북한이라는 社會主義 體制가 持續되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金正日 體制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적극적인 지지가 아닌 消極的 支持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은 자신의 체제가 변화되든, 북한체제가 변화되든간에 북한을 결코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북한이 중국의 東海 및 太平洋 진출의 橋頭堡인 동시에 親北韓勢力이 아직 中國에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¹⁷¹⁾ 또한 북한은 중국의 邊方地域으로서 자유화 열풍의 방패막이가 되는 동시에 대미·일 견제카드용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은 21세기 초강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현재 周邊環境의 安定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바, 북한체제의 몰락과 한반도 정세의 급변을 초래할 수 있는 개혁·개방으로 외교적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러시아의 경우, 정치적 분야에 있어 體制 및 政策의 相異性으로 말미암아 북한과 갈등 및 상호비난을 지속하고 있으나, 비정치적 분야에 있어서는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군사분야에 있어서도 北韓軍 將校들의 상당수가 과거 구소련에서 교육을 받았는 바, 러시아와 북한군간의 人的 紐帶를 토대로 양국이 비공식적 군사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 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러시아는 短期的으로 정치적 갈등, 경제적 협력모색, 군사

171) 예컨대 과거 한국전쟁에 참여한 중국군인 및 인민들,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는 조선족들을 들 수 있다.

적 동맹유지의 관계를 지속하는 한편, 한반도에서의 돌발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북한의 현독재체제에 대한 반감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현상유지 및 안정을 위해 김일성·김정일 체제에 대한 消極的 支援態度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中·長期的으로 한·러관계가 우호적으로 발전되는 반면 김일성 사후 김정일 체제가 경제난과 체제불안에 지속적으로 직면할 경우, 러시아는 韓國主導의 統一에 대하여 積極 支持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된다.¹⁷²⁾

요컨대 북·중관계의 弱化와 북·러관계의 惡化에 따라 김정일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는 냉전기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러 양국은 短期的으로 볼 때, 김일성·김정일 체제 및 김정일 후계체제의 붕괴를 유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전통적 친선관계를 고려할 것이며, 러시아는 북한체제의 몰락에 대한 대처능력의 실질적 한계를 고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中·長期的으로 볼 때, 중국은 김정일 체제에 대항하여 改革主義 性向의 親中國 政權이 북한에 등장할 경우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또한 左偏向 이데올로기적인 金正日 體制의 持續보다 개혁지향적인 김정일 以後體制의 등장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172) Gennady Chuftrin, "Russian Interests in Korean Security in the Post-cold War World," *Security and the Korean Peninsula in the 1990s* (Canberra: Australia Univ. Press, 1992), pp. 11~13.

나. 經濟難 解決에 미칠 影響

러시아와 중국은 東北亞 지역에 대한 影響力을 持續하기 위해 북한과의 정치외교적 관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의 대북한 정치적 관계는 이미 실질적으로 상당히 弱化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관계약화가 經濟的 關係弱化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북한은 그동안 산업기계, 설비 및 대외무역의 40% 이상을 소련에 의존해 왔던 바, 한·소수교 이후 양국간 무역의 대폭 감소와 소련의 대북한 경제협력 및 원조의 중단은 북한의 공장 가동율의 저하와 이에 따른 마이너스 경제성장 등 북한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입혔던 것이다. 이에 북한은 中國과의 교역 및 경제협력 강화를 모색하였으나, 중국 또한 4개 현대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인해 북한에게 制限的인 經濟協力 및 援助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러시아 및 중국의 대북한 경제관계는 당분간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러시아는 1992년 -1500% 경제성장 및 정치적 불안 등을 겪고 있는 바,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와 더이상 기존의 협력적 동맹관계에 근거하여 互惠的인 交易關係를 재형성하거나 경제협력을 재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 또한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한 경화결제로 거래방식을 점차 전환하고 있는 바, 외화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對中交易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러시아·동구권과의 교역관계 회복이 어렵고, 중국과의 교역이 정체

되고 있으며, 일본과의 경협이 지연되고 있는바, 向後 北韓 對外貿易의 전망은 어두운 것으로 평가되며, 북한의 경제난 타결 또한 쉽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북한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은폐된 改革·開放’ (hidden reform·openness)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은 러시아의 시장경제 및 자유민주주의 지향, 중국의 실리중심적 현실주의노선에 대응하여 制限的인 對外經濟 開放政策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部分的인 對外經濟開放과 制限的인 對內經濟改革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¹⁷³⁾ 예컨대 북한은 1991년 12월 나진·선봉 自由經濟貿易地帶를 설치한 이후, 기존의 合營法만으로는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¹⁷⁴⁾ 1992년 10월 외국인 투자법, 합작법 및 외국인기업법을 제정하였으며, 1993년 1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세금법, 외환관리법 및 자유경제지대법 등 3개

173) 북한은 體制維持와 經濟建設이라는 二重目標을 추구해야 하는바, 전면개방이나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아닌 특정지역(예컨대 나진·선봉, 남포 등)에 대한 중국식의 部分開放이나 기존 사회주의경제틀 속에 지극히 制限的인 시장경제원리의 접목 등의 수준에서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유일사상체제에 따른 김일성통치의 무오류성과 경직성 그리고 중국과 달리 중심이 짧은 점 등 북한의 체제 및 지리적 특성 등이 개혁·개방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174) 북한은 1980년대 초반부터 대외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조해 왔으나 큰 성과는 없었다. 이에 대외무역증대의 필요성을 정무원 결정으로 채택하였다. “대외무역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 『민주조선』, 1992.2.26.

의 법률을 정비하는 등 경제난 타결을 위한 制度的 準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나진·선봉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투자 유치 설명회 및 세미나를 국내는 물론 서방에 나가서까지 적극 개최하고 있다.¹⁷⁵⁾ 북한은 部分的 經濟開放方式을 취함으로써, 체제유지와 경제난 극복이라는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현재 중국에서 지방정부의 경제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여 東北3省 地方政府와의 貿易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한편 북한은 原油 供給源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북한내부에서의 油田開發을 외국과 협력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고,¹⁷⁶⁾ 둘째, 이란과 원유공급을 골자로 하는 經濟協力을 추진하고 있으며,¹⁷⁷⁾ 셋째, 南韓 종합상사들과 貿易을 추진하고 있다.¹⁷⁸⁾ 넷째, 북한은 서방권·아시아권 국가 가운데 이른바 ‘우호적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교역확대도 적극 모색하

175) 1993.1.28. 두만강유역 개발계획설명회 (핀란드), 1993.3.22. 북한 경제세미나 (독일 뒤셀도르프), 1993.5~6월 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 설명회 (오스트리아).

176) “북한, 산유국 가능성 크다,” 「시사저널」, 1993.7.1.

177) 1992년 12월 4~6일 이란에서 김달현 부총리와 토크안 국방부장관을 수석으로 하는 제4차 정부간 공동위원회에서 연간 100만톤의 원유를 북한에 공급하는 경제협력에 합의하였다. 이에 대한 대금지불은 북한이 개발한 스커드 미사일 공급으로 추정된다.

178) 북한은 삼성, 대우, 럭키금성, 현대 등 4대종합상사에 대하여 북한의 아연, 철강과 남한의 곡물, 석유의 물물교환을 제의하고 있다. 「朝鮮日報」, 1993.9.2.

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勞動人力의 제한, 수출의 문제, 國內去來의 제한, 社會間接施設의 부족, 內需市場 및 輸出市場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열악한 對外信用度 및 否定的 이미지 등으로 인해 서방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데 있어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더욱이 북한의 核査察問題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를 무시하고 북한과 경제협력을 추진할 경우 국제적 비난이 뒤따를 상황인 바, 서방기업들의 북한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對外信用度を 제고해야 하는 바, 핵사찰문제를 국제기구와 원만히 해결하고 동시에 대내적 개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전개해 온 논리인 '우리식 사회주의'와 모순을 초래할 것이며, 따라서 현실권층이 경제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현실적으로는 의문시되지만, 만약 북한이 중국에서와 같이 農業部門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유시장경제 요인을 도입함으로써 경제개혁을 실시할 수 있다면, 북한경제는 소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북한의 대중·러관계와 남북한관계는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단기적으로 북한의 경제난이 중국의 지원으로 인하여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국 북한은 對西方 關係改善 및 對南 經濟交流·協力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이 政策 및 體制變化 없이 자본과 기술을 서방으로부터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

려울 것이다. 이에 북한은 部分的 對外經濟開放과 制限的 對內經濟改革을 추구할 수 밖에 없으며, 賃加工 형태의 對南 經濟協力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의 極東地域開發에 노동력을 투입하고, 여러 부문에서 합영기업을 설립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구소련의 지원하에 북한에 건설되던 공장설비들의 완공과 가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자재 및 부속품 지원을 확보하며, 완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함으로써 교역을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한 정상적 거래관계로 만들어 나갈 경우, 북한은 최악의 경제적 파국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개발 의혹불식의 조치와 대내정치·경제개혁 및 대외신용도 제고의 조치를 先行하지 않고, 제한적인 대외경제 개발정책만을 추구할 때, 북한의 경제난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같이 북한이 경제난을 현상유지 차원에서 대처함으로써 短期的 生存을 지속할 경우, 중국의 4개 현대화정책의 성공에 따라 長期的으로 중국의 지원하에 중국식 경제발전 모델을 채택함으로써 경제난을 克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對外的 孤立 克服에 미칠 影響

북한은 그동안 냉전체제하에서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고 革命主義的 對外政策을 전개하여 왔으나, 이제 냉전후기시대로 변화된 새로운 국제질서속에서 보다 合理的·現實

的인 對外政策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북한과 중국간의 동맹관계는 단기적으로 宣稱의 차원에 있어서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나, 實際的 차원에 있어서는 漸進的 變化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조·러 우호조약의 개정 움직임과 관련하여 조·중 우호조약의 개정 필요성이 한국측에 의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궁지에 몰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현재 이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과거 假想 敵國으로 상정했던 한국과 수교하였기 때문에, 「朝·中 條約」에는 이제 공격적 의미는 상실되었고 단지 북한체제에 대한 방어적 의미만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과 러시아 관계 또한 이데올로기적 충돌,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조정국면이 현재와 같이 단기적으로 지속될 것인 바,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협력적 동맹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은 革命的 이데올로기 路線을 탈피하고 보다 合理的·實用主義的 路線을 지향해야 하는 바, 지난 1980년대 후반 이후 제한적으로 추구해오던 대외개방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북한은 체제유지·경제난 해결·대외고립 탈피 등 3중과제의 일괄적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對美·日 수교교섭 강화, 對中·러 동맹관계 지속, 對南 교류·협력 모색 등 3軌道政策(three track policy)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둘째, 이들 국가와의 협상에서 반대급부로 마땅히 줄 것이 없는 북한으로서의 核武器 開發과 地理的·

戰略的 位置를 카드화하여 對中·蘇 ‘牽引競爭’ 誘發外交를 발전시킨 對五國 ‘誘引’外交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급변하는 신국제질서에서의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회담을 통해 NPT 복귀 전제하에 김일성·김정일 체제에 대한 보장을 받아내는 데 우선적으로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향후 국제원자력기구와는 ‘특별사찰’ 명칭을 배제한 사실상의 특별사찰을, 남한과는 그 대상과 방법이 다소 완화된 제한적 상호사찰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같이 북한이 핵문제해결에 肯定的 태도를 취할 경우, 북·미관계는 상당정도 개선될 것이며, 남북한간에도 본격적인 경제교류의 실시 및 경제협력의 초보적 단계가 진행될 것이다. 이에 동북아에서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적 영향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일본도 신정부의 등장과 함께 戰後清算外交의 과제해결 차원에서 北·日修交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일본의 배상금 및 경제지원으로 외화부족 및 경제난 해결에 적극 임할 것이다. 또한 북한으로서는 대미·일 관계개선 및 수교를 통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한 접근강화를 촉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핵사찰을 계속 拒否하는 등 否定的 態度를 지속할 경우, 미국과 UN은 제재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따라 한반도에는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이다.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태도는 대외적 고립화와 경제난을 심화시킬 것이며, 나아가 東北亞地域에서 대규모로 추진중인 多者間 經濟協力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多者間 安保協力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어 동북아에서 戰爭을 촉발시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2. 南北韓 關係에 미칠 影響

가. 南北韓 平和共存의 制度化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대북 ‘邊方外交’와 대남 ‘實利外交’의 二重政策이 단기간내에 대폭 변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은 경제 건설을 위해 주변환경의 안정이 긴요함을 인식하는 한편, 북한의 전략적 지위와 전통적 유대관계를 고려하여 북한에게 제한적이나마 정치·경제적 支援을 지속할 것이다. 중국은 그 반대급부로 북한의 핵무기개발 포기와 改革·開放政策 추구를 유도할 것이며, 나아가 남북대화에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한국의 중국경제발전예의 기여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정치적 차원의 관계개선도 점진적으로 도모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은 南北韓間의 平和共存을 촉진시킬 것이다.

그러나 鄧小平이 사망할 경우 중국에는 제3세대 개혁파가 부상할 것인 바, 中·長期的으로 북·중관계는 소원하게 될 것인 반면에 한·중관계는 더욱 긴밀하게 될 것이다. 북·중관계의 疎遠化

는 남북한관계에 양면적 가능성을 갖고 있다.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감소는 북한의 대외유화적 태도 유인채널의 상실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관계의 경색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북한으로 하여금 대미·일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남북한관계의 개선에 기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변화하는 현실 가운데 韓國이 어떠한 태도로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을 전개하는가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전개되어 나갈 것이다.

한편 러시아의 경우, 현재 내적으로 保·革間의 심각한 정치적 갈등을 겪고 있는 동시에, 1500% 이상되는 심각한 인플레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열린 현정부의 존립조차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바, 한반도문제에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短期的으로는 남북한관계가 개선되고 긴장이 완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으나, 남북한이 통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러시아의 국력이 상당히 열세 국면에 있고, 이에 따라 대한반도 영향력도 현저하게 열세 국면에 처해 있기 때문에 통일과정에서 영향력 행사가 어려워지고, 그 결과 통일한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있어서도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국력이 어느정도 회복될 경우, 시베리아 및 極東地域의 開發과 東北亞 多者間 安保·經濟協力에의 참여 및 아·태로의 적극적 진출을 위해서는 한반도에 통일국가가 형성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中·長期的으로는 한반도 통일에 적극적 후원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南北統一에의 影響

중국은 비록 現實重視의 외교인 獨立自主外交路線을 지난 1980년대 초반부터 추진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한국관계도 점차 개선하였고, 냉전후기시대의 도래에 부응하여 修交까지 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가 지속되는 한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붕괴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短期的으로 북·중관계가 비록 약화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최소한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에서 사회주의 체제 붕괴가 있기 전까지는 이데올로기적·전통적 우호관계는 미약하나마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現狀維持的 대한반도 정책은 남북통일에 障礙要因이 될 것이다.

한편 북한으로서는 대중·러관계 惡化에 따른 3대혁명역량의 전반적 약화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의 생존시에는 '남조선혁명과 민족해방'에 기초한 대남전략과 통일방안을 포기하고 남북한간의 合意에 의한 統一의 길로 나오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정책이 근본적으로 주체사상에 근거한 북한의 체제유지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당분간 현 김일성·김정일 체제를 유지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인 바, 交叉承認(對美·對日修交) 및 韓國과의 實質的 經協을 통해 體制維持 및 '南北共存의 制度化'가 보장되는 때에 조심스럽게

합의 통일을 모색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김일성 사후 새로 등장하는 정권이 혁명과 이데올로기 노선을 버리고 보다 합리적이고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추구하게 될 경우, 남북한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보다 진지한 입장에서 대화와 접촉을 갖게 될 것이다.

요컨대 북한의 대중·러관계 弱化는 북한이 對南武裝革命 攻勢를 전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抑制要因은 되나, 북한이 남북한 合意統一에 적극적으로 나오게 하는 촉진요인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短期的으로 볼 때, 남북한관계는 改善될 가능성이 높으나, 남북통일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中·長期的으로 볼 때,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체제가 現實適應的 改革·開放路線을 지향하여 나가면 남북한간의 합의에 따라 段階的·漸進的 統一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종전의 이데올로기적 強硬路線을 지속한다면, 김일성 사후 북한체제의 붕괴에 따른 한국주도하의 吸收統一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크다.

第 V 章 結論: 韓國의 政策的 考慮事項

냉전체제의 몰락과 이에 따른 북방삼각관계의 동요는 우리 민족이 근대화의 과정에서 달성하지 못했던 역사적 사명인 ‘近代的 民族國家 建設’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21세기 전까지 우리가 이룩해야 할 남북한관계 개선 및 통일 전망에 대한 大戰略(grand strategy) 또는 大構想(grand design)을 수립하고, 이것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대중·러관계 변화에 대한 民族主體的 觀點의 對應政策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응정책 기본방향은 첫째, 新國際秩序에의 能動的 參與를 토대로 平和統一 環境造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 정책은 ‘對中·러 全方位外交’와 ‘對美 自主外交’ 및 ‘對亞·太 經濟·安保協力 外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라 대미 일변도 외교에서 탈피했으나, 지난 40여년간 냉전구도하에 기본적으로 對美外交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냉전후기시대에는 이에 부응하는 대외정책의 구도가 필요한 바, 대미관계를 축으로 하되, 일·중·러시아와는 ‘동북아 다자안보 및 경제협력 기구’ 형성의 차원에서 이데올로기를 넘어 경제실리를 추구하는 새로운 양자관계를 모색하는 자주외교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 통일외교원칙인 1988년 7·7宣言에 보다 충실하며, 신정부의 ‘3段階 3基調 統一政策’에 부응한 대북한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1980년대 후반에 와서 북한은 한국에 비해 경제적으로 크게 뒤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절대적 후원국이었던 소련의 해체 및 중국의 개혁·개방 심화에 따라 국제관계에서도 크게 고립되었는 바, 총체적 국력면에서 더이상 남한의 경쟁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¹⁷⁹⁾ 따라서 우리의 對北政策 方向은 북한내 개혁지향적 세력의 입지를 강화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인 바, 北韓의 自主的 體制發展에 대한 協力과 支援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원칙으로는 先和解 後應報戰略 또는 段階的 對應戰略을 채택하여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에서 對北韓政策에 대한 함의를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政治的 측면에서 볼 때, 첫째, 한국은 과거 냉전적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北韓의 自主的인 體制發展에 協力함으로써 統一以後 民族 統合에 대비해 나가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방삼각관계와 남방삼각관계의 대결적 구도에 대한 근본적 조정을 민족이익의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 바, 그 일환으로서 우리의 統一大綱에 근거하여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에 적극 협조하는 전향적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은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이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는 한편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 남북한 양당사자간의 내부문제로 인식하고 불개입원칙을 표명하고 있는 바, 한국으로서는 북한과의 직

179) 民族統一研究院,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pp. 621~64.

接對話 및 交流·協力을 持續的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經濟的 측면에서 볼 때, 첫째, 대만 및 일본의 대북 경제적 접근에 유의하면서¹⁸⁰⁾ 국제핵사찰 및 남북한 상호사찰을 段階的 條件化한 남북경제교류 및 협력강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한국과의 경쟁관계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대일경제 접근을 서두를 경우 북한경제의 對日 從屬化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南北經濟協力を 먼저 추진하거나, 또는 UNDP의 多者間 經濟協力方式을 통해 나진·선봉 경제특구 및 기타 지역의 대외개방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민족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국제핵사찰과 남북한 상호사찰의 완전시행때까지 남북경협의 진행을 소극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북한의 폐쇄적 유일체제 특성을 감안하여 북한이 진전하는 만큼 경제교류 및 협력을 위한 우리의 대응도 진전하는 先導的·段階的·漸進的 協力(step by step cooperation)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의 대북경제정책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북한기업 또한 살리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180) 대만은 부품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바, 자국내 노동력 부족과 부품제조가 임금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임금의 북한에 대거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經團連이 두만강개발에 참가·협력하기로 결정하였고, 신정부가 대북수교교섭의 재개를 모색하고 있는 바, 약 50억~80억달러 수준으로 예상되는 배상금의 지불을 노리는 일본기업들의 대북경협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조은호, “최근 중국·북한 경제관계 변화동향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p. 28.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남북통일시 치러야 할 統一費用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短期的으로는 남북경협기금의 규모 및 북한의 취약한 경제기반을 고려하여 남한기업의 북한에 대한 委託加工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中期的으로는 북한 에너지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중국 및 러시아로부터의 감소분 정도의 原油를 공급함으로써 남북경협의 協商手段化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部品工業分野의 대북한 소규모투자를 집중지원함으로써 남북경제의 상호보완적 협력을 유도한다. 그리고 長期的으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대기업의 基幹産業投資를 정부의 통일방안과 상호조정하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軍事的 측면에서 볼 때, 첫째, 북한은 군사동맹조약에 기초한 북방삼각관계의 해체에 따라 體制安保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바, 북한을 현재 논의중인 亞·太 安保協力機構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북한체제에 대한 한국의 보장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남북한 평화공존체제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냉전체제의 해체 흐름에 부응하는 새로운 대북안보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상대측의 領土에서 승리를 목표로 하는 '絶對安保' 개념에 근거한 政策에서 適正 軍事力을 유지하며 전향적으로 협조·지원하는 가운데 상호간의 共存을 모색하는 '相對的 共同安保' 개념에 근거한 政策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우리에게서는 안보측면에서 이중적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이데

올로기적인 북한과 더불어 화해·협력의 새시대를 열어 나가야 하는 과제이고, 다른 하나는 주변 4국의 군사력 증강 및 기술패권주의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과제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 북방삼각관계의 해체는 중·러의 대북한 군사적 통제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1995년을 '조국통일의 해'로 설정하고, 1993년까지 전쟁준비완성을 목표로 하는 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전쟁준비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한이 대남무력도발을 했을 때는 대체로 그 이전시기에 소련의 무기가 대량반입되었던 역사적 경험을 볼 때, 북한의 대남도발능력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합의서 내용대로 신의와 성실에 근거한 '對北 共同安保' 정책을 먼저 제안·실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그러나 우리의 의도와 달리 북한이 군사력 제1주의에 입각한 군비증강을 계속 시행할 경우, 우리로서는 양적 대응보다는 質的 對應이 필요한 바, 軍需와 民需에 동시 사용가능한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의 핵문제 해결은 가장 강력한 상호핵사찰 방식보다 相互信賴構築이 가능한 方式을 우선적으로 채택하여 段階的으로 強度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은 지난 50여년 가까이 철저한 적대적 관계로 지내온 바, 상호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초강경방식의 상호사찰은 타협과정의 시간적 지연과 더불어 더 큰 불신과 대결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핵의 평화적 이용 및 핵에너지 개발을 위한 협력을 북한에게 적극 제의·현실화해서 상호신뢰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동시에 북한의 핵무기개발의

혹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參考文獻〉

1. 單行本

國土統一院. 「北韓經濟統計集(1946~1985)」. 서울: 國土統一院, 1986.

金國振. 「北方三角關係와 蘇聯·베트남·中共間 三角關係의 比較研究」. 서울: 日海研究所, 1988.

「김일성 저작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나타리아 바자노바 저. 梁浚容 역. 「岐路에 선 北韓經濟」. 서울: 韓國經濟新聞社, 1992.

民族統一研究院.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朴斗福·金富起. 「最新中蘇關係論」. 서울: 경영문화원, 1991.

박태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余仁坤. 「러시아 聯邦의 對韓半島 政策」.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柳錫烈. 「蘇·北韓關係의 現況과 展望」. 서울: 外務部, 1990.

———. 「南北韓의 對中國關係 發展 展望」. 서울: 外交安保研究院,

1991.

全寅永·申正鉉·白鍾天. 「北方三角關係의 變化와 韓國의 政策方向」. 서울: 慶熙大 國際平和研究所, 1988.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83」.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3.

—————. 「조선중앙년감 1985」.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5.

—————. 「조선중앙년감 1988」.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8.

鄭鎮渭. 「北方三角關係」. 서울: 法文社, 1985.

統一院. 「北韓動向」, (1991.10).

———. 「北韓動向」, (1993.3).

———. 「北韓動向」, (1993.6).

Morgenthau, Hans J.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fifth ed., New York: Alfred A. Knopf, Inc., 1973.

Simmons, Robert R. *The Strained Alliance: Peking, Pyongyang, Moscow and the Politics of the Korean Civil War*. New York: The Free Press, 1975.

Viotti, Paul R. and Kauppi, Mark V.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New York: Macmillan, 1987.

2. 論 文

“江澤민의 ‘中國共產黨 第14次 全國代表大會 政治報告.’ 漢陽大 中蘇問題研究所. 「中蘇研究」 (1992 가을).

金光庸. “中·蘇의 對韓半島政策 比較研究.” 漢陽大 中蘇問題研究所. 「中蘇研究」 (1992 가을).

金成勳. “豆滿江 開發과 東北亞 經濟圈.” 「中國研究」 (1993 여름).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 사업총결보고(1956.4.23).” 國土統一院. 「朝鮮勞動黨大會 資料集 第1輯」. 서울: 國土統一院, 1988.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朝鮮勞動黨大會 資料集 第4輯」. 서울: 國土統一院, 1988.

김정일.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로동신문」, 1992.11.2

———.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로동신문」, 1992.2.4

———. “사회주의에 대한 희망은 허용될 수 없다.” 「근로자」 (1993.3)

———.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중앙방송」, 1991.5.27

———.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창건 47돛에 즈음하여 집필한 논문, 1992.10.10).” 「로동신문」, 1991.11.2.

“달러로 팔고 사는 외교관계.” 「로동신문」, 1990.10.5.

“대외무역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 「민주조선」, 1992.2.26.

陶炳蔚. “21세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협력: 중국의 시각.” 聯合通信. 「主要資料 全文集」, 제4호 (1992.9.15).

“鄧小平의 ‘南巡講和’(1992.1.18~2.21).” 漢陽大 中蘇問題研究所. 「中蘇研究」 (1992 봄).

朴春三. “北韓의 對外經濟協力.” 「北韓의 對外關係」. 서울: 大旺社, 1987.

“반제투쟁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완성을 위한 근본요구.” 「중앙방송」, 1992.9.27.

白鍾天. “군사: 일관된 전력우위 유지정책.” 「北韓 40년」. 서울: 乙酉文化社, 1989.

“북한, 산유국 가능성 크다.” 「시사저널」, 1993.7.1.

“신년사.” 「로동신문」, 1993.1.1.

楊勝咸. “러시아의 韓半島政策에 관한 政治經濟的 視覺.” 「國際政治論叢」, 제32집 2호.

연하청. “북한의 무역 및 대외 경제협력.” 「북한의 경제」. 서울: 을유문화사, 1990.

“우리식대로 살며 투쟁하는 것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고수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중앙방송」, 1992.8.25.

“李鵬의 中國 第8次 全人大 政府工作報告.” FBIS-CHI-93-062 (April 2, 1993).

李相禹. “金日成 主體思想과 北韓의 外交政策.” 이흥구·스칼라피

- 노 共編. 「北韓과 오늘의 世界」. 서울: 법문사, 1986.
- “제19차 소련공산당 대표자협의회 결의안 (1988.6).” 漢陽大 中蘇
問題研究所. 「中蘇研究」 제12권 3호(1988 가을).
- 조선중앙통신사 편. “국제정세에서 제기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72」. 평양: 조선중앙통
신사, 1972.
- 조은호. “최근 중국-북한 경제관계 변화동향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한무역진흥공사. (1993.2).
- 周恩來. “抗美援朝, 保衛和平.” 「周恩來選集」 下卷. 北京: 人民出版
社, 1984.
- 車英九. “北韓과 中蘇間의 軍事協力.” 이흥구·스갈라피노 共編.
「北韓과 오늘의 世界」. 서울: 법문사, 1986.
- 트카첸코. “러시아·北韓關係의 변화와 兩韓關係 영향.” 연합통신.
「主要資料 全文集」, 제 21호 (1993.6.1).
- 黃炳茂. “社會主義 改革과 北韓 對外政策의 變化(1).” 徐鎮英 編.
「社會主義 改革과 北韓」. 서울: 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1992.
- 許文寧. “1980年代 北韓의 對中·蘇政策 및 對南政策 研究.” (成均
館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0).
- . “北韓의 對南戰略 分析과 展望.” 「轉換期의 南北韓關係: 現
況과 展望」.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 . “北韓의 對日·美 交涉 現況과 修交展望.” 民族統一研究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 (1992).

- 호요방. “在中國共產黨第12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人民日報」, 1982.9.8.
- Clough, Ralph N. “한국과 중국간의 장래, 과연 낙관할 수 있는가.” 정재문 역.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 김영삼」. 서울: 오름, 1993.
- Fung, Edmund S. K. “중국의 최근 변화와 미래에 대한 전망.” 聯合通信. 「主要資料 全文集」, 제6호(1992.10.15).
- Hunter, Helen-Louise. “북한과 등거리외교의 신화.” 具永祿 외. 「南北韓 政治統合과 國際關係」. 서울: 慶南大學校 極東問題研究所, 1986.
- Hao, Jia and Qubing, Ehung. “China’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sian Survey*, Vol. 32, No. 12 (December 1992).
- Mikheev, Vasily. “Reforms of North Korean Economy: Requirements, Plans and Hope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5, No. 1 (Summer 1993).
- Rosen, Steve. “A Model of War and Alliance.” Friedman, Julian R. et al. eds., *Alliance in Internartional Politics* Boston: Allyn and Bacon, Inc., 1970.
- SadyKiewicz, Michael. “The Geostrategic Role of Korea in the Soviet Military Doctrine.” *Asian Perspective*, Vol. 7 (Spring/Summer 1983).
- Zhebin, Alexander Z. “Russian-North Korean Relations: The State and Prospects.” 漢陽大 中蘇問題研究所. 「中蘇研究」 (1992 가을).

3. 其他

「國民日報」.

「內外通信」.

「東亞日報」.

「世界日報」.

「朝鮮日報」.

「中央日報」.

「韓國經濟新聞」.

「한국일보」.

「라디오 프레스」.

「로동신문」.

「문화일보」.

「민주조선」.

「서울신문」.

「인민일보」.

「중앙방송」.

「文匯報」.

「北京放送」.

China Daily.

New York Times.

The Washington Times.

빈 면

附 錄

빈 면

〈표 1〉北韓의 對中·蘇關係 主要年表(1945~1993)

년도	월 일	북한·중국 관계	북한·소련 관계
1945	8.25		소련군 평양진주 사령부 설치
1946	3.17		김일성 訪蘇, 「장기경제문화협정」 체결
1947			
1948	9.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1949	3.17		김일성 소련방문, 朝·蘇간 「경제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
	10. 6	中·北韓 修交	
1950	10.25	중국 「人民支援軍」 한국전쟁 개입(57個師團 약 85만명)	
1951			
1952			
1953	4. 7. 8.12 9. 1 11.	秘密經濟協定(북한 戰後復舊 支援)체결 秘密軍事協定(북한 軍事力 支援)체결 經濟·文化協助 및 支援協定 체결	소련 10억루블 대북원조 결정통보 전후북구 3개년 계획수행위해 김일성 訪蘇
1954		중국, 북한 3개년계획 8조원 무상원조	
1955	12.28	중국의용군 6개사단 철수 개시	김일성 '주체' 표방
1956	3. 4.23 6.1~ 7.19		후르시초프 '평화공존정책' 거론 김일성, '다변외교' 모색 2차 5개년계획 수행위해 소련·동구 방문
1957	12.	科學技術協助協定 체결	

〈표 1〉 계속

1958	2.19	중국 人民支援軍 철수에 관한 中·北韓 공동성명 발표	
	9.27	중국의 對북한 중요물자공급에 관한 협정 및 借款提供 합의	
	10.26	韓國戰 參戰 「中國人民支援軍」 완전철수 공표	
1959	2.		소련공산당 21차대회 김일성 참석
	12.	航空運輸協定 체결	
	12.	文化協助協定 체결	
1960	9.23		호루시초프 북한의 聯邦提案과 주한의 國軍撤收 주장지지
	10.13	借款協定 조인 (북한의 7개년 경제계획 지원 차관)	
1961	6.29 ~7.10		「友好協助 및 互相協助 조약」 체결
	7.11	友好協助 및 互相 援助條約 체결	
1962	3. 8		북한黨中央委 제4기3차 전원회의 확대 회의 개최-호루시초프 평화공존론 비난 쿠바사건(미사일 위기)
	10.		
	11.	通商 및 航海條約 체결	
	11.23	북한, 中·印國境紛爭관련 中國支持 聲明	
	12.10 ~ 14		북한노동당 제4기 제5차회의 개최 '국방력강화정책', '4대군사노선' 결의
1963	8.15		북한, 소련의 수정주의노선 비판
1964	10.15		후르세초프 실각, 브레즈네프와 코시킨 집권
1965	2.		코시킨 수상 평양 방문
	5.31		군사원조협정 체결
1966	6.20		「1967~70년간 경제 및 기술협정」 체결
	8.12	북한, 中國을 敎條主義라고 비난	
	10. 5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 外交에서의 '自主' 선언	
	~ 12		

〈표 1〉 계속

1967	1.27 2. 2.13 ~3.4	북한, 중국 紅衛兵의 北韓 批判관련 非難聲明 발표 北京에 김일성 공격 대자보 등장	「67~70년간 경제(8천9백만달러) 및 군 사원조(1억7천8백만달러) 협정」 체결
1968	1.28 3. 4 4.15	중국, 북한의 푸에블로호拉北 支持聲明 통상협정 체결 중국, 북한의 EC-121기 擊墜를 讚揚	
1969	10. 8	金日成, 毛澤東에게 중국의 수소폭탄 실험성공 축전	
1970	4.24 10.17	 經濟援助 및 長期通商協定(71~76) 체결	소련군 총참모장 자하로프 북한방문 ① 북한의안보 및 지원문제 협의 ② 군사동맹조약 연장에 관해 합의
1971	9.	軍事 無償援助協定 조인	
1972	10. 3	北韓노동신문, 日·中修交(72.9)를 환영	
1973	2. 3.18 6. 6.26	中·北韓, 미군철수 및 UNCURK (UN 한국통일부흥위원회) 水門事業合作協定 조인 해체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 豆滿江 오염방지협정 조인 經濟技術協助協定 체결	코시킨 수상, 5대강령 지지성명
1974	5. 7. 5	중국부참모장 이달 북한 방문, 군사적 협조 및 통일방안 지지	소련, 북한의 5대강령 지지와 대미평화 협정체결 제안 지지성명
1975	9. 10. 9		소련, 중·소분쟁시 중립국가 반팍스주의적임 주장 북한, 소련에 간접적 불만표시

〈표 1〉 계속

1976	7. 5		브레즈네프, 朝·蘇우호조약체결 15주년 축전에서 전체 사회주의협동체의 협동 통일 강조
	9. 모택동 사망 10. 9		소련 노동당 창간 31주년에 즈음 북한의 6개년 계획 치하
1977	3.12 8. 7	長期貿易協定(77~81년) 체결 金日成, 鄧小平 復權관련 祝賀인사 전달	
1978	2.21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소련군 창설 60주 년 행사참석
	6.	中國·北韓, 鴨綠江-豆滿江 水門事業合作協定 조인	
	10.24	科學協力協定(79~80년) 조인	
	12.23	勞動新聞, 美·中國交正常化 合意환영	
1979	2.	중국·월남 전쟁	
	12.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1980	1.	中國·北韓간 國境河川運送協力協定 조인	
	10.10	北韓, 「자주·친선·평화」 대외정책 기본이념 채택	
	11.	保健協定 체결	
	11.11		노동신문, 朝·蘇관계가 “반제·자주의 기치하에 발전해 왔다”고 ‘지주성’강조
1981	7. 5		김일성, 「朝·蘇조약」 체결 20주년 브레 즈네프에게 축전-제국주의반대 공동투 쟁 촉구
1982	9. 1	중국공산당 12차대회 등소평·호요방· 조자양의 집단지도체제 확립	
	10.	中國, 北韓에 MIG機 40대 판매 보도	
	10.	長期貿易協定(82~86년) 체결	
1983	9.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10.	북한의 버마 암살폭파사건	
	10.19	平壤-北京간 北韓국제여객열차 운행개시	
1984	9.		북·소 정부간 경제 및 과학기술협 의정서 조인

〈표 1〉 계속

1985	1.17 2. 3. 8.13 ~20 10. 11.26 12.24 ~27	經濟援助協定 체결 鐵道協定 체결 文化交流協定 (85~86년) 체결 領事協定 조인	소련군사대표단 · 내무성대표단 대평양함 대대표단 방북, 기타 20여개 8·15 경 축사절단 방북 북한 · 소련 과학원간 1986~90년간 과학 협력사업계획서 조인 강성신총리 방소, 북 · 소간 경제 및 과 학기술협정 체결(원자력발전소 건설)
1986	1.19 3. 1 4. 4 7.4-8 7.10 9. 6 9. 8	保健 및 醫藥科學 協力協定 체결 압록강, 두만강 運航協力合意書 조인 북한, 중국 瀋陽에 總領事館 개설 長期貿易協定 (87~91년) 체결	세바르드나제외상 방북 소련 군사대표단 방북 1986~90년도 북 · 소협조계획서 조인
1987	7. 1	중국, 북한 淸津에 총영사관 개설	
1988	6. 6 6.29 12.19~24 12.22~24	북 · 중간 변경무역 확대추진	北韓, 소련제 최신예 MIG-29 도입 · 실전 배치 소련 군사대표단 방북 세바르드나제 외상 방북
1989	12. 1 3. 4 6. 7. 1	長期科學技術協力合意書 조인 北 · 蘇 · 中 · 蒙古, 鐵道輸送議定書조인(北京) 北韓, 中國 天安門事態(6.4)시 駐中 유학생 전원소환 조치 북한 勞動新聞, 중국 천안문사태 무력진압 지지	
1990	4.26 5.24 9.30 11. 11.25 11.27	商品交流에 관한 協定議定書조인(평양) 水門事業協助에 관한 協定조인(평양) 中, 두만강 통한 東海 出海航行權 回復 中 · 북한 공동투자로 渭原發電所 준공 중국, 對北韓 經濟援助 협정 체결(북경)	韓 · 蘇修交

〈표 1〉 계속

1991	<p>3.28 金日成綜合大學, 延邊大學 교육과학분야 협력협정 조인</p> <p>5. 中國,北韓과의 貿易去來를 硬貨決濟方式으로 전환통보</p> <p>12.23 北韓·中國·蘇聯·몽골 4개국, 鐵道協定체결(92.1.1발효)</p> <p>12.31</p>	蘇聯 解體
1992	<p>1.26 貿易協定 체결(硬貨決濟方式 적용 규정)</p> <p>2.29 保健 및 醫學科學協定 체결</p> <p>3. 2 북·CIS간 군사협력의정서 조인</p> <p>8.24 韓·中 修交</p> <p>11.18</p> <p>~20</p> <p>12.17</p> <p>~19</p>	<p>엘친 러시아 대통령 訪韓</p> <p>엘친 대통령 訪中</p>
1993	7.27 中國 黨·政 代表團(단장: 胡錦濤)訪北	

〈표 2〉北韓과 中國 首腦級 相互訪問 現況

일 자	북한 수뇌급 訪中		중국 수뇌급 訪北	
	방중인사	비 고	방북인사	비 고
58. 2.14~21			총리 周恩來	金日成의 統一提案지지
53.11.10~26	金日成	중국의 「抗微援朝運動」에 감사표시		
54. 9.23~ 10.23	金日成	經濟文化協調協定 및 中國 政權樹立 5周年 記念式		
58.11.21~28	金日成	周恩來방문(58.2)의 答訪		
58.12. 2~10	金日成	現代 修正主義와의 非妥 協的 鬭爭繼續을 確認		
59. 9.25~ 10. 3	金日成	중국 政權樹立 10周年 記念		
61. 7.10~15	金日成	中·朝 友好協助 및 相互 援助條約(7.11)		
63. 9.15~17			국가주석 劉少奇	
66. 5			총리 周恩來	
70. 4. 5~ 7			총리 周恩來	
73. 9. 8~ 11			黨부주석 李先念	9.9절 25周年 기념행사 參席
75. 4.18~26	金日成	越南戰 終熄後 親善訪問		
78. 5. 5~10			당주석 겸 총리 華國鋒	북한의 喻—合法性 인정
78. 9. 8~13			당 부주석 겸 부총리 鄧小平	9.9절 30周年 행사
81. 1.10~14	총리 李鍾玉			
81.12.20~24			총리 趙紫陽	
82. 4.26~30			총서기 胡耀邦, 鄧小平	非公式
82. 9.16~25	金日成	金正日 後繼問題		
83. 6. 1~12	金正日	胡耀邦과 會談		
84. 5. 4~11			총서기 胡耀邦	非公式
84. 8. 5~10	총리 姜成山			
84.11.26~28	金日成	大連 訪問(非公式)		

〈표 2〉 계속

85. 5. 4~ 6			총서기 胡耀邦	金日成 회담시 金正日 陪席
86.10. 3~ 6				86서울아시안게임 參加問題
87. 5.21~26	金日成			
87.11. 9~14	총리 李根模			
88. 9. 7~11				9.9절 40周年 행사
89. 4.24~29				
89.11. 5~ 7	金日成	非公式		
90. 3.14~16				
90. 9.11~13	金日成	瀋陽(非公式)		
90.11.23~28	총리 延亨默	北京, 天津, 심천 訪問		
91. 5. 3~ 6				
91.10. 4~13	金日成	北京, 天津, 심천 訪問		
92. 4.13~17			국가주석 楊尙昆	金日成80회生日 祝

〈표 3〉 북한과 소련 수뇌급 상호방문 현황

일 자	北韓 수뇌급 訪蘇		蘇聯 수뇌급 訪北	
	訪蘇인사	비 고	訪北인사	비 고
49. 2.22	金日成(수상)			
53. 9. 1	金日成			
56. 6. 1	金日成			
56.10.17	金日成			
57.11. 3	金日成			
59. 1.27	金日成			
59. 4. 3	최용건(인민회의 상임위원장)			
61. 5.30			코시긴(부수상)	
61. 6.29	金日成			
61.10.17	金日成			
65. 2.11			코시긴	
66. 3.29	최용건			
66. 5	金日成			
67. 3.			노비코프(부수상)	
67.10.17	최용건			
69. 5.14			포드고르니 (간부회의의장)	
70. 4.29	최용건			
71. 1. 1			노비코프	
72. 6.			노비코프	
73. 9.11			노비코프	
75. 1.			노비코프	
76. 2.24	박성철(총리)			
76. 3.	박성철			
77. 1.24	박성철			
77. 8.			아르히뎬브(부수상)	
79. 1.	박성철(부주석)			
80.10			키투세프(부수상)	
80.12.	박성철			
81. 2.21	이종옥(총리)			
81. 9. 6	이종옥			
82. 6.25	이종옥			
82.11.14	박성철			
83. 5.16			탈리진(부수상)	
84. 2.13	박성철			
84. 5.23	金日成(주석)			
85. 3.12	강성산(총리)			
85. 5. 7	박성철			
85. 8.13			알리에프(제1부수상)	
85.12.24	강성산			
86. 2.23	강성산			
87. 5.21	金日成			
87.11.	이근모(총리)			
88. 7. 6			체브리코프(KGB의장)	
88.12.22			세바르드나제(외무장관)	
			리가쥬프(부수상)	
90. 9. 2			세바르드나제	

〈표 4〉北韓의 主要 國別 貿易現況(1985~1991)

(단위: 億달러)

구분	總規模	러시아(舊蘇)	中國	日本	其他	
'85	總額	31.0	13.1(42.3%)	5.1(16.4%)	4.3(13.9%)	8.5(27.4%)
	輸入	17.9	8.1	2.4	2.5	4.9
	輸出	13.1	5.0	2.7	1.8	3.6
'86	總額	35.7	16.9(47.3%)	5.5(15.4%)	3.5(9.8%)	9.8(27.5%)
	輸入	20.6	10.6	2.6	1.8	5.6
	輸出	15.1	6.3	2.9	1.7	4.2
'87	總額	41.5	19.5(47.0%)	5.2(12.5%)	4.5(10.8%)	12.3(29.7%)
	輸入	25.0	12.7	2.8	2.1	7.4
	輸出	16.5	6.8	2.4	2.4	4.9
'88	總額	52.4	26.4(50.4%)	5.8(11.1%)	5.6(10.7%)	14.6(27.8%)
	輸入	32.1	17.5	3.5	2.4	8.7
	輸出	20.3	8.9	2.3	3.2	5.9
'89	總額	48.0	23.9(49.8%)	5.6(11.7%)	5.0(10.4%)	13.5(28.1%)
	輸入	28.9	15.0	3.8	2.0	8.1
	輸出	19.1	8.9	1.8	3.0	5.4
'90	總額	30.8	11.4(37.2%)	4.8(15.7%)	4.8(15.5%)	12.4(26.0%)
	輸入	18.2	7.0	3.6	1.8	7.5
	輸出	12.6	4.4	1.2	3.0	4.9
'91	總額	25.9	3.6(14.1%)	6.1(23.6%)	5.0(19.7%)	11.3(41.5%)
	輸入	16.4	1.9	5.2	2.2	6.8
	輸出	9.5	1.7	0.9	2.8	4.5
'92	總額	24.7	2.9(11.8%)	7.0(28.2%)	4.8(19.5%)	10.0(40.5%)
	輸入	15.5	2.2	5.4	2.2	5.7
	輸出	9.2	0.7	1.6	2.6	4.3

출처: KOTRA, 「1991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1992.11); ———, 「1992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1993.6); 「内外通信」주간판 848호, 1993.5.20.

주: 단, ()는 總額에 대한 占有率 표시임.

〈표 5〉 1985~1991 北韓의 對中 交易現況

(단위: 億달러)

區分	'85	'86	'87	'88	'89	'90	'91
總額	5.1	5.5 (7.8%)	5.2 (△5.5%)	5.8 (△11.5%)	5.6 (3.4%)	4.8 (△14.3%)	6.2 (29.2%)
輸出	2.7	2.9 (7.4%)	2.4 (△17.2%)	2.3 (△4.2%)	1.8 (△21.7%)	1.2 (△33.4%)	0.9 (25.0%)
輸入	2.4	2.6 (8.3%)	2.8 (7.7%)	3.5 (25.0%)	3.8 (8.6%)	3.6 △5.3%	5.3 (47.2%)
貿易 收支	0.3	0.3	△0.4	△1.2	△2.0	△2.4	△4.4

주: ()는 前年比 增減率 표시임.

〈표 6〉 1986~1990년 蘇聯의 對北支援事業

구분	사업명	비고
發電施設	○ 청진 火力發電所 확장 (’80년 착공, 계속사업) ○ 동평양 火力發電所 건설 ○ 남포 화력발전소 건설 ○ 순천 화력발전소 건설 ○ 안주 화력발전소 건설 ○ 원자력발전소 건설	○ ’89년 확장공사 着工, 추진중 ○ ’89년 2월 着工, 추진중 ○ ’89년 11월 着工 ○ ’88년 6월 操業 ○ 추진중 ○ 미착수
炭鑛 및 鑛山	○ 안주탄광 확장(계속사업) ○ 금야탄광 확장 ○ 무산광산 확장(계속사업)	○ 추진중 ○ 추진중 ○ 추진중
金屬 및 機械工場	○ 金策製鐵 2단계 확장 (계속사업) ○ 10월5일 자동차종합공장 확장(계속사업) ○ 희천 工作機械 확장	○ ’89년 2월 완료 ○ ’89년 완공 ○ 합작사업으로 추진중
建材 및 紡織工場	○ 단천 耐火物工場 확장 ○ 안주 紡織工場 확장	○ 미상 ○ 미상

〈표 7〉 北韓의 對中國 交易量 變動狀況(1950~1991)

(단위: 백만달러)

연도	수출	수입	밸런스	총 교역량
1950	2.7	3.8	-1.1	6.5
1954	3.2	79.1	-75.9	82.3
1955	3.4	72.6	-69.2	76.0
1957	19.5	36.5	-17.0	56.0
1960	52.9	67.4	-14.5	120.3
1965	88.2	97.0	-13.8	180.2
1966	88.4	114.7	-26.3	203.2
1969	44.9	92.1	-47.2	92.0
1970	54.2	60.8	-6.6	115.0
1975	197.8	284	-86.2	481.8
1980	303	374	71	677
1981	231	300	69	531
1982	304	281	-23	585
1983	254	273	19	527
1984	272	226	-46	498
1985	244	239	-5	483
1986	274	239	-35	514
1987	236	277	41	513
1988	233	345	112	578
1989	185	377	192	562
1990	124	358	234	482
1991	86	524	438	610

출처: 1950~1980년까지: Vneshneekonomitcheskiye svyazi KNR, *Foreign Economic Relations of the PRC*, (1982, 1983). 1980~1991년까지: 日本 貿易振興會資料.

〈표 8〉北韓의 對蘇聯 交易量 變動狀況(1946~1990)

(단위: 백만달러, 해당년도 가격기준)

연도	수출	수입	밸런스	총 교역량
1946	5.2	3.4	1.8	8.6
1947	9.1	12.4	-3.3	21.5
1948	22.8	25.6	-2.8	48.4
1949	57.0	82.6	-25.6	139.6
1950	38.7	62.4	-23.7	101.1
1951	26.8	16.4	-10.4	43.2
1952	26.1	35.6	-9.5	61.7
1953	23.1	29.5	-6.4	52.6
1954	25.0	16.5	-8.5	41.5
1955	36.7	39.7	-3.0	76.4
1956	46.1	48.4	-2.3	94.5
1957	56.3	54.0	2.3	110.3
1958	42.4	52.2	-9.8	94.6
1959	46.4	73.6	-27.2	120.0
1960	67.2	35.5	-31.7	102.7
1961	71.2	69.3	1.9	140.5
1962	79.4	72.6	6.8	152.0
1963	79.3	73.9	5.4	153.2
1964	72.6	74.6	-2.0	147.2
1965	79.5	80.8	-1.3	160.3
1966	83.1	77.0	6.1	160.1
1967	97.2	99.3	-2.1	196.5
1968	108.8	155.0	-46.2	263.8
1969	113.9	181.4	-67.5	295.3

〈표 8〉 계속

1970	122.3	207.0	-84.7	329.3
1971	122.2	330.1	-207.9	452.3
1972	128.4	251.6	-123.2	380.0
1973	133.3	224.0	-90.7	357.3
1974	148.9	194.3	-45.4	343.2
1975	151.4	186.8	-35.4	338.2
1976	118.7	181.8	-63.1	300.5
1977	164.0	164.7	-0.7	328.7
1978	201.6	176.5	25.1	378.1
1979	256.4	235.4	21.0	491.8
1980	284.2	287.9	-3.7	572.1
1981	250.3	278.9	-28.6	529.2
1982	362.5	318.5	44	681.0
1983	325.0	262.4	62.6	587.4
1984	365.6	347.2	18.4	712.8
1985	402.8	648.4	-245.6	1,051.2
1986	450.7	757.2	-306.5	1,207.9
1987	431.9	800.2	-368.3	1,232.1
1988	539.5	1,062.2	-522.7	1,601.7
1989	561.4	936.3	-374.9	1,497.7
1990	490.0	850.0	-360.0	1,340.0

출처: Vneshnyaya trgovlya SSSR, Statisticheskiye sborniki za sootvetstvuyushchiye gody (USSR Foreign Trade, Statistical for the Corresponding Year).

〈표 9〉 蘇聯·中國의 對北韓 軍事援助

(단위: 백만달러)

국가 년도	소련	중국
1954~71	1,177	79
1972	122	44
1973	103	156
1974	50	121
1975	49	56
1976	38	15
1977	72	14
1978	7	4
1979	미상	36
1980	15	23
계	1,633	548

출처: 北韓研究所, 「北韓總覽」(서울: 北韓研究所, 1983), p. 1449.

〈표 10〉 中國의 對北韓 軍援 實績

(단위: 백만달러)

년도	내 용	금 액
50~	戰車 75대, 各種砲 516문, 砲艦 8척, AN-2機 52대,	110.3
71	各種 레이더 47대, 戰車 50대	
72	戰車 100대, 裝甲車 30대, 水陸兩用車 30대, MIG-19機 42대	118.3
73	戰車 100대, 裝甲車 35대, 水陸양用車 40대, MIG-19機 54대, R급 潛水艦 2척	227.7
74	戰車 175대, 裝甲車 75대, 水陸양用車 80대, R급 潛水艦 2척	175.6
75	戰車 150대, MIG-19機 20대	162.8
76	潛水艦 4, 레이더 12대	13.7
77	MIG-19機 24대	40.6
78	MIG-19機 32대, 驅潛艦 2척 등	58.8
79	MIG-19機 16대	
80	AN-2機 22대, YAK-18機 24대	8.0
81	AN-2機 15대	2.3
82	(MIG-21機 공장설비), 유도탄艇 4척, MIG-21機 40대, YAK-18機 24대	146.2
83	(MIG-21機 공장설비), YAK-18機 6대, 高射砲 60문, 空對空미사일 400발, 레이더(BIGMESH) 5대, 地對艦미사일(SILK WORM) 24基 및 운반차량	12.4
84	水陸兩用車 40대(MIG-21機 공장설비), 砲彈 1만 700발	15.5
85	電波妨害裝備(電子對應體制) 4대,(MIG-21機 공장설비)	20.0
86	남포 레이더 생산설비(MIG-21機 공장설비)	20.0
87	남포 레이더 생산설비	10.0
88	남포 레이더 생산설비	10.0

〈표 11〉 蘇聯의 對北韓 武器援助 現況

연도	무 기 명	수 량
1981	Frog-5/-7 지대공미사일	15
1982	MIG-21 전투기	40
	MI-4 헬기	20
1983	IL-62 수송기	1
	Osa-1급 고속공격정	2
1984	SA-2 지대공미사일	550
1985	MIG-23 전투기	50
	SA-3/GOA 지대공미사일	30
1986	SU-7 전투기	10
	MI-24 전투기 공격형 헬기	50
	SA-5/GAMMON 지대공미사일	72
1987	SCUD-B 지대지미사일	15
1988	SU-25	10
	MI-24 공격형 헬기	30
1989	SU-25	10
	AA-7 'APEX' 공대공미사일	

출처: IISS, *Military Balance*, 1980~1981, 1981~1982, 1982~83, 1983~1984, 1984~1985, 1985~1986, 1986~1987, 1987~1988, 1988~1989, 1989~1990, 1990~1991, 1991~1992; DIA, *North Korea: The Foundations for Military Strength* (1991.11).

〈표 12〉 北韓의 對中·蘇 武器購入費用

(단위: 백만달러)

	1973~1977	1975~1979	1979~1983	1983~1987
소련	310(40.8)	280(48.7)	210(25.0)	1200(83.3)
중국	360(47.4)	170(29.6)	230(27.4)	10(0.7)
총계	760(100)	575(100)	840(100)	1440(100)

출처: U. 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Washington, D. C.: ACDC, 1979), p. 156; (ACDC, 1982), p. 128; (ACDC, 1985), p. 132; (ACDC, 1989), p. 112.

〈문 건〉

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62」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2), pp. 161~6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에 립각하여 또한 국가 주권과 령토 완정에 대한 호상 존중, 호상 불가침, 내정에 대한 호상 불가침, 평등과 호혜, 호상원조 및 지지의 기초 위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형제적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관계를 가일층 강화 발전시키며 량국 인민의 안전을 공동으로 보장하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유지 공고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또한 량국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 관계의 강화발전은 량국 인민의 근본 리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또한 세계 각국 인민의 리익에 부합된다고 확신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본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김 일성을;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총리 주 은래를 각각 자기의 전권대표로 임명하였다.

쌍방 전권대표는 전권 위임장이 정확하는는 것을 호상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조항들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제1조

체약 쌍방은 아세아 및 세계의 평화와 각국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계속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제2조

체약 쌍방은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제3조

체약 쌍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제4조

체약 쌍방은 양국의 공동 이익과 관련되는 일체 중요한 국제 문제

들에 대하여 계속 협의한다.

제5조

체약 쌍방은 주권에 대한 호상존중, 내정에 대한 호상 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 및 친선 협조의 정신에 계속 립각하여 량국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서 호상 가능한 모든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며 량국의 경제, 문화 및 과학기술적 협조를 계속 공고히 하며 발전시킨다.

제6조

체약 쌍방은 조선의 통일이 반드시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기초 위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해결이 곧 조선 인민의 민족적 리익과 극동에서의 평화 유지에 부합된다고 인정한다.

제7조

본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비준서는 평양에서 교환된다.

본 조약은 소정 또는 폐기할 데 대한 쌍방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계속 효력을 가진다.

본 조약은 1961년 7월 11일 북경에서 조인되었으며 조선문과 중국문으로 각각 2통씩 작성된 이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전권 대표 김 일성

중화인민공화국

전권대표 주 은래

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62」, pp. 157~58.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최고 쏘베트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적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쏘베트련맹간의 친선관계를 강화 발전시킬 것을 지향하면서,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립각하여 극동과 전 세계에서 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 공고화를 촉진시킬 것을 희망하면서,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련합으로부터 체약 일방에 대한 무력 침공이 감행되는 경우에 원조와 지지를 호상 제공할 결의에 충만되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쏘베트련맹간의 친선, 선린, 협조의 강화가 량국 인민들의 사활적 리익에 부합되며 그들의 경제, 문화의 금후 발전을 가장 훌륭하게 촉진시키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목적으로 본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선민주주

의 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을;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최고 쏘베트 상임위원회는 쏘련 내각 수상 니키타 쉘레게예비치 흐루쇼브를 각각 자기의 전권 대표로 임명하였다.

량 전권 대표는 소정의 형식과 완전한 절차를 갖춘 자기의 전권 위임장을 교환한 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체약 쌍방은 그들이 앞으로도 극동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국제적 활동에 참가할 것이며 이 고귀한 과업의 수행에 기여할 것을 성명한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제2조

체약 각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연합이나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을데 대한 의무를 진다.

제3조

체약 쌍방은 평화와 전반적 안전의 공고화를 촉진시킬 것을 념원

하면서 양국의 리해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중요한 국제 문제들에 대하여 호상 협의한다.

제4조

체약 쌍방은 평등과 국가 주권의 호상 존중, 령토 완정, 호상 내정 불간섭의 원칙들에 립각하여 친선과 협조의 정신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쏘베트 사회주의공화국 련맹 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련계를 강화 발전시키며, 경제 및 문화 분야에서 가능한 모든 원조를 호상 제공하며 필요한 협조를 실현할 데 대한 의무를 진다.

제5조

체약 쌍방은 조선의 통일이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기초 위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해결이 조선 인민의 민족적 리익과 극동에서의 평화유지에 부합된다고 인정한다.

제6조

조약은 평양시에서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약은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체약 일방이 기한 만료 1년전에 조약을 폐기할 데 대한 희망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조약은 다음 5년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지며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앞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본 조약은 1961년 7월 6일 모스크바시에서 조선어와 로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이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 일성

소베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맹 최고 쏘베트 상임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쏘베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맹 내각수상 엔·에스·흐르쑤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쏘베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맹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성명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소베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맹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은 극동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사회주의적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조쏘 량국 인민들 간의 불패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선량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이 력사적 조약은 조선인민의 민족적 이익에 완전히 부합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소베

트 사회주의공화국 련맹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기초 위에서 조선이 통일되면 통일 이전에 남북조선이 각각 체결한 일체 군사-정치적 조약과 협정들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데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성명한다.

1961년 7월 6일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
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
北亞秩序 豫測(Ⅰ)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
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
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
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Ⅱ)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
亞秩序 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關係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綜合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 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
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年例情勢報告書〉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 1992~1993

〈論 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資 料〉

92-01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特殊資料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關係

研究報告書 93-10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오름시스템(주) 전화 : 273-7011

印刷日 1993년 10월 일

發行日 1993년 10월 일
